

고령화 시대 여성의 삶과 재정정책

일시 : 2010. 9. 8(수) 15:30~18:30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ECC B321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주관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고령화시대 여성의 삶과 재정정책

일시 2010년 9월 8일(수) 15:30-18:30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ECC B321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주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문의 02) 3156-7168

모시는 글

『국가재정법』에 의해 2009년 『2010년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된 이래 성인지 예산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만 성인지 예산 제도가 궁극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 숫자 뒤에 있는 젠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는 다부처 재정사업, 세입예산, 지방정부 예산 등 다양한 범주의 예산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5차례의 포럼을 통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로 고령화시대 여성의 삶과 관련되는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과 “사회적 재진출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성인지 예산 포럼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조원을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15:30 ~ 15:40 개 회

사회: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40 ~ 16:20 발 표 1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16:20 ~ 17:00 발 표 2 “출산 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 지원을 위한 성인지적 세제 개선방안”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

17:00 ~ 18:00 지정토론 최현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백은영 (경희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과 교수)
오준석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은미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18:00 ~ 18:30 종합토론 및 폐회

목 차

□ 발표 1 :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

발 표: 주소현(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1

토 론: 최현자(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121

백은영(경희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과 교수) 123

□ 발표 2 : 출산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 지원을 위한 성인지적 세제 개선방안

발 표: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 125

토 론: 오준석(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17

이은미(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21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

연구책임자 :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공동연구원 : 정순희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최혜경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 신민경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목 차

요약	5
제 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1. 연구 필요성	9
2. 연구의 목적	12
제 2장. 여성의 노후 소득 관련 연구	13
1. 우리나라 여성의 노후 생활	13
2. 여성의 노후 준비	24
제 3장. 해외의 노후소득 관련 제도의 성인지적 고찰	27
1.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연금제도 개요	27
2. 해외 연금 개혁의 시사점	32
제 4장.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분석	41
1. 국민연금제도 현황	41
2.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	43
3. 국민연금 보험료	50
4.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52
5.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	61
제 5장. 은퇴저축 장려를 위한 세제혜택에 관한 성인지 분석	77
1. 은퇴저축 장려를 위한 제도 및 세제혜택 개요	77
2. 성인지적 관점에서 세제 혜택에 관한 분석	81
3. 한계세율 차이를 통해서 본 남성과 여성의 세제혜택 차이	95
4.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고려한 세제혜택 방안 제시	97
5. 세제개편에 따른 영향의 성인지 분석	102
제 6장. 결론 및 요약	106
참고문헌	111

요약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방안을 살펴보는 연구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와 연금저축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고찰하고 성인지적 (gender responsive) 관점에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짧아진 근속연수, 당겨진 은퇴연령 및 조기퇴직의 증가 등 고용패턴의 변화는 경제활동기간을 단축시키며 그에 따라 노후의 생활비 재원이 되는 소득을 충분히 저축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교육수준과 취업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시장의 여건, 직업의 특성상 퇴직연금 등 기업이 보조하는 퇴직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및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아직도 여성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저축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순재, 2007). 이러한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노후문제는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인문제는 거시적인 인구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그에 따른 경제·정책·사회·문화적인 다양한 요인들이 얹혀 있어서 개인적 혹은 가족단위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계선자, 1988). 따라서 정책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현상의 분석과 그에 따른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지적 정책평가를 통해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제도와 은퇴저축을 위한 연금저축 세제혜택을 분석하여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 여성이 당면한 노후대비 저축의 미비와 장수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 평가를 통한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와 은퇴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세제지원 등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연금제도를 분석하고,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을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였고, 제 2장에서는 여성의 노후소득과 관련한 연구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여성의 노후 생활 및 노후 빈곤에 관한 현황과 기존의 연구를 고찰하였다. 제 3장에서는 해외의 연금제도를 고찰하고 성인지적인 관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우리나라 연금제도와 차이점 등을 살펴보았다. 제 4장에서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여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적격성 측면에서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 5장에서는 연금저축

에 대한 세제혜택을 분석하여 소득공제 혜택이 여성의 노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 6장은 결론을 제시하고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였다.

여성은 경제활동 참가여부 및 형태가 남성에 비해 취약하고, 상당수의 여성이 남성이 가장의 피부양자로서 배우자의 소득 및 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이나 배우자사망과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면 심각한 경제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남성보다 긴 여성의 평균수명이나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을 고려해 본다면 여성 노인의 빈곤 가능성은 높아진다. 실제로 한국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경제활동 연령에 있는 여성의 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과 연관되어 있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층 증가 이유로 여성의 노후준비나 은퇴계획에 있어서 실행 부족 또한 지적되고 있다. 남성가구주의 경우 자녀의 교육 및 양육, 혼인비용 지출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남성 위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며, 여성가구주의 경우는 동일한 이유로 자신의 노후준비 마저도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후를 위한 준비에는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후에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정책에 성인지적 특성이 반영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여성 노인의 경우 남성에 비해 65세 이후의 노후소득 중에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의 비중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와 연금저축장려를 위한 세제혜택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제언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국민연금 제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가입의 적격성 측면에서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금저축 세제혜택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의 하나로 노후 소득재원의 3층보장체계에서 1층을 담당하고 있는 기본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제도에는 법적, 제도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연금의 사각지대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의 수급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제도 내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노후가 길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에게 국민연금은 중요한 노후 소득 재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가입을 성별로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20~60세 사이의 남성의 45.8%가 가입되어 있는 반면, 여성의 25.8%만이 가입되어 있는 형편이다. 특히,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는 2009년 4월 기준으로 4,864,576명(우해봉, 2010) 참조로 계산)이며 무소득 배우자가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인 임의가입자 수는 2009년 12월 기준으로 27,253명에 지나지 않아서 임의가입자가 모두 전업주부라고 가정하더라도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전업주부의 국민연금에 가입률은 최대 0.6%에 그치고

있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연금 갖기 캠페인을 시작하여 임의가입자가 2010년 4월 현재 44,25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 수치를 4,864,576명과 비교해 보더라도 가입률은 0.9%에 그쳐서 채 1%도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후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이고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여성이 전체의 80%이상이라는 기존연구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여성의 노후 소득 안정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임의가입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평균 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저소득층에게는 다양한 수준에서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업주부 임의가입 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안을 제언한다.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연금제도의 성격상 가입기간이 길어야 하며 수혜기간 또한 길어야 순연금 효과가 나타나고, 연금의 중복 급여 발생 시 조정이 생겨서 연금보험료를 내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손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수혜 받는 기간이 길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상태가 연금가입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평균적으로 연금가입으로 인한 혜택이 중복급여의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손해 보다는 크며 그러한 혜택은 노후소득안정화가 시급한 저소득층 일수록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의 가입소득월액을 기준연도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월액이상으로 정하여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노후 소득 안정 특히 전업주부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하여 현재 임의가입의 경우 기준연도의 지역가입자 중위수 평균소득월액 이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여, 소득수준이 평균 이하인 가계의 전업주부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평균소득월액 이하라도 자유롭게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된다면 2009년 기준 중위수 소득월액의 50% 수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소득대체율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회보험의 성격상 남편의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에 전업주부의 추가가입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증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3층 보장 중 1층의 역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전업주부의 임의가입 확산은 여성의 노후소득안정화에 기여하여 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기금을 증가시켜서 국민연금 재정위험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소득재원 마련을 위한 연금저축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근로기간 중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노후기간은 상대적으로 긴 여성에게 소득공제 금액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행 노후를 위한 3층 보장에서 개인연금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지만 여성

의 가입률이 낮고 여성에게 돌아가는 소득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 여성이 노후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은 세제적격개인연금상품에 한하여 납입금액 전액을 연간 300만원한도(퇴직연금 본인 부담금과 합하여)로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으나 개인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가계는 약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2010년 8월 24일 기준) 세법개정안의 발표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개인부담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늘여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성인지적인 내용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수명이 길고 일생에 걸친 경제활동 패턴이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노후소득재원 마련을 위한 개인적인 저축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크기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노후생활이 평균적으로 긴 여성은 남성의 80% 수준의 연금을 수령해야 사망 시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노후소득재원을 위한 개인적인 저축 활성화를 위해 여성의 연금저축소득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금수령액의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여성의 연금저축 추가소득공제액을 제시하였으며 최근의 세법개정안을 기준 (400만원 공제)으로 한 여성 추가 소득공제금액은 은퇴이전 이자율과 은퇴이후 이자율을 모두 4%라고 가정했을 때 85만원, 은퇴이전 이자율과 은퇴이후 이자율을 모두 6%라고 가정했을 때 73만원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은 여성의 개인연금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효과적인 유인의 하나는 소득공제이며 실제 많은 수의 소비자들이 행하고 있는 연금저축에 대한 저축액도 소득공제한도선까지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현실은 최근에 마련된 세법개정안에서 소득공제한도를 늘려서 저축을 증진시키려는 의도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추가소득공제는 여성의 노후 소득대비 저축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인 자본의 형성과 미래의 노후부양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분석의 결과는 시장 상황이 나빠질수록 평균수명이 긴 여성들에게 남성에 비해 더욱 치명적인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여성의 노후소득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소득공제 추가 혜택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제 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1) 사회변화에 따른 노인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뿐 아니라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 및 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노동 패턴의 변화 등을 겪으며 그에 따른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0~14세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10년 현재 17.2%에서 2030년에는 12.4%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현재 11.0%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14.4%, 2026년에는 20.0%로 전망되어 조만간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부양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공적부조 및 사회서비스가 부양하는 노인인구와 노동의 주축이 되는 생산인구 비율의 불균형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대비책을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를 살펴보면, 부부와 자녀 그리고 양친으로 이루어진 3세대 이상의 가구는 전체 가족의 6.9% (2005년 기준)로 20여 년 전인 1985년과 비교하면 약 8%포인트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참조). 향후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는 2세대 가족과 3세대 가족이 줄어들고 1세대 가족과 비친족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한자녀가족의 증가추세 (<표 1-2> 참조)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와 역할 등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핵가족화 현상은 전통적 효의 윤리를 변화시켜왔으며 급속한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에 따른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는 노인을 가정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밝혀져 왔다 (계선자, 1988).

<표 1-1> 우리나라 가족구조의 변화

(단위 : 가구 수, %)

	계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	비친족 가구	1인 가구	핵가족
1985	9,571,361 (100)	195,529 (9.6)	6,412,196 (67)	1,422,830 (14.9)	159,865 (1.7)	660,941 (6.9)	6,586,227 (68.8)
2005	15,887,128 (100)	2,574,717 (16.2)	8,807,326 (55.4)	1,108,464 (6.9)	225,946 (1.4)	3,170,675 (19.9)	10,330,684 (65.0)
2025	19,593,767 (100)	4,103,390 (21)	9,667,061 (49)	1,227,663 (6)	4,421,560 (23)	174,093 (1)	

주. 1세대가구는 부부, 부부+기타친인척 등 동일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이고, 2세대가구는 부부+자녀, 부부+부모, 조부모+손자녀 등 2개의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이며, 3세대가구는 부부+자녀+양친 등 3개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출처: 통계청 (2007). 장래가구추계

<표 1-2> 우리나라 가계의 자녀비율의 변화

(단위:%)

구 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비 율	45.3	41.6	13.2	46.6	40.4	12.9	49.0	38.0	13.0	51.2	36.5	12.3

출처: 통계청 (2009). 한국인의 사회지표

짧아진 근속연수, 당겨진 은퇴연령 및 조기퇴직의 증가 등 고용패턴의 변화는 경제활동기간을 단축시키며 그에 따라 노후의 생활비 재원이 되는 소득을 충분히 저축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교육수준과 취업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시장의 여건, 직업의 특성상 퇴직연금 등 기업이 보조하는 퇴직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및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아직도 여성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저축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순재, 2007). 이러한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노후문제는 성인지 (gender responsive) 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인문제는 거시적인 인구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그에 따른 경제·정책·사회·문화적인 다양한 요인들이 얹혀 있어서 개인적 혹은 가족단위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계선자, 1988). 따라서 정책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현상의 분석과 그에 따른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2) 노후에 대한 남녀의 차이

앞서 인구고령화, 사회문화의 변화, 노동현상의 변화를 통해 노인문제 문제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노인문제를 성인지적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 통계청의 생명표에 의하면 65세 남성의 평균 기대여명은 16.6년이며, 여성의 기대여명은 21.02년으로 나타났다. 한편 80세 시점에서 살펴보면 남성의 평균 기대여명은 7.26년이며, 같은 연령에서 여성의 기대여명은 9.35년으로 여성의 기대여명은 지속적으로 남성보다 길다 (통계청, 2008).

평균적으로 은퇴연령을 60세라고 가정할 경우, 여성의 은퇴이후 기간은 25년 이상으로 은퇴이후 기간이 20년 정도인 남성과 비교해 볼 때 여성의 은퇴기간이 길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개인이 예측하여 준비한 은퇴자산이 조달할 수 있는 생활비를 다 소진하고도 생존하게 되는 장수위험 (longevity risk)이 여성에게 더 심각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65세 남성의 경우 향후 16년 이상을 더 살게 되고 그 중 일부가 90세 넘게 생존하게 되나 65세 여성의 경우는 향후 21년을 더 살게 되고 그 중 일부는 100세 이상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생존하게 된다. 이러한 남녀 차이는 여성에게 은퇴이후 생활비 조달을 위한 준비의 심각성을 가중시킨다.

<표 1-3> 각 세별 성별 완전생명표 (2008년)

(단위: 년)

각 세별	기대여명(전체)	기대여명(남자)	기대여명(여자)
60세	23.32	20.53	25.52
61세	22.48	19.73	24.61
62세	21.64	18.93	23.71
63세	20.80	18.14	22.80
64세	19.97	17.37	21.91
65세	19.15	16.60	21.02
66세	18.34	15.86	20.14
67세	17.55	15.12	19.27
68세	16.77	14.41	18.41
69세	16.00	13.71	17.56
70세	15.25	13.03	16.72
71세	14.52	12.36	15.90
72세	13.80	11.72	15.09
73세	13.10	11.09	14.30
74세	12.42	10.49	13.53
75세	11.75	9.90	12.78
76세	11.10	9.33	12.04
77세	10.46	8.77	11.33
78세	9.85	8.24	10.64
79세	9.26	7.73	9.98
80세	8.69	7.26	9.35

출처 : 통계청(2008). 완전생명표

하지만 적절한 은퇴생활비 조달을 위한 은퇴설계 측면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직장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어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은퇴설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본인이 공적연금의 가입자가 아니고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연금의 수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 까지 적용되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220,870원에 해당되는 극히 적은 금액이다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2010).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 차이와 노동패턴의 차이로 인한 노후소득 불안정은 배우자 사망이후 여성노인의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수위험을 고려한다면 여성노인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문제 특히 노후 생활비 조달 문제가 개인 혹은 가정 단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측면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여성 노인의 노후소득 안정화에 대하여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노동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 적용에 있어서 성인지적 특성이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반 제도에 대한 성인지적 정책평가는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지적 정책평가를 통해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와 은퇴저축을 위한 연금저축 세제혜택 등을 분석하여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 여성이 당면한 노후대비 저축의 미비와 장수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 평가를 통한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와 은퇴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세제혜택 등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여성의 노후소득관련 연구 고찰을 통해 여성노인 문제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국민연금제도와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을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 해외의 노후 생활비 마련 정책이 성인지적 측면에서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것이며, 현행 정책의 평가와 구체적인 제언 마련을 위해 남성과 여성의 노후 소득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제 2장. 여성의 노후 소득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노후 생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관련 연구 및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여성의 노후 생활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의 가족구조 변화 속에서 여성 가구주 증가 추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소득과 여성 노인의 빈곤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여성의 은퇴준비 현황에 대한 기존 문헌을 분석하겠다.

1. 우리나라 여성의 노후 생활

1) 한국의 가족구조 변화 : 여성 가구주의 증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핵가족화와 이혼율증가로 인한 가족해체와 가족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여 왔다. 가족구조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의 증가이다. 통계청의 조사에서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가구소비실태조사, 1996), 최근에는 이러한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박재규 (2003) 에 의하면 여성 가구주는 2000년 이전에는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혹은 미혼 여성 가구주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혼 또는 별거한 빈곤층 여성 가구주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아래 <표 2-1>에 의하면 1995년 여성 가구주는 전체가구의 16.6%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0년 이후 증가하여 2009년에는 전체가구의 22.2%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 여성 가구주 비중 추이

(단위 : 가구, 명, %)

년도	가구	여성 가구주	남성 가구주	여성가구주 비율(%)
1995	12,958,181	2,146,859	10,811,322	16.6
2000	14,311,807	2,653,010	11,658,797	18.5
2001	14,843,989	2,857,591	11,986,398	19.3
2002	15,170,029	3,026,757	12,143,272	20.0
2003	15,465,163	3,180,051	12,285,112	20.6
2004	15,720,436	3,323,336	12,397,100	21.1
2005	15,971,010	3,467,439	12,503,571	21.7
2006	16,158,334	3,546,593	12,611,741	21.9
2007	16,417,423	3,622,283	12,795,140	22.1
2008	16,673,162	3,688,713	12,984,449	22.1
2009	16,916,966	3,749,218	13,167,748	22.2

출처 : 통계청 (2009). 온라인 간행물,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여성 가구주 증가추이를 결혼 상태와 함께 살펴본 추정자료에 의하면 (<표 2-2>), 미혼 여성 가구주와 이혼 여성 가구주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2030년 즈음에는 2010년과 비교할 때 여성 가구주 가구가 약 25%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 2-2> 결혼 상태별 여성 가구 수

(단위 : 명, %)

	2005	2007	2010	2020	2030
미혼	794(22.9)	850(23.5)	902(23.7)	1,143(26.0)	1,275(26.9)
유배우	643(18.5)	662(18.3)	694(18.2)	758(17.2)	780(16.4)
사별	1,537(44.3)	1,537(42.4)	1,537(40.4)	1,545(35.1)	1,589(33.5)
이혼	493(14.2)	573(15.8)	675(17.7)	951(21.6)	1,102(23.2)
여성가구주	3,467(100.0)	3,622(100.0)	3,809(100.0)	4,397(100.0)	4,746(100.0)

출처 : 통계청 (2007). 장래가구추계

이러한 여성 가구주 현황을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를 구별하여 살펴본 아래 <표 2-3>에 의하면, 60세 이상 여성 가구주 가구는 1980년 약 230,000가구로 60세 이상 전체 가구의 23.8%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1,197,000가구로 60세 이상 전체 가구의 33.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 여성 가구주 중에서 미혼인 경우와 이혼인 경우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 가구주 중에서 이혼한 경우의 비중은 1980년 0.5%에서 2005년 3.2%로 증가하였다.

<표 2-3> 60세 이상 여성 가구주 현황

(단위 : 천 가구, %)

	여성가구주	여성가구주비율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 1980 >	1,169	14.7	15.7	22.2	58.1	3.9
60세 이상	231	23.8	0.2	8.2	91.1	0.5
< 1985 >	1,501	15.7	20.7	22.7	52.2	4.3
60세 이상	338	27.7	0.2	11.1	87.9	0.8
< 1990 >	1,787	15.7	20.4	17.7	56.3	5.6
60세 이상	493	30.7	0.3	6.3	92.5	0.9
< 1995 >	2,147	16.6	21.1	15.7	56.1	7.1
60세 이상	677	32.1	0.4	4.1	94.3	1.3
< 2000 >	2,653	18.5	21.4	16.6	50.5	11.6
60세 이상	896	32.4	0.7	4.6	92.3	2.3
< 2005 >	3,485	21.9	23.2	17.9	44.4	14.4
60세 이상	1,197	33.6	0.9	5.2	90.6	3.2

출처 :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특히 여성 가구주 가구는 남성 가구주 가구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나타낸다. 성별 가구주 특성을 나타내는 아래 <표 2-4>을 살펴보면, 여성 가구주의 경우 남성 가구주와 비교할 때 읍·면부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으며 평균연령도 약 6.7세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사별과 이혼으로 인한 여성 가구주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고, 이들의 교육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가구주가 다양한 측면에서 남성 가구주보다 노후 생활의 빈곤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2-4> 성별 가구주 특성 (2004년)

(단위 : %)

가구주 특성		전체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지역	동부	80.4	81.2	77.0
	읍·면부	19.6	18.8	23.0
연령	24세 이하	2.3	1.2	7
	25~34세	14	14.9	10.2
	35~44세	25.2	28.2	11.9
	45~54세	23.9	25.4	17.6
	55~64세	17.4	17.4	17.4
	65~74세	12.4	10.1	22.4
	75세 이상	4.8	2.8	13.5
	평균 연령(세)	49.2	48.0	54.7
결혼상태	미혼	9.7	7.5	19.4
	유배우	72	87.7	4.3
	사별	11.8	1.5	56.5
	이혼·별거	6.5	3.4	19.9
교육수준	초교 이하	22.4	15.6	51.8
	중학교	12.8	13.1	11.8
	고등학교	35	38.2	21.2
	전문대학 이상	29.7	33.1	15.2
가구주 수 (명)		9,308.00	7,551.00	1,75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2) 여성의 소득

여성들의 경제적 불안정은 이혼율의 증가, 독신가구의 증대, 기대수명의 증대와 여성노인 인구의 증대 등 가족 구조와 인구사회학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성 편향적인 노동시장 구조 및 사회보장제도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이상록, 200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5세 이상 여성인구의 약 48~49%로서 1990년 이후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73%에서 76%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다 (<표 2-5> 참조).

<표 2-5>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단위: 천명, %)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15세 이상 여성 인구	17,382	18,664	19,683	19,899	20,086	20,273	20,496
여성경제 활동인구	8,410	8,769	9,526	9,706	9,836	9,874	9,772
여성경제 활동참가율(%)	0.48	0.47	0.48	0.49	0.49	0.49	0.48
남성경제 활동참가율(%)	0.76	0.74	0.74	0.74	0.74	0.73	0.73

출처: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6>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추이 및 전체여성에 대한 비중

(단위 : 천명, %)

연령 계층별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계	8,731 (0.502)	8,337 (0.452)	8,991 (0.477)	9,108 (0.474)	9,526 (0.484)	9,826 (0.489)	9,772 (0.477)
15 - 19세	233 (0.013)	188 (0.010)	192 (0.010)	155 (0.008)	133 (0.007)	113 (0.006)	106 (0.005)
20 - 29세	2,357 (0.136)	2,080 (0.113)	2,215 (0.117)	2,199 (0.114)	2,208 (0.112)	2,096 (0.104)	1,978 (0.097)
30 - 39세	2,284 (0.131)	2,131 (0.115)	2,212 (0.117)	2,190 (0.114)	2,200 (0.112)	2,233 (0.111)	2,105 (0.103)
40 - 49세	1,868 (0.107)	1,952 (0.106)	2,247 (0.119)	2,398 (0.125)	2,544 (0.129)	2,655 (0.132)	2,658 (0.130)
50 - 59세	1,167 (0.067)	1,127 (0.061)	1,176 (0.062)	1,215 (0.063)	1,407 (0.071)	1,612 (0.080)	1,7949 (0.088)
60세 이상	822 (0.047)	860 (0.047)	949 (0.050)	950 (0.049)	1,034 (0.053)	1,118 (0.056)	1,132 (0.055)

출처: 통계청 (2010). 경제활동 인구조사, 통계청 (200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경제활동 측면에서 여성 취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2-6>과 같이 2009년 기준으로 여성취업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40~49세로 전체 여성 취업자의 27%에 이른다. 지난 10여 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30대 여성 취업자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 취업자들의 업종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으로 여성취업자의 상당수가 서비스종사자 (20.5%), 판매종사자 (14.1%), 단순노무종사자 (13.4%)에 속하며, 남성취업자의 상당수는 전문·기술·행정 관리자 (24.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16.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2%)에 속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여성취업자의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비율은 77.5%이며, 남성취업자와 비교할 때 임시와 일용직 비율이 높은 반면 상용직 비율은 낮아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한 지위에서 취업하고 있다 (<표 2-7> 참조). 이와 같은 취약한 취업구조의 결과로, 전지혜 (2002)의 연구에서는 전체 빈곤가구 중 여성가구주 가구가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빈곤에 처할 위험이 4배 정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표 2-7> 여성의 직업별 취업자 추이 및 직업별 비중

(단위 : 천명, %)

직업별	2000	2002	2004	2006	2008
계	8,769 (100.0)	9,225 (100.0)	9,364 (100.0)	9,706 (100.0)	9,874 (100.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3 (0.3)	32 (0.3)	40 (0.4)	47 (0.5)	52 (0.5)
전문가	615 (7.0)	669 (7.3)	786 (8.4)	920 (9.5)	999 (10.1)
기술공 및 준전문가	587 (6.7)	670 (7.3)	756 (8.1)	857 (8.8)	945 (9.6)
사무 종사자	1,285 (14.7)	1,476 (16.0)	1,582 (16.9)	1,685 (17.4)	1,768 (17.9)
서비스 종사자	1,815 (20.7)	1,965 (21.3)	2,006 (21.4)	2,054 (21.2)	2,020 (20.5)
판매 종사자	1,549 (17.7)	1,613 (17.5)	1,493 (15.9)	1,440 (14.8)	1,391 (14.1)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984 (11.2)	907 (9.8)	764 (8.2)	754 (7.8)	691 (7.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23 (7.1)	540 (5.9)	424 (4.5)	375 (3.9)	360 (3.6)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05 (3.5)	302 (3.3)	345 (3.7)	335 (3.5)	326 (3.3)
단순 노무 종사자	983 (11.2)	1,051 (11.4)	1,168 (12.5)	1,241 (12.8)	1,322 (13.4)

출처: 통계청 (2010). 경제활동 인구조사, 통계청 (200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여성의 취업은 단순히 업종별 현황에 있어서 남성과 격차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소득은 동일 직종에 속하는 남성의 소득과 꾸준한 격차를 보여 왔다. 아래 <표 2-8>에 의하면 전 직종의 임금 격차는 1995년에서 2008년 사이 남성 임금이 여성 임금의 1.5배를 상회하여 왔다. 2008년 기준으로 직종별 최고 격차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로 남성 임금이 여성 임금의 1.6배를 나타냈으며, 최저는 판매종사자로 남성 임금이 여성 임금의 1.19배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취업 상태의 불평등은 여성의 노후 소득 재원 마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8> 직종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

(단위: 원)

직업별	성 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월급여총액	월급여총액	월급여총액	월급여총액	월급여총액	월급여총액
전직종	계	927,891	1,313,910	1,887,507	2,014,265	2,127,430	2,258,684
	남	1,049,646	1,473,789	2,108,732	2,249,024	2,380,637	2,527,490
	여	628,275	954,292	1,395,979	1,496,631	1,581,625	1,681,358
남성소득/여성소득		1.67	1.54	1.51	1.50	1.51	1.5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계	1,746,073	2,312,210	3,439,977	3,816,718	4,172,365	4,180,495
	남	1,750,939	2,339,472	3,489,373	3,868,455	4,253,151	4,275,956
	여	1,507,528	1,942,075	2,758,325	3,140,203	3,255,223	3,380,292
남성소득/여성소득		1.16	1.20	1.27	1.23	1.31	1.26
전문가	계	1,232,710	1,786,017	2,511,125	2,672,537	2,779,380	3,018,644
	남	1,298,025	2,026,722	2,894,480	3,137,286	3,277,743	3,468,183
	여	976,268	1,352,776	1,893,774	1,998,938	2,087,568	2,259,289
남성소득/여성소득		1.33	1.50	1.53	1.57	1.57	1.54
기술공 및 준전문가	계	1,046,642	1,491,265	2,071,720	2,166,988	2,258,455	2,352,969
	남	1,113,869	1,565,672	2,221,069	2,346,989	2,471,960	2,647,161
	여	705,943	1,115,536	1,511,952	1,580,774	1,594,277	1,688,392
남성소득/여성소득		1.58	1.40	1.47	1.48	1.55	1.57
사무 종사자	계	882,555	1,170,980	1,875,354	1,997,063	2,107,761	2,248,685
	남	1,033,005	1,386,526	2,164,230	2,316,006	2,472,796	2,668,794
	여	652,927	942,463	1,458,770	1,543,431	1,611,361	1,705,462
남성소득/여성소득		1.58	1.47	1.48	1.50	1.53	1.56
서비스 종사자	계	734,090	1,011,927	1,332,076	1,414,546	1,460,245	1,586,112
	남	880,864	1,260,919	1,595,894	1,746,740	1,771,412	1,863,241
	여	641,979	848,788	1,177,371	1,241,404	1,297,674	1,375,378
남성소득/여성소득		1.37	1.49	1.36	1.41	1.37	1.35
판매 종사자	계		988,856	1,483,376	1,614,716	1,846,845	2,000,467
	남		1,124,926	1,707,857	1,805,342	1,965,774	2,134,045
	여		851,301	1,250,820	1,365,673	1,688,053	1,798,871
남성소득/여성소득			1.32	1.37	1.16	1.19	1.5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계	811,602	1,079,768	1,732,367	1,765,270	1,684,824	1,808,672
	남	821,080	1,138,519	1,786,791	1,854,597	1,768,838	1,908,339
	여	560,975	692,948	1,148,593	1,132,295	1,078,552	1,208,571
남성소득/여성소득		1.46	1.64	1.56	1.64	1.64	1.5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계	837,553	1,203,855	1,691,257	1,820,032	1,906,043	1,999,016
	남	950,688	1,316,286	1,800,596	1,914,501	2,010,844	2,138,591

	여	537,942	792,704	1,126,301	1,221,052	1,266,548	1,333,749
남성소득/여성소득		1.77	1.66	1.60	1.57	1.59	1.60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계	854,522	1,169,523	1,632,728	1,724,513	1,759,152	1,890,864
	남	961,246	1,270,121	1,755,898	1,852,219	1,878,595	1,995,999
	여	552,798	802,104	1,172,130	1,243,728	1,281,046	1,353,663
남성소득/여성소득		1.74	1.58	1.50	1.49	1.47	1.47
단순 노무 종사자	계	657,988	810,260	1,107,778	1,187,123	1,245,906	1,314,611
	남	715,977	886,489	1,209,300	1,295,239	1,355,630	1,474,286
	여	506,572	671,578	948,840	1,014,420	1,060,120	1,091,813
남성소득/여성소득		1.41	1.32	1.27	1.28	1.28	1.35

출처: 통계청 (2010). 경제활동 인구조사, 통계청 (200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표 2-9> 성별, 가입유형별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단위: 명)

		총 가입자 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소득 신고자	납부 예외자		
1995	계	7,496,623	152,463	5,541,966	1,650,958	239,229	48,710	15,760
	남	5,538,987		4,027,112	1,290,719	173,281	34,554	13,321
	여	1,957,636		1,514,854	360,239	65,948	14,156	2,439
2000	계	16,209,581	211,983	5,676,138	5,972,708	4,446,465	34,148	80,122
	남	11,332,395		4,081,518	4,368,046	2,833,234	4,321	45,276
	여	4,877,186		1,594,620	1,604,662	1,613,231	29,827	34,846
2005	계	17,124,449	646,805	7,950,493	4,489,216	4,634,459	26,568	23,713
	남	11,061,739		5,323,606	2,971,503	2,751,152	6,346	9,132
	여	6,062,710		2,626,887	1,517,713	1,883,307	20,222	14,581
2006	계	17,739,939	773,862	8,604,823	4,150,416	4,935,952	26,991	21,757
	남	11,293,404		5,692,740	2,699,533	2,887,197	6,612	7,322
	여	6,446,535		2,912,083	1,450,883	2,048,755	20,379	14,435
2007	계	18,266,742	856,178	9,149,209	3,956,340	5,106,803	27,242	27,148
	남	11,462,183		5,981,796	2,525,462	2,939,611	6,911	8,403
	여	6,804,559		3,167,413	1,430,878	2,167,192	20,331	18,745
2008	계	18,335,409	921,597	9,493,444	3,755,980	5,025,503	27,614	32,868
	남	11,369,032		6,156,545	2,356,164	2,839,782	7,125	9,416
	여	6,966,377		3,336,899	1,399,816	2,185,721	20,489	23,452
2009	계	18,623,845	979,861	9,866,681	3,627,597	5,052,264	36,368	40,935
	남	11,409,767		6,304,399	2,230,372	2,853,147	9,115	12,734
	여	7,214,078		3,562,282	1,397,225	2,199,117	27,253	28,201

출처: 국민연금공단(2010), 2009 국민연금통계연보.

특히 이러한 차이는 여성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로 연결되어 여성의 노후생활의 빈곤을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낮은 연금 가입률은 여성의 노후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순재, 2007). 실제 우리나라의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를 살펴보면,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여성 가입자는 남성 가입자의 63% (2009년 기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여성가입자의 수가 남성가입자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70% 수준). 단,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여성 가입자가 남성 가입자보다 많으나 연금 혜택에 있어서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표 2-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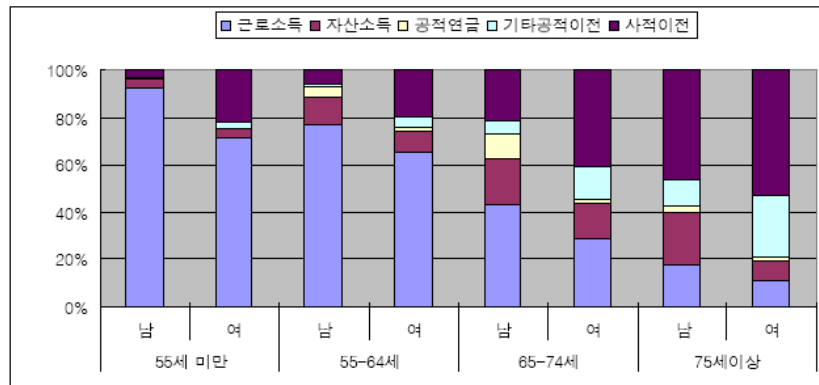
석재은 (2001)은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여성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가 만들어내는 문제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여성이 남성 가장의 피부양자로 배우자의 소득 및 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과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에 취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3) 여성 노인의 빈곤

남편의 경제적 지위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전업주부가 중년 이후 사별이나 이별을 겪게 되면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 단절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노후생활 준비에 미흡한 상황 하에서, 젊어서는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노년기에는 자녀의 경제적 원조에 의존하는 등 노후생활의 자립대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여성의 경우 양육, 가사노동, 노인부양 등의 가정 내 무임금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임금 노동 수행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노후생활이 궁핍하다는 것은 이견이 없는 현상이다 (김수완, 2006). <그림 2-1>과 같이, 우리나라 노령자의 소득은 65세 이전까지는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지만, 65세를 넘어서면서 그 비중은 50%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한다. 근로소득 비중은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현저히 작으며 65세 이후의 노후소득 중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의 비중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순재, 2007).

<그림 2-1> 우리나라 여성의 노후소득 실태



자료 : 이순재 (2007)에서 재인용. p2.

우리 사회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은 배우자 상실로 혼자가 된 여성에게 심각한 경제문제를 직면하게 한다. 특히 이혼을 통한 가족관계 해체는 여성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획득되고 보장받았던 경제적인 혜택의 상실을 의미하며, 남성보다 긴 여성의 평균수명이나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을 고려해 본다면 여성 노인의 빈곤 가능성은 높아진다.

여성 노인의 빈곤은 생애주기 내내 경제적 취약성이 누적된 빈곤이며 젊은 시절 빈곤의 연장선에 있는 경로 의존적 빈곤으로, 여성 노인의 빈곤은 독립적인 소득원이 없더라도 남성 가구주의 부양 하에 숨겨진 빈곤상태로 있다가 노령이 되어 사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김수정, 2006). 한국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표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67.2%)가 빈곤하다는 것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상당한 수준이다 (김수정, 2008). 또한 경제활동 연령에 있는 여성의 빈곤율은 25%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경제활동 연령에 있는 여성의 빈곤은 장기화되고 누적되어 여성 노인빈곤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김수정, 2008).

<표 2-10> 여성가구주 가구 연령대별 빈곤율

(단위 : %)

국가	65세 이상	18~64세	국가	65세 이상	18~64세
호주	48.2	21.3	이탈리아	22.8	12.4
오스트리아	16.6	11.3	네덜란드	1.4	16.0
벨기에	13.6	11.3	노르웨이	16.4	14.9
캐나다	7.9	25.6	스웨덴	10.4	12.5
덴마크	9.1	8.7	영국	23.4	19.5
독일	14.6	14.0	미국	36.3	20.5
스페인	19.2	15.1	러시아	17.6	19.0
핀란드	10.2	7.4	대만	56.6	13.1
프랑스	12.9	17.7	멕시코	32.6	19.6
그리스	31.5	14.5	한국(05')	67.2	25.0
아일랜드	58.3	22.7	평균	26.3	16.3

자료 : 김수정(2008), p.46.

여성 노인의 빈곤은 여성 노인의 직업 유형에서도 드러난다. 직종 및 근무형태 차이는 소득수준 차이로 연결되며 이는 곧 노후생활의 질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아래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노인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직종인 농·어·축산업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 노후생활이 빈곤할 위험이 더 높다.

<표 2-11> 가구형태별 가구주의 성별 직종 및 근무형태

(단위, %)

직종 및 근무형태별	1998		2004	
	노인가구 여자	비노인가구 여자	노인가구 여자	비노인가구 여자
고위임직원·관리자	0.6	0.4	-	0.8
전문가	2.3	4.7	3.8	5.4
기술공·준전문가	1.5	7.1	2.9	10.3
사무직원	1.6	9.9	3.6	11.6
서비스·판매직근로자	22.6	39.9	-	-
서비스종사자	-	-	9.6	20.4
판매종사자	-	-	10.7	17.4
농·어·축산업종사자	28.7	9.8	28.5	4.3
기능원·관련 기능근로자	5.6	6.8	0.6	4.1
기계,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	0.4	2.4	2
단순노무종사자	36.8	20.9	38.0	23.7
기타	0.2	-	-	-
소계	100	100	100	100
가구주수(명)	228	720	241	68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 여성의 노후 준비

1) 일반적인 노후 준비 실태

앞서 여성의 노후에 대하여 여성의 직업 및 소득 그리고 노인 여성의 빈곤문제 등을 살펴 보았다.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 중에서 경제적인 측면은 은퇴설계 (retirement planning)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은퇴설계란 은퇴와 관련한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그러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차경욱 등 (2008)은 은퇴설계를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은퇴 후 노후생활의 복지실현을 위한 재정적, 비재정적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 (p.150)이라고 설명하였다.

은퇴에 대한 준비는 은퇴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은퇴준비는 선진국에 비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오고 있다. 일 예로 피델리티 그룹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은퇴준비는 은퇴소득적정성으로 살펴볼 때 약 41%로, 독일 (58%), 미국·영국·캐나다 (50%), 일본 (47%), 대만·홍콩 (43%) 등과 비교할 때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 2008, 9월 10일). 또한 2010년부터 은퇴가 본격화되는 베이비 붐 세대들 가운데에서도 남성은 82.6%가 여성은 68.3%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국민연금, 예·적금·보험 등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통계국, 2009).

20~30대의 직장인을 중심으로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 행태를 조사한 차경욱 등 (2008)의 연구에 의하면 직장인들이 예상하는 실제 은퇴연령과 희망하는 은퇴연령에 차이를 보여서 실제로는 약 56세 정도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바람직하게는 60세 정도에 은퇴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경욱 등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인 20~30대 직장인 중에서 약 50%가 재정적인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전문·관리·기술직이 생산·판매직과 비교할 때, 자기소유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은퇴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상 은퇴연령이 낮을수록 은퇴준비의 경향이 높으며 은퇴이후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이 은퇴이전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은퇴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이상의 비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정운영과 백은영 (2009)의 연구에 의하면 은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51%로 나타나 차경욱 등 (2008)의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은퇴를 위한 월 평균 적립금은 104.4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정운영과 백은영의 연구에서는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로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월 소득이 높을수록, 은퇴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월평균 적립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 은퇴를 위한 준비에는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 여성의 노후준비 관련 연구

현재 조사된 많은 연구에서 우리나라 비은퇴자의 미흡한 은퇴준비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 특히 여성은 위험회피 성향이 높고 재무적 지식도 남성에 비해 취약하여 높은 투자 수익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으며, 선별결혼 (특정있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끼리 결혼을 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노후소득의 불균형이 확대된다 (이순재, 2007). 또한, 가계지출 책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은 단기적인 가계지출 (생활비·의료비·자녀교육비 등)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반면, 장기적인 재무활동 (연금보험이나 부동산 대출상환 등)에 대해서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계 내의 의사결정 성향이 여성으로 하여금 은퇴준비에 대해 소극적 대처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향후 1년 이내 은퇴관련 금융상품에 가입할 의사가 여성 (24%)이 남성 (29%)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노후준비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들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은퇴준비가 남성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은 큰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하나HSBC생명).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노후준비나 은퇴계획에 있어서 실행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는 80년대 후반부터 보고되었다. 기혼 여성들의 노후생활 계획에 대한 계선자 (1988)연구 결과에서 노후생활 계획을 실제적으로 시작한 시기는 50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 바람직한 노후계획시기가 처음 직장을 갖거나, 적어도 은퇴 전 20~30년 전부터 시작하거나, 35세 전후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외국의 70년대 후반 연구인 Scharff(1979)와 Fillenbaum(1971)의 주장에 비하면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선자의 연구에서는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기혼 여성들도 절반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즉, 자녀 교육 및 양육, 혼인 비용 등의 지출로 장년층은 노후계획을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노후계획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신화경 (2003)은 40~50대 중년층 주부를 대상으로 한 노후생활 계획에 대한 조사에서 중년층 주부의 높은 경제적 자립에 대한 기대를 파악하였으며, 경제적 자립에 대한 기대감이 학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서 학력이 높을수록 국가와 사회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가 노후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중년층 주부의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준비는 저축과 보험이 58.8%로 가장 많이 나타나서 20~30대 직장인이 개인적인 저축을 노후생활 준비로 예상한다고 보고한 차경옥 등 (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중년 여성의 노후준비를 살펴본 김인숙 (2004)의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들의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는데, 96.8%의 중년 여성이 노후생활비를 자식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고 보고함으로 경제적 자립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이나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중년 여성은 12.6%, “수익성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중년 여성은 5.3%, “노후생활의 경제적 여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중년 여성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인 노후생활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노후의 문제와 노후 부양 등에 대한 중년 여성의 의식을 조사한 박정희 (2007)의 연구에 의하면 노후의 생계를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응답이 56.7%인 반면, 가족에 의존하겠다는 응답과 가족과 정부 및 사회에 의존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23.4%와 14.6%로 노후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박정희의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이 가장 염려하는 노후의 문제는 건강 (61.2%)과 경제력 (29.2%)으로 나타나 경제적 준비 뿐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신체적 준비의 중요성을 드러냈다. 노후생활 준비 실태에 있어서는 7.7%의 응답자가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51%의 응답자는 국민연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노후에 대한 준비는 여성에게 있어서 삶의 중요한 이슈이지만, 대다수의 여성은 노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못하다. 노후에 대한 준비 여부는 여성의 생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안현선 등 (2009)에 의하면 노후에 대한 준비도가 높고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노후의 준비도가 남성보다 높아야 한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낮아 노후준비에 충분하지 못한 소득상황에 있어, 노인 문제는 여성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김인숙 (2004)은 여성의 사회구조적인 취약성, 노인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이 여성 노인에게 더욱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의 고찰을 통해 노후를 위한 준비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과 여성은 그 노후생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정책에 성인지적 특성이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성 노인의 경우 남성에 비해 65세 이후의 노후소득 중에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의 비중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연금저축을 위한 세제혜택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제 3장. 해외의 노후소득 관련 제도의 성인지적 고찰

본 장에서는 해외의 노후소득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관련제도에 시사 하는 바를 검토하고자 한다.

1.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연금제도 개요

1) 미국의 연금제도

(1) 미국의 Social Security 제도

미국의 Social Security제도는 연방정부차원에서 제공하는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 프로그램을 일컫는 말이다. 최초의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1935)의 몇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에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노후보장 (OASDI), 실업보장 (Unemployment benefits),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노인의 의료보험 (Health Insurance for Aged and Disabled (Medicare)), 저소득층 의료보험 (Grants to States for Medical Assistance Programs (Medicaid)), 아동의료보험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Social Security는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FICA)에 의한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각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한 신탁펀드에 그러한 세금이 적립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자체는 부과방식으로 재정을 조달하고 있다. 각 개인은 매월 급여에서 Social Security Tax를 내고 있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급여의 6.2%의 세금을 내며, 자영업자는 12.4%를 납부한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각각 1.45%, 자영업자는 2.9%의 Medicare Tax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미국의 Social Security는 은퇴이후 우리나라의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완전은퇴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있으나, 1943년에서 1954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완전은퇴연령이 66세이다. 완전은퇴연령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1960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의 경우는 67세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이는 노령인구와 노동인구 사이의 비율 및 Social Security 재원의 수급에 따른 문제점 때문이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n.d.).

(2)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미국은 1929년 대공황 이후 블루칼라 급여를 기준으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74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의 제정이 후 사용자와 종업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노후보장체계가 자리 잡아 왔다. 일반적으로 ERISA와 소득세법에 적합한 적격퇴직연금은 수탁인인 펀드를 통제하여야 하며, 급부와 기여에 있어서 일반직원과 임원 등 핵심직원 사이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일정액 이상의 연간 급부액에 제한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격퇴직연금은 연금신탁으로 대표되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Plans)제도와 이익분배형 연금제도(Profit Sharing Plan), 종업원 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401(k) Plan, 403(b) Plan, Money Purchase Plan등의 확정기여형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 등이 있다(고광수, 2003; 김재철, 2006).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세제상에 몇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우선 직장을 중심으로 한 세제적격 플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이연해 준다. 가장 최근 기준인 2009년 세제 혜택을 살펴보면 401(k), 연방정부 근로자를 위한 Thrift Savings Plan, Salary reduction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의 경우에는 연간 \$16,500 까지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SIMPLE)의 경우에는 \$11,500까지, 403(b) plan의 경우에는 \$16,500까지 501(c)(18) plan의 경우에는 \$7,000 혹은 급여의 25% 이내까지 등을 한도로 소득세를 이연하여 준다. 소득세를 이연하여 주기 때문에 이러한 저축액은 근로자의 소득세 산정 시 소득에서는 제외된다 (단 social security, Medicare, federal unemployment taxes를 위한 소득에는 포함된다).

직장을 통한 퇴직연금이 아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의 경우에는 2009년 기준으로 연간 \$5,000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6,000)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세제혜택을 통하여 은퇴를 위한 저축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개인이 직장을 통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IRA에 대한 추가공제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소득이 적은 집단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부분적 혹은 전체 금액 (\$5,000 한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은퇴저축을 위해서 소득공제혜택 뿐 아니라 세액감면(tax credit)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2009년을 기준으로 1992년 1월 2일 이전에 출생한 개인에 한하여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하인 경우 (독신이나 세금신고로 따로 하는 기혼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27,750 이하, 세금신고를 같이하는 기혼자인 경우에는 소득이 \$55,500 이하, 가장의 경우에는 소득이 \$41,625 이하인 경우)에는 \$1,000에서 \$2,000까지 세액감면을 제공한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은퇴를 위해 저축하면서 소득세를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IRA, n.d).

미국의 퇴직연금제에서는 특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다

른 은퇴저축계좌로 이전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입이나 경제적 위기 등 가계가 곤란을 겪는 특별한 상황에 한하여 이자를 제외한 적립금액을 한도로 조기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59.5세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징수된다 (IRA, n.d).

현재 미국의 퇴직연금시장에서는 확정급여형제도의 성장이 정체된 반면 확정기여형제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광수, 2003; 김재철, 2006). 이는 연금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정급여형제도를 도입한 경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운용 성과가 나쁘면 기업의 연금부채가 늘어나게 되며, 투자위험을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확정기여형제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종업원 입장에서 확정기여형제도의 경우 설계가 유연하고, 투자대상이 다양할 뿐 아니라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확정기여형제도가 증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2) 영국의 연금제도

영국의 경우에는 3층 연금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1층에는 국가기초연금이 2층에는 국가의 소득비례연금과 기업연금, 적격개인연금 및 신탁연금보험이, 3층에는 자발적인 보통개인연금이 있다. 영국이 우리나라 또는 미국과 다른 점은 국가의 연금이 2가지 체계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신동면, 2003). 기초연금은 보험료의 기여와 급여에 동일 금액에 적용되는 정액 방식으로 지급되고, 소득비례연금은 피보험자의 불입액과 기여 기간에 기초하여 지급된다.

연금의 급여방식의 경우 국가의 연금은 확정급여방식을 택하고 있고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은 확정기여방식을 택하고 있다. 재정운영방식의 경우 국가의 연금은 부과방식을 취하고 있고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은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다.

신동면 (2003)의 연구를 중심으로 영국의 연금체계 특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1층의 국가기초 연금은 국가 보험 (National Insurance)에 가입되어 기여금을 납입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기여금은 근로자, 사용자, 자영업자 등에 따라 5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르게 부과된다. 연금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가 국가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결정된다. 2층 연금은 공적연금인 국가의 소득비례연금과 사적연금 중에서 개인이 원하는 연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업연금, 개인연금, 신탁연금보험 등에 가입한 사람은 2층 공적 연금인 소득비례연금가입을 제외 받을 수 있다. 2층 연금에 속하는 기업연금은 미국의 퇴직연금과 유사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단독으로 혹은 다른 사용자와 연합하여 연금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근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적격개인연금과 보통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적격개인연금을 가입한 경우

에는 국가의 소득비례연금 가입이 제외되며 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추가로 보통개인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신탁연금보험 (Stakeholder Pension)은 기업연금이나 적격개인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하여 도입된 확정기여적립 방식의 연금제도로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혼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3층 연금은 자발적 보통개인연금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영국의 기업연금은 2층 연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요한 특징은 2층 공적연금인 국가소득비례연금에 대한 가입의무를 면제하는 적용제외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업연금에 가입한 경우 앞서 서술한 민간연금에 가입한 경우와 같이 국가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기업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되며 영국의 경우는 확정급여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신동면, 2003), 미국과 마찬가지로 확정기여형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3) 프랑스의 연금제도

프랑스의 연금제도 다른 나라보다 역사가 길다. 1947년에 간부보충연금제도가 실시되었으며, 기업연금제도가 1950년부터 실시되었으며 민간분야 전체의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연금제도 또한 1961년에 실시되어 연금의 역사가 40년 이상이다.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3층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체계, 보충체계, 보조체계로 나눌 수 있다. 기본체계는 법정연금제도로 프랑스 연금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가입자의 종사상 성격, 직업, 직종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체계이다. 보충체계는 강제가입의무가 있는 연금으로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 등의 협상과 협약 등을 통해 도입되는 기업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연금을 말한다. 보조체계는 개인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연금으로 임의가입이 원칙이나 기업연금과 유사한 집단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 (심창학, 2003, 2006).

프랑스 연금제도의 특징은 노사합의 또는 관련단체의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이 매우 포괄적이라는 것, 퇴직연금과 기본연금 간의 연계가 매우 약하며, 연금제도의 체계가 복잡하다는 것 등이다 (심창학, 2003, 2006). 이러한 특징은 2003년 프랑스 연금제도 개혁을 이끌어 냈으며 이후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의 미흡한 부분이 수정되었다 (이정원, 2008). 그러한 수정사항 중에는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을 위한 보험가입기간은 2012년까지 41년으로 늘리는 것,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것, 고용 및 퇴직의 중첩제도를 유연화하고 완전노령연금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60세 이후에 계속 근로하는 경우 적용되는 연금액 증가율을 3%에서 5%로 인상하여 고령자의 근로를 촉진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특별제도의 완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37.5세에서 40년으로 연장

조정하고, 2004년 1월부터 특수제도연금의 연동기준 보수상승률을 물가상승률로 전환하고, 2008년부터 모든 연금제도의 보험료를 연금 기여율 7.85%에서 10.35%로 인상하였다. 또한 퇴직연금을 통해 공적연금의 기능을 일부 대행 또는 대체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가 법적으로 강제화 되었다. 이처럼 프랑스의 경우 연금재정의 부실을 방지하고 민간부문에 비해 개혁이 미진한 공공부문에 주안점을 두고 연금개혁이 추진하였다.

4) 일본의 연금제도

일본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후생연금, 기업연금의 3층 보장체제로 되어있다. 이 중 국민연금 가입은 1호 피보험자(자영자, 농민,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실직 및 무직자, 학생), 2호 피보험자(민간부문 피용자, 공무원 등 후생연금과 공제연금가입자), 3호 피보험자(2호 피보험자의 피부양 배우자)로 구분되며, 기초연금 성격의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정액으로 부과되며, 제2·3호 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비례연금보험료 수입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하여 기초연금으로 이체된다. 일본 국민연금은 매년 관리운영비와 기초연금지출의 1/3을 기초연금재정에 보조하고 있으며, 사회보호시설수용자 및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보험료납부가 어려운 자나 무직자나 실업자 등과 같이 소득이 없어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고, 면제기간의 1/3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일본은 1962년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세제적격퇴직연금이 도입되면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는 세제적격퇴직연금, 후생연금기금,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제도 등이 있다 (고진수, 2006; 남재현, 2005). 세제적격퇴직연금은 일본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제도로 설립요건이 엄격하지 않고 비용이 저렴하여 중소기업 대상의 확정급여형제도로 성장하였으나 수급권 보호 등의 문제로 2012년 3월 말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후생연금기금은 국가의 공적연금인 후생연금의 일부분을 국가를 대신하여 기업이 지급하고 원하는 경우 독자적인 추가급부도 가능한 제도이나 현재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제도로 전환되고 있는 승인을 받은 제도로 2002년 4월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자산운용요건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공적연금제도, 고용체계, 퇴직제도의 수급권 등이 변화로 인하여 2001년 10월에 도입된 제도로 기업형과 개인형 두 종류가 있다. 기업형은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기업이 부담금을 내고 근로자 추가부담은 인정되지 않는 형태이다. 개인형은 자영업자 및 확정기여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확정급여형 근로자이다. 일본의 확정기여형 연금은 설계구조가 유연한 미국과는 달리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해서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납부금의 수준도 낮다 (고진수, 2006).

일본은 국민연금의 재정악화로 인한 재정위기를 타파하고 공적연금의 축소와 퇴직연금의

확대차원에서 2001년 신퇴직연금제도가 도입·추진되었다. 공적연금의 역할축소와 퇴직연금의 역할증대, 후생연금기금과 세제적격 연금의 통합, 퇴직금부에서의 연금비중 확대와 일시금 축소 등이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종업원 수급권보장 강화와 수탁자 책임의 확립 등에 퇴직연금개혁이 이루어져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 적극 도모하였고, 2005년 노년층 생계보조를 위한 고령연금 급여수준 상향조정, 연금재정 악화 방지를 위한 연금수급 개시연령 연장(2005년 남 65세, 여 60세에서 2044년 남녀 모두 68세로 단계적 상향조정) 및 노후대비 저축률 제고를 위한 정부관리형 개인연금 신설 등을 추진하였다.

2. 해외 연금 개혁의 시사점

본 절에서는 해외의 연금제도 및 연금 개혁의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외 연금제도의 시사점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1)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월 27일 근로자퇴직보장이 법률 7279호로 공포·확정됨으로써 2005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퇴직연금은 인구통계적인 변화, 사회경제적인 변화, 노동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완화하여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노후소득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근로자 자신의 노후소득저축을 위하여 개별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노후소득저축을 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에게도 재정적, 노사관계, 법적 보완점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제도가 도입된 선진국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개인퇴직계좌 등으로 불리는 제도의 기본적인 운영구조는 미국의 퇴직연금제도와 유사하며, 근로자 저축을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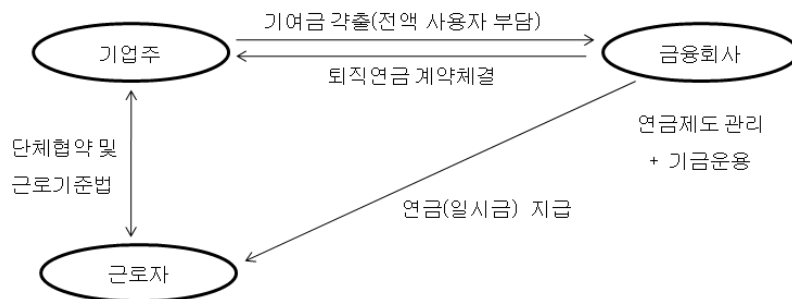
현재 퇴직연금제도에 저축하는 납부액은 하한선이 정해져 있을 뿐이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정해져 있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퇴직연금에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다. 또한 운용수익에

따라서 연금액이 변화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몇 연구자들은 중상소득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의존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김원식·신문식, 2007). 김원식과 신문식은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주는 이점 외에도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는데 퇴직연금제도를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급여를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상품을 선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노사관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 퇴직연금제도의 구조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는 연금기금의 운용형태, 사용자와 운영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간의 역할관계 등 연금기금의 운용구조로서 계약형, 기금형, 회사형 등으로 분류되며, 연금기금의 지배구조의 형태에 따라 노동 및 금융시장 발전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배성, 2006). 우리나라 지배구조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신탁제도가 발달하지 못했고 원만한 노사 간의 관계가 보다 요구된다는 점에서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모두 계약형 지배구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림 3-1> 참조).

<그림 3-1>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지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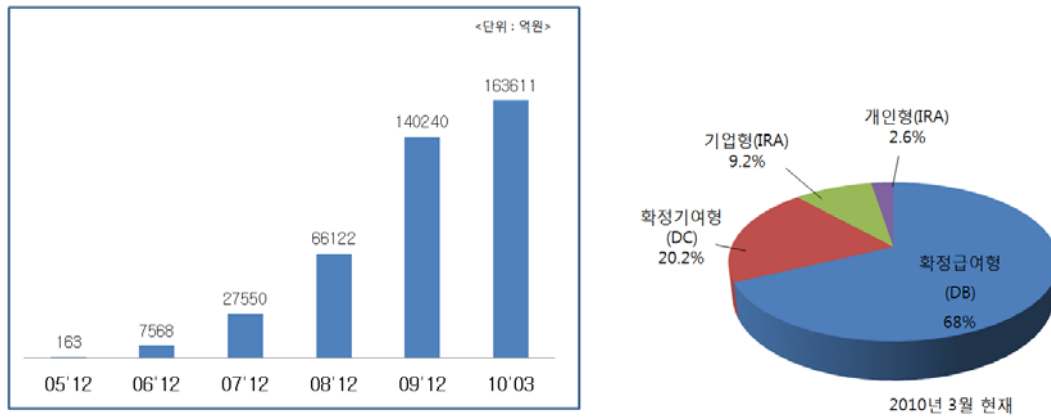


자료 : 정배성(2006). p.44.

(2)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2010년 3월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2,856,863명이며, 계약체결건수는 93,557건, 적립금액은 16조 3,611억 원에 이른다. 계약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 68%, 확정기여형(DC) 20.2%, 개인퇴직계좌(IRA)의 기업형 9.2% 그리고 개인형 2.6%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 참조).

<그림 3-2>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 및 구성



자료 : 금융감독원(2010). 퇴직연금종합안내. 퇴직연금통계

기업 규모별 계약 현황은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계약은 소기업이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대기업 및 중기업의 퇴직연금제도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 기업 규모별 퇴직연금 계약 현황

(단위 : 건, %)

구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건수	비중	전월대비증감율	건수	비중	전월대비증감율	건수	비중	전월대비증감율
은행	953	1.5	3.4	15,914	24.9	5.0	47,089	73.6	5.0
생보	282	4.5	5.6	1,683	26.9	2.2	4,293	68.6	7.8
손보	106	8.0	10.4	396	30.0	0.0	817	61.9	5.4
증권	308	6.5	3.7	1,337	28.3	2.6	3,086	65.2	2.0
총계	1,649	2.1	4.2	19,330	25.3	4.5	55,285	72.5	5.1

자료 : 금융감독원(2010). 퇴직연금종합안내. 퇴직연금통계

주) 대기업 : 300인 이상, 중기업 : 20인 초과~300인 미만, 소기업 : 20인 이하

(3) 퇴직연금제도의 과세

퇴직연금의 과세제도는 통상 E-E-T 체계로 일컬어진다. 연금저축과 연금의 가치 증가에 대

해서는 과세가 이연 (Exempt)되며,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과세 (Taxed)되는 체계이다. 김종일(2009)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여부, 도입단계의 제도 설계 및 퇴직단계의 수급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퇴직연금제도의 형태와 관련된 주요한 세법 규정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퇴직연금제도의 세제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개인퇴직계좌 (IRA)라는 통산장치를 이용한 과세이연제도로, 직장 이동 및 이에 따른 단기 근속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과세가 이연될 뿐만 아니라 목돈 마련이라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사내 적립인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 상 비용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셋째, 퇴직연금에 대해서 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과 통합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퇴직 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일시금 수령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통한 일정기간 적립 후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연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개인퇴직계좌를 이용한 과세이연은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직장 이동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나 직장을 이동한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연금 저축액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하여 향후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제도의 과세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연금저축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가 본인의 명의로 개인 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의 저축 불입액에 대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러한 저축금액 중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제는 2002년부터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개인 불입액을 합하여 연 300만원 까지 공제해 주던 것을 최근 (2010년 8월 24일 발표 기준) 세법개정안의 발표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4)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와 외국제도의 비교

우리나라의 소득공제 혜택은 퇴직연금제도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입된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401(k)은 연간 16,500 달러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약 5배 이상의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퇴직연금제도를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은 퇴직연금제도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길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1961년 퇴직금제도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일환으로써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말에 실시되었다. 하지만 프랑스는 1950년, 일본은 1962년, 미국은 1974년부터 본격적인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역사가 긴 만큼, 미국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이익분배형 연금제도, 종업원지주제도, 401(k) plan, 403(b) plan, Money Purchase Pension Plan, 주식상여제도 등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으나 이미 후생연금기금, 적격퇴직연금 등의 제도가 존재하여 왔고 이 외에도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 특정퇴직금공제제도 등이 운영되어 왔다.

해외국가들과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차이 중 두드러진 차이는 과세제도의 차이이다 (김진수, 김재진, 2007).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의 과세제도는 E-E-T 방식이다. 김진수와 김재진의 연구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과세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의 과세제도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E-E-T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구별하지 않고 기여 시 광범위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수급 시에도 공제를 통해 70~80%의 수급자가 비과세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사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 이상의 세제혜택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사적연금보다 공적연금의 세제혜택이 더 강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기여 시에는 소득공제를 허용하지만 수급 시에는 과세하여 연금소득이 과세망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기여단계에서 세제혜택이 다소 약한 편이고 수급 시에는 과세가 다소 엄격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 해외 연금개혁의 내용과 시사점

선진국의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특성과 실질적 노후 소득보장 정도에 따라 퇴직연금의 형태나 가입의 강제 여부 등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최근 선진국의 연금개혁 과정에서는 퇴직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추계에 따라 후세대의 부담가중과 건전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OECD, 2001). 프랑스의 경우는 퇴직연금제도가 법적으로 강제화되어 공적연금의 기능을 일부 대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공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에 미흡할 경우 퇴직연금을 적용하도록 법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 스웨덴과 독일은 공적연금의 역할이 크며 퇴직연금은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의 공적연금은 기초보장과 소득비례 부분을 퇴직연금으로 적용 제외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역할분담을 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이 임의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도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역할이나 제도 참여율에 있어서 법정제도와 차이가 없는 기능을 하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방하남 외, 2005). 이는 퇴직연금을 통해 수급권 보호를 확립하여 연금제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선진국의 연금개혁을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연금개혁은 수

탁자 책임 확립 및 정보공시의 강화를 통해 자기책임을 확립하고 운용주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퇴직연금 제도의 탄력화·자유화를 도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해외 연금개혁의 주요내용 (박진호, 2007; 류건식, 이상우, 2007; 이정우, 2004)과 연금개혁을 통한 시사점 (박진호, 2007; 이근홍, 2006; 이정우, 2004)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겠다.

(1) 프랑스 연금개혁의 내용과 시사점

프랑스 연금개혁은 연금재정의 부실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민간부분에 비해 개혁이 미진한 공공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도모 및 제도 간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3년 연금개혁에서는 특별제도의 완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37.5세에서 40세로 연장 조정하였고, 일반제도와 특별제도 모두 2012년부터 41세, 2020년부터 42세로 단계적 상향조정하였다. 특수제도 연금의 연동기준 보수상승률을 물가상승률로 전환 (2004년 1월부터)하고 2008년부터 모든 연금제도의 보험료를 인상 (7.85%에서 10.35% ; 2008년)하여 재정안정화를 도모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금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프랑스와 같이 장기적 재정안정을 목표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안으로는 해고가능 연령을 연장하여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연금지급규모는 축소할 수 있다. 또한 고령층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민간부분의 경우 60~65세의 임금과 연금의 동시 수령을 허용하고 사용자가 연금수급자격 연한 (40년)이 갖춰진 근로자를 강제 퇴직시킬 수 있는 연령을 65세 이상 (기존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 등을 들 수 있겠다.

(2) 독일 연금개혁의 내용과 시사점

독일의 연금개혁은 노후보장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부분은 슬림화하는 한편, 세제지원 등을 통한 사적부분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2001년 연금개혁에서는 수급권 부여 가입기간 단축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도입 되었으며, 여성의 독립적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육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금수급권 확보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육아기간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하였다. 아동 1명당 연금크레딧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3년간 제공하여, 연금크레딧과 근로소득의 합산을 허용하고 양육기간 동안의 연금가입 소득을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유적연금제도도 개선되었는데, 기존 급여수준을 60%에서 55%로 하향조정하고 아동양육의 경험이 있는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가산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족연금제도를 개선하였다. 2002년 연금개혁에서는 공적연금의 보험료인상이나 부과대상의 확대 등 세입원의 확대, 공적연금 총지출의 억제 그리고 사적연금의 확대 등이 이루어졌다. 2003년 8월 연금개혁의 핵심 내용은 단기적으로 연금인상을 수년

간 동결하고 연금수령 연령을 65세에서 2011년 67세로 조정하며, 최종 순수입의 48%인 연금액을 2030년까지 40%로 단계적 인하하는 것이다. 2004년 6월에는 퇴직연금 간의 이전가능, 일시금 지급의 원칙적 금지 등으로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활성화가 핵심내용이다. 이를 위해 매년도 '연금수급자비율'의 변화율에 대한 역수인 '지속성변수'를 추가하는 것으로 연금급여 조정방식을 수정하였고, 실업자·노인 파트타임 근로자의 연금수급연령 최저 연령을 63세로 상향조정하였다.

독일의 연금개혁은 일정한 급여수준을 전통적으로 보장해주던 공적연금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기여율과 급여수준을 유지하며, 부과방식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축소하고 적립방식의 개인보장의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구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비한 장기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장래에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금급여 조정방식 수정 즉, 지속성 변수는 단순히 인구구조의 노령화라는 독립적인 외생변수일 뿐만 아니라 노인 또는 여성 노동력의 활용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한 변수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3) 일본 연금개혁의 내용과 시사점

일본의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의 재정악화로 인한 재정위기를 타파하고, 공적연금의 축소와 퇴직연금의 확대차원에서 2001년 신퇴직연금제도를 도입·추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와 퇴직연금의 역할 증대, 후생연금기금과 세제적격 연금의 통합, 퇴직금 부에서의 연금비중 확대와 일시금 축소 등이 연금개혁의 초점이다. 특히 종업원 수급권보장 강화와 수탁자 책임의 확립 등의 퇴직연금개혁이 이루어져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적극 도모하고, 2005년 노년층 생계보조를 위한 고령연금 급여수준 상향조정, 연금재정 악화 방지를 위한 연금수급 개시연령 연장 (2005년 남 65세, 여 60세에서 2044년 남녀 모두 68세로 단계적 상향조정) 및 노후대비 저축률 제고를 위한 정부 관리형 개인연금 신설 등 추진되었다.

공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란 대전제 하에 세대 간의 재분배 및 세대 간의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차원의 개혁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기본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여율을 인상하고 급여율을 인하하는 것만으로는 재정적자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연금개혁은 출산율, 고령자 비율, 경제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여율과 급여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영국 연금개혁의 내용과 시사점

영국의 1995년 이전 연금개혁은 적용제외제도의 확대 및 퇴직연금의 수급권보호 충실 등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2004년의 연금개혁은 수급권 보장강화 이외에 연금재정의 적정성 검증, 연금운용의 관리감독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995년 이전의 연금개혁은 퇴직연금 감독청의 설립 및 수급권 강화, 적립기금 확보차원의 최저적립기준 적용, 연금보장제도에 의한 지급보증 등과 같은 수급권 보호와 적용제외요건 완화 등이 그 내용이다. 또한 저소득층 등 국민의 최저보증생활을 담보하는 기능을 기존의 기초연금에서 연금외 제도인 연금크레딧제 (2003년 10월)로 옮기고, 소득비례연금을 폐지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이 강화된 국가제2연금 (2002년 04월)을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과거 공적연금의 지원에 익숙한 가입자들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 및 이에 따른 사적연금 가입 필요성 증대 등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금관련 대국민 교육 강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영국은 2008년 9월부터 수학, 사회건강 (personal social health) 및 경제교육 교과과정에 부채관리·연금계획·금리계산 등 경제교육 포함해 실시해오고 있다.

공적연금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인상 및 소득대체율 인하로 대처할 경우 연금재정 안정에는 기여한다. 그러나 연금보험료 인상은 노동비용 증가와 근로유인 감소를 초래하고 소득대체율 인하는 연금의 노후생계보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함께 수반된다. 따라서 소득대체율 인하로 공적연금의 노후생계보장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적 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5) 미국의 연금개혁 내용과 시사점

미국의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인 사회보장연금 (OASDI)과의 연계 속에서 퇴직연금 개혁이 추진되었다. 개혁방향은 자기책임 하에 제도 설계·운영의 탄력화를 도모하고 수급권 보호의 확립 및 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이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연금지급보증공사 (이하 PBGC)의 장기적인 건전성 위협으로 제도종료보험의 보험료 적정화, PBGC에 의한 퇴직연금 재정관여 등 수급권보호 강화를 기초로 한 퇴직연금보호법 등을 제정되었고, 2001년 엔론사태 후 확정급여형 정보공시 확대, PBGC 재정악화에 따른 2004년 연금적립균형법제정 (적립기준완화), 2005년 PBGC 보험료의 리스크보험료 확대 등의 지급보증제도 건전화 도모가 그 내용이다. 이러한 미국은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 외에도 공무원 연금, 개인연금, 화사연금 등의 상당한 금액이 존재하며, 민간연금의 발전과 연금투자 방식의 변화 (고용자 담당에서 사용자 담당)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6) 스웨덴 연금개혁의 내용과 시사점

스웨덴의 공적연금은 1999년부터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되었다. 확정급여형 블루칼라연금 제도 (DB형)는 1996년 확정기여형 블루칼라 연금제도 (DC형)로 전환되었고, 화이트칼라연금

제도도 비용급증에 직면하여 화이트칼라연금제도를 블루칼라연금제도와 같은 확정기여형제도로의 변경을 추진하였다. 또한 연금지급방식을 확정급여식에서 명목확정기여식 (NDC; 연금기여액이 개인계정에 장부상 누적되고 누적된 기여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퇴직시점의 기대여명으로 나누어 연금급여 산출)으로 전환하고 연금보험료 부담을 기업 부담은 완화 (기존 13.0%)하고 개인부담을 확대하여 노사 균등 각 9.25%로 변경하였다. 이처럼 스웨덴의 퇴직연금은 공적연금의 제약 속에서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발달해 왔다. 특히 부과방식의 확정기여방식을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출산율, 평균여명, 금리, 경제성장률 등을 연금급여에 흡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의 적절성을 보장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는 것은 높게 평가된다. 이는 가입자가 장래 연금액에 대한 개략적인 전망을 세울 수 있고 정부는 연금재정의 흐름을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상호간에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연금제도를 둘러싼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수급자와 가입자가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연금제도를 단순화하고 최저보증연금을 통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7) 해외 연금개혁을 통한 우리나라 제도예의 시사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선진국의 경우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을 통한 수급권 보호를 확립하는 형태로 연금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역할분담을 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이 임의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도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역할이나 제도 참여율에 있어서 법정제도와 다름이 없는 기능을 하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방하남 외, 2002).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금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기적 재정 안정을 목표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의 사례처럼 근로유인 강화를 통한 연금지급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들도 있지만, 이러한 해결책은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등에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못한다.

연금재정 안정화는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신규가입을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에게 수급자격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임의가입자들의 가입 유인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선행연구의 결과 노후준비 계획이 남성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남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여 개인연금의 과세에 차이를 두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성에게 성인지적관점에서 동일한 과세 혜택을 준다면, 즉 여성에게 더 높은 과세 혜택을 준다면 은퇴설계 시 여성이 배제되는 것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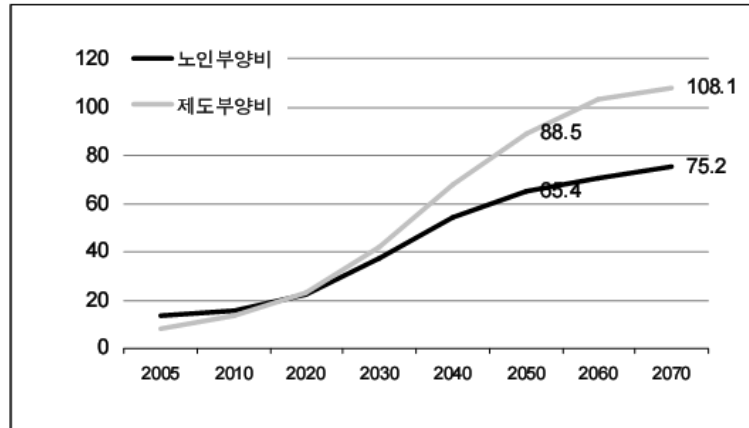
제 4장.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분석

1. 국민연금제도 현황

공적연금제도는 노령, 은퇴, 사망 등의 위험으로 인한 소득감소 또는 상실 등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방식으로 소득활동기간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위험발생 시 급여를 받는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1975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된 이후 점진적인 제도의 확장을 거쳐서 1999년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전 국민 국민연금시대를 실현하였다 (김진수 외, 2008).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대두된 연금재정 적자로 인한 연금제도 불신이 깊어지고 있으며, 연금 수급 균형을 위한 해결방안은 근로세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50년경에는 OECD 국가 중 인구고령화 정도가 상위 3번째에 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 2001).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연금급여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이들을 부양할 근로인구가 감소함으로써 부과방식 속성을 내포하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불안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기인한 재정 불안정 요인을 적기에 제거하지 못할 경우 국가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여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의 존재 등으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아래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구조의 변화는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부양비를 노동인구가 부양할 수 있는 부양비 수준 이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림 4-1> 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 추이



자료 : 노대명 외 (2006), p.140.

주: 노인부양비 = 65 + / 18~64세, 제도(노인)부양비 = 노령수급자 / 가입자

김진수 외 (2008)는 현재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따르고 있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는 저성장 등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장기적으로 재정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하며 중요한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국민연금제도 가입 및 연금보험료 납부, 연금수혜 등의 제반 사항에 필요한 소득 파악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에 불공평성이 존재하고 있다.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고찰 및 수정 또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그 목적상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현재 법적·제도적으로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이 발생하고 있다. 김진수 외 (2008)에 따르면 현재 노령계층의 33.5%~49.3%가 국민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제도 내부의 사각지대도 존재하는데 김진수 외는 이러한 사람을 전체가입자의 22.6%정도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는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다양한 사안들 - 지배구조문제, 수익성과 안정성의 조화문제, 기존 기금운용과 관련된 정부의 개입 문제 등 - 또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 연구와 연금개혁 제안 등으로 나타났으나 제도개선 및 연금개혁에 있어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여 왔다. 윤석명 외 (2006)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이견들을 국민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원칙 및 제도 도입 취지를 강조하여 소득대체율을 하향조정하지 않고 연금보험료 부담수준을 증가하자는 입장; 국민

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어 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 사회보험방식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저소득 또는 빈곤 노인에 국한하여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공적부조제도를 확대하자는 입장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윤석명 외는 이러한 이견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연금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적용의 보편성 (universal coverage), 급여지급의 적정성 (adequacy of benefit), 제도의 지속가능성 (substantiality)의 정책목표가 서로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이외에도 제도가 시행되는 상황과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의 특성 때문에 성적 편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된다. 류연규·황정임·석재은의 2007년 연구와 류연규·황정임의 2008년 논문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성적 편향성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연금 급여의 수급 불평등성, 여성의 고용기간이 남성에 비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급의 불안정성, 여성의 직업적 특성에서 오는 낮은 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이 유발하는 연금 수급액의 불충분성,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의 가입불완전성에 따르는 수급권의 불안정성 등에 의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필수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가지는 성적인 차별성을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제도의 가입, 보험료 납부, 연금급여의 수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성적 차별적인 적용이 존재한다면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정책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2.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

1)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제도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지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사업장이란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당연적용사업장을 말하며 2006년 1월부터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이에 해당된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단,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제외
-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 중에서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 자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도달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로 남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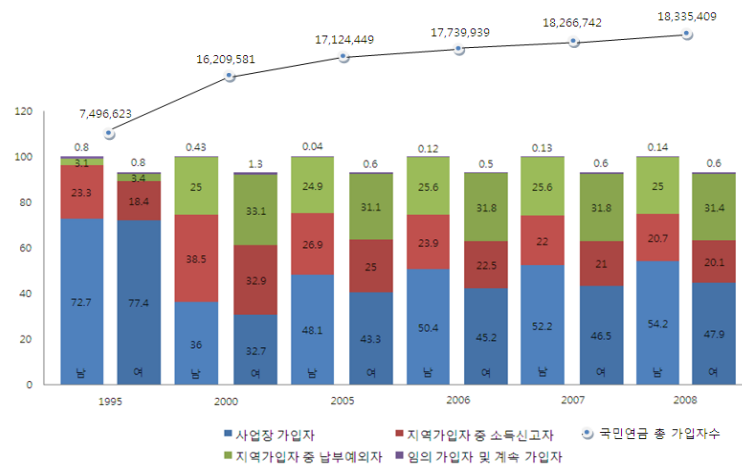
이렇게 가입자 유형별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4-1> 및 <그림 4-2>와 같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988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적용 대상으로 하여 약 443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그 대상범위가 1995년 농어촌지역 거주자, 1999년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확대되어 2009년 말 현재 1,86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199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가입을 확대 추진한 이후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비중이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4-1> 성별·가입자 유형별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총 가입자 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소득 신고자	납부 예외자		
1995	계	7,496,623	152,463	5,541,966	1,650,958	239,229	48,710	15,760
	남	5,538,987		4,027,112	1,290,719	173,281	34,554	13,321
	여	1,957,636		1,514,854	360,239	65,948	14,156	2,439
2000	계	16,209,581	211,983	5,676,138	5,972,708	4,446,465	34,148	80,122
	남	11,332,395		4,081,518	4,368,046	2,833,234	4,321	45,276
	여	4,877,186		1,594,620	1,604,662	1,613,231	29,827	34,846
2005	계	17,124,449	646,805	7,950,493	4,489,216	4,634,459	26,568	23,713
	남	11,061,739		5,323,606	2,971,503	2,751,152	6,346	9,132
	여	6,062,710		2,626,887	1,517,713	1,883,307	20,222	14,581
2006	계	17,739,939	773,862	8,604,823	4,150,416	4,935,952	26,991	21,757
	남	11,293,404		5,692,740	2,699,533	2,887,197	6,612	7,322
	여	6,446,535		2,912,083	1,450,883	2,048,755	20,379	14,435
2007	계	18,266,742	856,178	9,149,209	3,956,340	5,106,803	27,242	27,148
	남	11,462,183		5,981,796	2,525,462	2,939,611	6,911	8,403
	여	6,804,559		3,167,413	1,430,878	2,167,192	20,331	18,745
2008	계	18,335,409	921,597	9,493,444	3,755,980	5,025,503	27,614	32,868
	남	11,369,032		6,156,545	2,356,164	2,839,782	7,125	9,416
	여	6,966,377		3,336,899	1,399,816	2,185,721	20,489	23,452
2009	계	18,623,845	979,861	9,866,681	3,627,597	5,052,264	36,368	40,935
	남	11,409,767		6,304,399	2,230,372	2,853,147	9,115	12,734
	여	7,214,078		3,562,282	1,397,225	2,199,117	27,253	28,201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2010). 국민연금 통계연보

<그림 4-2> 년도 별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현황



위의 <표 4-1>에 의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남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약 74%이던 것이 2009년에는 61.3%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성 가입자의 1.5배가 넘는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구

최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있어서 국민연금제도의 실질적 권리 주체인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임미영과 한인숙 (2002)은 국민연금을 구조 자체가 가지는 속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구조 자체가 불평등할 경우에는 그러한 불평등이 확대·재생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원리와 연금지급 형태가 제도적 근간으로 여성의 노령빈곤 방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복지제도화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비버리지는 사회보험을 기혼여성에 대한 복지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Beveridge, 1942; 임미영·한인숙, 2002에서 재인용). 이때 적격성 (eligibility)의 적용 범위 및 기준은 여성을 어떠한 존재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의 확대,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국민연금제도의 성숙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의 분석과는 달리 좀 더 분석범위를 세밀화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수혜가 가입에서 시작되므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진입과 배제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라 할 수 있는 ‘가입 적격성’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김진수 외 (2008)는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와 수급자 유형별 지위특성에 따른 제도인식을 비교평가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가입자와 수급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정확성은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가입자는 수급자보다 낮은 신뢰수준을 나타냈다.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가입자는 수급자보다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신 이유는 ‘운영기관의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가입자 및 수급자 사이의 인식 차이를 발견하여 연금법 개정의 당위성에 대한 재고를 제안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는 지역가입자대상이 많은 실정이다. 여기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은 대부분의 전업주부는 사업장 가입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자가 되어서 노후소득준비를 할 수 있는데 2009년 기준으로 여성 임의가입자 수는 27,253명으로 지극히 적은 수의 여성이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여성의 가입자 유형별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4-2>와 같다. 1995년 이후 여성가입자수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09년의 경우 총 여성가입자 중 사업장 가입자는 49.4%였으며,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자는 19.4%, 납부예외자는 30.5%를 차지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가 많다는 것인데, 납부예외자는 지역가입의 가입 대상자이나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 연금의 필요성이 큰 집단이지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여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입자 유형을 남성과 비교해 보면(앞의 <표 4-1> 참조), 남성의 경우 55.3%가 사업장 가입자이며,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25.0%로 나타났다.

<표 4-2> 여성 가입자 유형별 국민연금 가입비중

(단위 : 명, %)

년도	총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1995	1,957,636 (100)	1,514,854 (77.4)	360,239 (18.4)	65,94089 (3.4)	14,156 (0.7)	2,439 (0.1)
2000	4,877,186 (100)	1,594,620 (32.7)	1,604,662 (32.9)	1,613,231 (33.1)	29,827 (0.6)	34,846 (0.7)
2005	6,062,710 (100)	2,626,887 (43.3)	1,517,713 (25.0)	1,883,307 (31.8)	20,222 (0.3)	14,581 (0.2)
2006	6,446,535 (100)	2,912,083 (45.2)	1,450,883 (22.5)	2,048,755 (31.8)	20,379 (0.3)	14,435 (0.2)
2007	6,804,559 (100)	3,167,413 (46.5)	1,430,878 (21.0)	2,167,192 (31.8)	20,331 (0.3)	18,745 (0.3)
2008	6,966,377 (100)	3,336,899 (47.9)	1,399,816 (20.1)	2,185,721 (31.4)	20,489 (0.3)	23,452 (0.3)
2009	7,214,078 (100)	3,562,282 (49.4)	1,397,225 (19.4)	2,199,117 (30.5)	27,253 (0.3)	28,201 (0.4)

출처: 국민연금공단 (2010). 국민연금 통계연보

아래 <표 4-3>을 살펴보면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서 2009년 기준으로 20~60세 사이 여성의 25.8%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20~60세 사이인구의 45.8%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표 4-3> 성별,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비중 (2009년)

(단위 : 천명, %)

연령	총 여성인구	국민연금 가입자	총 남성인구	국민연금 가입자
20~24세	1,498	375(25.1)	1,647	187(11.4)
25~29세	1,874	820(43.8)	1,996	943(47.2)
30~34세	1,853	628(33.9)	1,975	1,211(61.3)
35~39세	2,121	675(31.8)	2,235	1,446(64.7)
40~44세	2,024	718(35.5)	2,108	1,383(65.6)
45~49세	2,095	715(34.1)	2,144	1,361(63.5)
50~54세	1,851	621(33.5)	1,882	1,195(63.5)
55~59세	1,316	407(30.9)	1,302	801(61.5)
60세 이상	4,778	28(0.6)	3,402	13(0.4)
계	19,410	5,014(25.8)	18,691	8,557(45.8)

출처: 국민연금공단 (2010). 국민연금 통계연보

<표 4-4 >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성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개월 수

보험료 납부 개월 수	가입자(%)	적용제외자(%)	가입확인 대상자*(%)	합계(%)
없음(모두)	24,056(0.35)	6,016,155(73.39)	519,125(58.86)	6,559,336(40.99)
1년 미만	2,407,570(34.56)	706,242(8.66)	137,275(15.57)	3,251,087(20.32)
1년 이상~2년 미만	791,760(11.37)	338,544(4.15)	68,677(7.79)	1,198,981(7.49)
2년 이상~3년 미만	655,586(9.41)	243,005(2.98)	45,989(5.21)	944,580(5.90)
3년 이상~4년 미만	547,940(7.87)	193,020(2.37)	32,465(3.68)	773,425(4.83)
4년 이상~5년 미만	479,791(6.89)	156,501(1.92)	23,316(2.64)	659,608(4.12)
5년 이상~6년 미만	400,894(5.75)	126,089(1.55)	16,632(1.89)	543,615(3.40)
6년 이상~7년 미만	316,884(4.55)	94,627(1.16)	11,504(1.30)	423,015(2.64)
7년 이상~8년 미만	262,000(3.76)	71,788(0.88)	7,752(0.88)	341,540(2.13)
8년 이상~9년 미만	254,681(3.66)	52,785(0.65)	5,376(0.61)	312,842(1.96)
9년 이상~10년 미만	321,709(4.62)	39,518(0.48)	3,863(0.44)	365,090(2.28)
10년 이상~15년 미만	333,739(4.79)	89,673(1.10)	7,967(0.90)	431,379(2.70)
15년 이상~20년 미만	126,290(1.81)	23,162(0.28)	1,703(0.19)	151,155(0.94)
20년 이상	43,475(0.62)	2,259(0.03)	253(0.03)	45,987(0.29)
Total	6,966,375(100.0)	8,153,368(100.0)	881,897(100.0)	16,001,640(100.0)

출처: 유호선 (2010). p. 198 <표 6>, 일부 백분을 덧붙임

주: 가입확인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을 하였다가 납입을 중단한 경우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인지에 대한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말함.

국민연금연구원의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보고한 유호선 (2010)의 연구에 의하면 2009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총 16,001,640 명이며 이 중에서 약 70% 만이 국민연금의 가입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체 여성 중에서 약 41%는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약 20% 정도는 1년 미만의 보험료 납부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여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특히 2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여성의 수가 전체의 약 0.29%에 그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여성도 3.64%에 그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충분치 못한 여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 4-4> 참조).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직업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2008년 기준으로 취업 여성 중에서 33.8%만이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표 4-5>), 직업 유형으로 볼 때 광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99%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체 취업여성 중에서 광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0.02%에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높은 가입률이 전체 여성 취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 취업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직업유형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전체 취업여성의 31.02%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여성 취업자는 18%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의 경우 취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비중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남성의 경우 직업유형별 가입자는 전체 남성 취업인구의 62.2%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2010).

<표 4-5> 여성 직업유형별 국민연금 가입비중 (2008년)

(단위: 명, %)

	직업 유형별 여성취업자 수	국민연금 가입여성	취업 여성 중 국민연금 가입비중
계	9,874,000 (100.0)	3,336,899	33.8%
농·임·수렵 및 어업	783,000 (7.93)	10,988	1.4%
광업	2,306 (0.02)	2,287	99.2%
제조업	1,270,000 (12.86)	774,010	60.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7,000 (0.17)	9,008	53.0%
건설업	175,000 (1.77)	125,837	71.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063,000 (31.02)	552,419	18.0%
운수창고, 통신업	263,000 (2.66)	85,027	32.3%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251,000 (12.67)	632,082	50.5%
사회 및 개인서비스	2,631,000 (26.65)	1,145,241	43.5%

출처 : 국민연금공단 (2010). 국민연금 통계연보, 노동부 (2008).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유호선 (2010)의 연구는 국민연금에 가입 이력이 있는 여성들의 기준소득월액 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4-6>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가장 높은 구간인 360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약 2.07%에 불과한 232,207명에 불과하였으며 이 중에서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는 205,403명에 그쳐 전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16,001,640 명의 1.2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기준 소득월액의 최하 등급인 22만 원 이하인 여성은 2,791,334명이며 이 중에서 1,779,649명 (전체 16,001,640명의 11.2%)으로 가장 많은 여성이 기준소득월액 최하 등급에 해당한다.

<표 4-6> 기준 소득월액에 따른 여성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천원)	가입자(%)	적용제외자(%)	가입확인 대상자(%)	합계(%)
220 이하	1,779,649(22.55)	935,639(24.91)	76,046(14.76)	2,791,334(24.84)
221 ~ 499	75,931(1.09)	521,604(13.89)	51,547(10.01)	649,082(5.78)
500 ~ 749	607,443(8.72)	639,329(17.02)	81,972(15.91)	1,328,744(11.82)
750 ~ 999	1,430,630(20.54)	738,286(19.66)	123,327(23.94)	2,292,243(20.4)
1,000 ~ 1,249	1,095,976(15.73)	410,383(10.93)	78,400(15.22)	1,584,759(14.1)
1,250 ~ 1,499	573,622(8.23)	195,520(5.21)	41,327(8.02)	810,469(7.21)
1,500 ~ 1,999	605,215(8.69)	174,514(4.65)	35,799(6.95)	815,528(7.26)
2,000 ~ 2,499	304,639(4.37)	68,632(1.83)	13,596(2.64)	386,867(3.44)
2,500 ~ 2,999	173,891(2.50)	34,642(0.92)	6,754(1.31)	215,287(1.92)
3,000 ~ 3,599	113,976(1.64)	14,379(0.38)	2,661(0.52)	131,016(1.17)
3,600 이상	205,403(2.95)	23,135(0.62)	3,669(0.71)	232,207(2.07)
total	6,966,375(100.0)	3,756,063(100.0)	515,098(100.0)	11,237,536(100.0)

출처: 유호선 (2010). p. 199 <표 7>, 일부 백분율 덧붙임

연금의 사각지대를 연구한 최현수 (2002)는 여성 가구주의 경우 남성 가구주와 비교할 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월등히 높아 (56.7%와 31.0%) 여성 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국민연금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로 지적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3. 국민연금 보험료

1) 국민연금 보험료의 성격 및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대상으로서의 소득에 대해 법률적 시각에서 분석하면 현행 국민연금

은 가득한 소득에 대한 일정률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득한 소득으로 부담능력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최원, 2009). 추정한 소득에 의한 과세는 조세공평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을 희생해서라도 과세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방식에 있어서 추정소득에 의한 보험료 부과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앞서 최원 (2009)이 분석한 바와 같이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으로부터 결정되며 현행 제도에 따르면 최저 22만원부터 최고 360만원까지의 범위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중에서 4.5%를 가입자가 납부하며 나머지 4.5%는 사용자가 납부하게 되어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은 소득으로 가입자 자신이 기준소득월액을 설정하여 신고하게 되며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종사업종 등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서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후에 농어업인이 된 자에 한해서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있다. 2010년 현재 기준소득월액이 790,000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이 791,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액으로 35,550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그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였으나, 임의가입의 유인을 위해 2010년 7월 1일부터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에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다. 이로 인해 2009년 4월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38만원이었으나 2010년 7월 1일부터는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인 99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2) 여성과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여성의 표준소득 월액별 국민연금 가입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 <표 4-7>에 의해 2009년 표준 소득월액별 여성가입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입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1.5%가 소득구간 50만원에서 95.5만원 사이에 속하고, 다음으로 많은 가입자 (24.7%)가 소득 95.5만원에서 125만원 사이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여성 가입자의 60%가량이 소득 125만원 이하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보고한 2008년의 중위수 기준소득

월액 129만원 비교해 볼 때 여성의 경우 60%가 중위수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남성 가입자와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 표준소득월액 최고상한인 301만원 이상의 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은 2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 성별 기준소득 월액별 국민연금 가입비중 (2009년)

(단위 : 명, %)

소득구간	여성 가입자 수	여성 가입자 비중	남성 가입자 수	남성 가입자 비중
50만원 미만	77,730	1.5	113,174	1.4
50만원~95.5만원 미만	1,577,596	31.5	1,452,369	17.0
95.5만원~125만원 미만	1,240,132	24.7	1,453,222	17.0
125만원~151.5만원 미만	670,555	13.4	850,184	9.9
151.5만원~181만원 미만	397,539	7.9	651,279	7.6
181만원~213.5만원 미만	297,371	5.9	623,519	7.3
213.5만원~247.5만원 미만	204,477	4.1	534,074	6.2
247.5만원~301만원 미만	199,073	4.0	706,397	8.3
301만원 이상	350,488	7.0	2,162,420	25.3
총 가입자 수	5,014,961	100.0	8,556,620	100.0

출처: 국민연금공단 (2010). 국민연금 통계연보

이러한 결과는 앞 절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같은 직종이라도 여성의 급여가 남성의 급여보다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1) 국민연금의 급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의 급여가 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이 반영되어 실질가치를 보장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하여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과 군복부 크레딧을 2008년 이후부터 도입하였다. 이 중 출산 크레딧은 2자녀 이상인 경우부터 주어지게 되며 추가로 인정되는 기간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인 경우는 30개월, 4명인 경우는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는 50개월이다. 이러한 기간 동안 소득은 평균소득월액의 전액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의 다양한 급여 중에서 노령연금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다.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여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급여액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김수완, 2006)라고 설명된다. 김수완 (2006)은 출산 크레딧 도입에 대한 논문에서 여성의 출산 크레딧은 출산 및 육아 등으로 단절되는 소득활동기간을 인정해 주어 개별 수급권 확보와 급여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크레딧이 연금수급액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출산 크레딧 제도가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실제로 출산 크레딧 제도의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출산 크레딧 제도가 논의되고 도입된 시점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의 의의보다는 출산 장려 및 지원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김수완, 2006).

국민연금의 급여는 매월 지급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이 있다. 연금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기본연금액에 연금종별 지급률 및 제한율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이다. 부양가족의 대상자는 배우자(1인당 연 220,870 원),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1인당 연 147,230원),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1인당 연 147,230원)이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의 연금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4-8>과 같다.

<표 4-8> 국민연금 지급현황추이

(단위: 명, 건, 천원)

	수급자수	건수	금액
1998	1,268,984	1,263,593	2,439,728,567
1999	1,254,621	1,249,257	3,871,969,097
2000	933,720	927,545	1,607,034,932
2001	955,803	948,164	1,569,256,860
2002	1,059,365	1,052,327	1,915,254,978
2003	1,177,378	1,169,441	2,328,449,084
2004	1,541,630	1,533,059	2,914,014,770
2005	1,766,589	1,757,674	3,584,900,642
2006	1,995,984	1,985,502	4,360,238,974
2007	2,256,912	2,244,477	5,182,610,821
2008	2,534,114	2,517,579	6,180,803,696
2009	2,787,091	2,770,344	7,471,933,936

출처: 국민연금공단 (2010). 국민연금통계연보

2) 연금의 조정

(1) 중복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또는 다른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 56조). 즉,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중 두 가지 이상 동시에 받게 될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의 급여가 지급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이 중지된다. 이는 한 사람에게 급여가 과다 지급되는 걸 막고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회보험의 취지가 담긴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연금의 조정은 다른 나라에서도 행해지는 것으로 캐나다의 경우에는 중복 급여가 발생할 경우 유리한 쪽을 선택하고 나머지 급여의 60%를 지급받게 된다. 미국의 경우는 본인의 퇴직 연금을 우선적으로 전액 지급하며, 유족연금이 퇴직연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유족 연금으로 지급한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는 둘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금의 조정은 납부자들로 하여금 국민연금의 보험료 불입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을 수급 받더라도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서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하나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 (예, 전업주부)가 자신의 국민연금을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전액 불입한다고 하더라도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지급이 중복되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서 중복급여의 조정으로 완화되었다. 중복급여가 발생한 경우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유족연금이 동시에 급여 가능한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였으면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택한 연금이 유족연금인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에도 유족연금의 20%는 지급되지 않는다.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인 경우에는 선택한 급여를 전액 지급받고 반환 일시금은 '사망일시금에 상당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국민연금 급여액은 조정되거나 정지되어서 지급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서 제 3자의 가해로 인해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 안에서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

법에 의해 장애 또는 유족 보상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에서는 그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지급받게 된다.

(2) 부양가족 및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제도에서 부양가족은 연금을 받는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한정된다. 부양가족연금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는 자녀도 포함하여 인정한다. 하지만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연금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명의 부양가족연금대상자는 여러 명 (예, 부와 모)으로부터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즉,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각각의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의 부양가족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자녀는 부부 중 1인의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 된다. 한편,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은 최우선순위 한 명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지급하며, 그 배우자가 다른 연금 수급 시 중복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처럼 수급자격을 가족 (자녀, 부모) 등으로 확대·개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3) 결혼상태 변화로 인한 국민연금 급여

국민연금제도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도 해당 결혼기간 동안 불입한 연금부분에 대해 일 정액을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가 존재한다. 분할 연금이란 이혼한 사람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연금으로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분할 연금은 이혼, 배우자이었던 사람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본인의 60세 도달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되며 급여수준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수준이다. 하지만 혼인 시에 맞벌이로 본인이 자신의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혼한 사람이 재혼을 하는 경우에도 분할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에 의한 분할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또한 분할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도 급여의 중복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두 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혼 당사자 특히 이혼 여성의 개별수급권을 확충하고자 한 면이 있다. 하지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수급 시에는 분할연금이 정지되거나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3) 여성과 국민연금 급여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여성과 국민연금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의 연구는 국민연금의 제도적 안정과 발전에 집중되어 있어 연금 도입과정부터 소외된 여성에 관한 논의는 간과하거나 제한적이었고, 90년대 후반부터 관련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표 4-9> 참조).

<표 4-9> 여성과 국민연금 관련 연구

분야	연구자
여성빈곤과 국민연금	남정림 1992, 김영란 1997, 최선화 1997, 이상록 1998
여성 연금수급권 보장 문제	홍연숙 1998, 김용하 1997
성인지적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영향 분석	김태홍 외 2000, 임미영·한인숙 2002, 이순재 2007, 류연규·황정임 2008
여성 사각지대 문제	안홍순 1996, 김용하 1997, 전지혜 2002
구조적 격차의 문제점	김용하·석재은 1999

성별의 차이는 기대 수명, 노동시장, 재무의사결정 등의 차이와 연결되며, 그 차이는 남성 에 비해 여성이 더 열악하다. 이 차이로 인한 여성의 문제는 곧 여성노인의 문제로 연결된다. 노령 연금수급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 4-10>과 같다. 각 연령별 남성의 연금수급액은 여성의 수급액이 남성보다 현저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성별, 연령별 노령연금 수급현황 (2009년)

(단위: 명, 천원)

		노령연금 연간 수급현황	
		수급자	전체수급액
55~59	계	84,139	344,765,573
	남	57,254	269,062,273
	여	26,885	75,703,300
60~64	계	935,087	2,922,298,973
	남	665,509	2,334,523,082
	여	269,578	587,775,891
65~69	계	743,609	1,797,451,477
	남	510,596	1,395,935,858
	여	233,013	401,515,619
70세 이상	계	386,333	750,308,713
	남	252,409	556,063,209
	여	133,924	194,245,504
총 계	계	2,149,168	5,814,824,736
	남	1,485,768	4,555,584,422
	여	663,400	1,259,240,314

출처: 국민연금공단 (2010). 국민연금 통계연보

이와 같은 연금 수급액 격차를 통해서 국민연금이 여성 노인의 소득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급여의 적격성을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 4-11>는 급여의 적격성을 논의한 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표 4-11> 급여의 적격성관련 논문

	내용	노후빈곤 완화 도움여부	연구자
국 내	2001년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해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개별 가구주가 은퇴한 이후 수급하게 될 연금급여액을 추정하여 노후 빈곤을 측정함. 제도성숙에 따른 수급자 비율과 급여수준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낮아지나 현재의 연금사각지대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노인부부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 공적연금제도의 노후빈곤 완화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함.	X	최현수 2002
	국민연금자료를 활용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는 총자산의 범주에 자가 주택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국민연금급여의 전후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함. 노후에 활용 가능한 총자산의 범주에 자가 주택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 노후빈곤 완화효과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X	권문일 2004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에 따른 노후빈곤 완화효과를 분석함. 분석결과 빈곤율 감소에는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빈곤갭이나 빈곤갭제곱에는 도입 전후 차이가 발생함. 이는 지급대상범위를 좁혀서 이들에게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할 때 빈곤의 심도와 빈곤층 내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임을 의미함.	△	김대철· 권혁진 2007
국 외	인구조사자료를 이용해 노인 빈곤율이 급속하게 감소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이라 간주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노후빈곤을 완화시키는 정도를 추정함. 추정결과 1885~1930년 동안 노인들의 빈곤율을 낮추는데 사회보장급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O	Engelhart·Grubert 2005
	Engelhart·Grubert(2005)의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해 일본 연금개혁으로 인해 변화하게 된 공적연금급여가 노인들의 빈곤에 미친 효과를 분석함. 분석결과 일본의 공적연금급여가 노인들의 후생수준을 높이는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남.	O	Oshio· Shimizutani 2005

국민연금 급여 적격성과 관련한 연구는 사회복지학 관련 연구기관, 국민연금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등에서 다수 행해져 왔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 최근에 행해진 연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몇 가지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여성을 중심으로 급여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가지는 특징과 다양성을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다 (김수완, 2005). 여성은 육아와 출산으로 인하여 고용기간에 단절이 있고, 직업의 특성상 남성과 차별된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연금제도가 가정하고 있는 남성부양자의 피부양 가족으로 연금체계에서 지위가 약하다. 따라서 연금의 수급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노후의 소득 안정화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수완 (2005)은 여성의 개별적 수급권 향상은 육아에 대한 크레딧 확장, 개별 명의의 급여 확대, 보편적 기초 연금의 확충, 연금 제도 자체의 재분배적 요소 포함, 배우자 및 유족 급여의 실질적 가치 보장 등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제언은 다른 연구자들도 동의하는 것으로, 급여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젠더차이를 연구한 류연규와 황정임 (2008)의 경우에도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해서 보편적 기초연금 또는 최저소득보증연금을 통한 기초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여성의 연금가입률이 낮고,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형태의 급여 수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유호선 (2010)은 현행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첫 자녀에게 12개월의 크레딧을 제공한 후 자녀 당 12개월씩 추가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크레딧이 연금수급이나 출산장려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양육크레딧의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선진국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여성의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분석에서는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델링 (microsimulation modelling)의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델링이란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 대한 가상적인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분석방법을 말한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가계, 종업원, 지역 등이 될 수 있다. 조사를 통한 거시적방법론과 달리 미시적인 시뮬레이션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행동과 제도 등의 결과를 모색하는 방법이다 (Rephann & Holm, 2004; Blanchet & Le Minez, 2009). Rephann과 Holm은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델의 장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였는데 우선 단순화된 이론적 요소들을 포함한 실질적인 모델에도 미시경제학의 심층적인 이론이 결합될 수 있다는 것과 개별적이고 미시적인 단위 (개인)와 그보다 큰 계층의 관계를 실질적인 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시적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미시적인 관점과 통합적인 관점에서 해석가능하며 복잡한 종단적인 과정을 분석하는데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미시적 시뮬레이션은 경제학 및 정책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연금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다수 사용되었다. 류연규와 황정임 (2008)은 시뮬레이션 모델이 “실제 사회의 복잡다단한 정책 환경과 맥락을 단순화시키고 정책의 분배효과를 알 수 있는 방법 (p81)”이라고 하였다. 김수완 (2005) 및 류연규와 황정임은 가상적 사례를 설정하여 그 사례가 받게 되는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 보여줌으로써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생각되는 사례를 설정하여 그 사례의 상황을 고려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과 시사점을 이끌어 내었다.

김수완 (2005)은 여성의 공적연금 급여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일제로 지속적으로 고용되는 경우,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하여 고용단절이 있는 경우, 일생동안 유급노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소득대체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전일제로 지속적으로 고용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대체율은 평균 61.3%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급여대체율의 수준이 다소 높아

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급여의 절대수준을 비교한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80%의 급여수준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개인이 국민연금의 최대가입기간인 42년간 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결과이다. 만일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 여성의 급여대체율은 심각하게 감소하여 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의 출산 및 양육 등으로 인하여 고용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소득대체율이 감소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받는 경우라도 고용이 2년간 단절되면 급여대체율이 61.3%에서 58.4%로, 14년이 단절된다면 40.9%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급노동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전 부이며, 이혼에 의한 분할연금은 결혼기간에 따라 급여대체율은 평균소득대비 7%에서 14.6%라는 낮은 수준이 된다. 유급노동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의 유족연금은 남편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이 되더라도 평균소득대비 38%에 해당하여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서 여성의 고용단절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며, 고용경력이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수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만, 김수완의 연구는 2005년에 발표된 연구로 2008년 이후로 추가 실시된 출산크레딧의 영향을 감안하지 않았다.

류연규, 황정임 (2008)은 2007년 통과된 노령연금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 10%, 20%로 변화시킨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성별 특성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국민연금 급여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최저생계비 대비 국민연금 급여액의 비율이 최저 52%에서 최고 98%로 남성의 경우에는 최저 86%에서 최고 128%로 나타나 여성의 고용지위 및 평균 임금이 은퇴이후 국민연금 급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추가 분석으로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임금이 같아졌다고 가정할 때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따른 국민연금의 급여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여성의 경우 최저생계비 대비 국민연금 급여액의 비율이 최저 64%에서 최고 111%로 증가하였으나 남성의 급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고용기간이 같아졌다고 가정할 때 여성의 최저생계비 대비 국민연금 급여액을 계산해 본 결과 다양한 기초연금 수준에서 여성의 대체율이 최저 69%에서 최고 106%로 나와서 고용기간 연장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은 여성이 출산이나 육아 등을 위하여 고용을 단절하기 않고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게 되면 국민연금의 급여가 향상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은퇴에 임박한 55세에서 59세 연령집단의 대표사례를 분석하였는데 그러한 분석을 통하여 국민연금에서 나타나는 급여의 젠더 차이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대표사례 분석은 분석 당시 (2007년 기준) 55세에서 59세 사이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대부분이 연금형태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급여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밝혔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급여수준이 남성보다 더 낮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연구는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폭넓은 도입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보완해 주는 것을 제언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의 단절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출산 및 양육

크레딧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국민연금의 급여계산에는 2008년부터 출산크레딧이 적용된다. 이러한 출산크레딧은 ‘출산율제고와 여성의 연금 수급권의 확대 (유호선, 2010, p. 180)’를 목표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출산크레딧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많다. 예를 들면 출산 크레딧이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고 가입기간 인정이 짧고 현행 법정 모성 휴가기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지수라는 것 등 이다. 이에 유호선 (2010)은 출산크레딧을 양육 크레딧으로 확대 개선하는 것을 제언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자녀 당 크레딧 인정기간을 6개월 부여하고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12개월씩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이나 자녀 당 12개월의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행 출산크레딧이 둘째 자녀 이상부터 적용되어 두 자녀인 경우 12개월, 3자녀인 경우 30개월, 4자녀인 경우 28개월, 5자녀이상인 경우 50개월을 인정하여 주는 것과 비교하면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출산크레딧은 노후소득보장의 측면보다는 출산장려의 측면이 강하지만 첫째 자녀부터 크레딧을 적용하게 되면 이는 출산 뿐 아니라 양육을 포함하는 무급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유호선 (2010)이 제시한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선진국의 양육크레딧 도입 목적을 살펴보면 아래 <표 4-12>와 같다. 즉, 가장 많은 나라에서 양육비용에 대한 보상과 여성의 소득 보증을 양육크레딧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2> OECD 국가의 양육 크레딧 목표

	출산율의 제고	부모 됨에 대한 보상	양육비용에 대한 보상	소득 재분배	모(母)의 소득보증	모(母)의 근로 유인 강화	모(母)의 조기퇴직 유인
Austria	V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	VV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Luxembourg							
Netherlands							
Portugal							
Spain							
Sweden							
UK							

출처: 유호선 (2010) p. 185. OECD (2009). Pension entitlements of women with children: The role of credits within pension systems in OECD countries. Working Party on Social Policy 참고

주) VV는 해당 목표가 양육크레딧의 주요 목적, V는 부가적인 목적으로 설계된 것.

강병창 (2010)은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순연금액의 차이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여성의 순연금액이 남성의 순연금액과 비교하여 학력, 혼인상태, 거주지, 취업지위 등을 고려할 때 낮음을 보여주었다. 강병창의 연구는 소득재분배나 소득불평등의 측면에서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이 혼인을 통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어 여성을 위한 노동시장재진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제언하였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의 수급권과 노후소득 적합성의 문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큰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완화시키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다양한 크레딧제도를 통한 적정 급여 확보를 제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성의 노후 소득 문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85% 정도의 여성 (류연규, 황정임, 2008)들에게 더욱 큰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5.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

앞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해 보고 여성의 가입현황 및 급여의 적격성 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참여의 패턴이 남성과 다르며 그에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가입형태가 남성과 다르다. 국민연금의 수급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크게 가입기간 중의 임금 차이와 가입기간의 길이 차이로 나타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충분히 가입하지 못하며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금의 수령권에 제한이 따르는 것이다.

적정 보험료 적립을 위해 연구자들은 고용정책을 통한 여성과 남성의 급여격차 감소를 제언하고 있으나 사실상 고용정책이 그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고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다. 가입기간 연장을 위해 연구자들은 여성을 위한 크레딧 확대를 국민연금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여성의 고용특성 중에서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고용단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그 가입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제도이다. 현재는 출산크레딧이 도입되었으나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효과는 불투명한 것으로 인식되어 보다 폭넓은 양육크레딧의 도입을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국민연금 가입의 적격성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류연규, 황정임 (2008)은 현재 여성노인의 85%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였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지만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가 존재하게 되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은 노후소득보장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 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의 배우자

지위에 있는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수급을 통한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여성 임의가입자 추이

아래 표 <4-13>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여성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임의가입자의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임의가입자는 2009년을 기준으로 총 27,253명으로 총 국민연금 가입자의 약 0.4%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유호선(2010)이 국민연금연구원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보고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체 여성 16,001,640명 (이 수치는 2009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수치여서 실제로 2008년 12월 31일 말을 기준으로 한 국민연금 가입자 수치의 기준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유호선(2010)의 연구에서도 이 두 가지 수치를 사용함)의 0.13%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전체 모집단에서 임의가입자 수치는 0.13%이지만 적용제외자 8,153,368와 비교할 때 20,489명의 임의가입자는 0.25%에 지나지 않는다.

<표 4-13 > 여성 가입자 중에서 임의가입자 추이

(단위: 명)

년도	총가입자	임의가입자	총 가입자 중 임의가입자 비중
1995	1,957,636	14,156	0.72%
1999	4,722,740	27,891	0.59%
2000	4,877,186	29,827	0.61%
2001	5,026,587	25,874	0.51%
2002	5,370,163	22,290	0.42%
2003	5,881,271	19,148	0.33%
2004	5,918,266	16,610	0.28%
2005	6,062,710	20,222	0.33%
2006	6,446,535	20,379	0.32%
2007	6,804,559	20,331	0.30%
2008	6,966,377	20,489	0.29%
2009	7,214,078	27,253	0.38%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2010)

이러한 임의가입자 수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인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성의 수 (앞의 <표 4-13>에서 적용제외자 중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사람)인 6,016,155의 약 3.4%에 해당되는 수이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에서는 내 연금 갖기 캠페인을 벌여 임의가입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가입에 적합한 중위수 소득월액을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월액 이상에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월액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5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44,25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체 여성 16,001,640명의 약 0.27%에 달한다.

2) 전업주부의 연금 수급액 시뮬레이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의 적용제외자에 해당된다. 우해봉 (2010)은 국민연금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적용제외자 유형을 분석하였는데 2009년 4월 기준으로 전체 13,319,715명의 적용제외자 중에서 무소득 배우자는 전체의 41.55%인 5,534,216명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중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가 44.36%를 차지하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가 40.91%를 차지하여 전체 무소득 배우자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해봉 (2010)은 적용제외자 및 무소득 배우자의 성별 분포를 보여 주었는데 전체 무소득배우자 5,534,216명 중에서 87.9%가 여성 무소득 배우자로 나타났다. 적용제외자에는 무소득 배우자 이외에도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체 적용제외자의 36.5%를 차지하는 여성 무소득 배우자는 단일 집단으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 <표 4-14> 참조).

<표 4-14>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유형에 따른 분포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유형	인원(명)	백분율(%)
18세 이상 27세 미만자	3,343,861	25.10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1,449,651	10.88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109,536	0.8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55,165	5.67
국민연금 수급자	79,308	0.60
무소득 배우자	5,534,216	41.55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2,454,797)	(44.36)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2,263,779)	(40.36)
(국민연금 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354,500)	(6.41)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363,226)	(6.56)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97,914)	(1.77)
기타 (국제이주자, 행방불명된 자 등)	2,047,998	15.38
합계	13,319,735	100.00

출처: 우해봉 (2010), p.316, 국민연금공단의 DB를 이용한 우해봉의 계산

전업주부는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가장 큰 집단 중 하나이다. 우해봉(2010)은 국민연금 부부가입자와 비교할 때 국민연금 가입자와 무소득 배우자로 이루어진 집단은 노후 준비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무소득 배우자로 이루어진 집단은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경제적 상황이 낮고 노후의 소득 원천으로 공적연금 보다는 자녀의 도움이나 근로 활동을 예상하고 있어서 국민연금의 역할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업주부의 노후문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연금제도가 취업자 위주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심각하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자 유형을 두고 있는데 임의가입자인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이 중위수 기준 소득월액 (2009년 4월 기준으로 138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며 이 후 남편의 연금과의 중복급여 조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오고 있다. 중년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하여 연구한 이정화와 문상호 (2010)는 국민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취업 및 취업 경험, 근속연수 등을 꼽았다. 이는 무소득 배우자인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낮음을 의미하며 전업주부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 유인 또한 강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앞 서 강성호와 김경아 (2009)의 연구에서도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는 여성의 경우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확률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임의가입이 여성의 노후 소득 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급여를 살펴보기 위해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사용하였다. 이는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그러한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제도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1) 분석을 위한 가정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가정을 하였다.

- 먼저 전업주부의 남편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 남편의 국민연금의 급여는 2010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급여를 계산하였다.
- 남편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10년인 경우와 20년인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며 10년 동안 가입한 경우에 가입기간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20년 동안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이다. 이와 더불어 20년 가입한 경우는 전업주부의 임의가입기간과 같은 기간을 계산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19년까지를 추가로 계산하였다.
- 가입기간동안 남편의 평균소득월액은 2008년 남성 근로자 월평균 급여액인 2,527,490원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소득인 경우가 소득월액 2,420,000원으로 가정하고 평균소득의 50%인

- 경우와 2010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최대상한인 3,680,000원을 각각 계산하였다.
-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가입기간을 10년인 경우와 20년인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며 10년 동안 가입한 경우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가입하고 2010년부터 급여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하였다. 20년 동안 가입한 경우는 1999년부터 국민연금 전국민 확대 적용이 실시된 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가입하고 2020년에 연금 급여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하였다. 하지만 기준소득월액이나 국민연금 급여 공식에서 사용되는 A값 (연금수급전 3년간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에 적용되는 값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20년 가입의 경우 실제 연금액은 본 분석에서 계산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일 가능성이 있다.
 -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 전년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공시하고 그 금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2009년 4월 기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인 138만원을 평균 가입금액으로 하고 급여를 계산하였다. 2010년 7월 현재에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에서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조정되어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 임의가입의 중위수 소득은 99만원이 될 수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2009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단, 임의가입 시 가입금액이 다양한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50% (69만원) 수준으로 임의가입하는 경우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200%수준 (276만원) 으로 임의가입하는 경우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 2008년부터 시행된 출산크레딧과 군복부크레딧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 2009년 현재 생명표를 바탕으로 남편의 경우 평균 수명은 80세로 아내의 경우 평균 수명은 85세로 가정하였다.

(2) 사례의 구성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먼저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아래의 <표 4-15> A 사례에 나열되어 있다. 앞의 가정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0년인 경우와 20년인 경우를 계산하였으며 국민연금 수급액은 2010년에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계산하였다. 남편의 20년 가입은 이 외에 전업주부의 20년 가입과 같은 기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가입한 경우를 추가로 계산하였다.

<표 4-15> <사례 구성 A> 남편만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B 값)	남편의 기본연금액 계산식
10년 (2000년~ 2009년)	평균의 50% A1-1	$((1.8 \times (A+B) \times (96/120) + 1.5 \times (A+B) \times (12/120) + 1.485 \times (A+B) \times (12/120)) \times (1/12)) / 2$
	평균의 100% A1-2	
	평균의 200% A1-3	
20년 (1990년~ 2009년)	평균의 50% A2-1	$((2.4 \times (A+0.75 \times B) \times (108/240) + 1.8 \times (A+B) \times (108/240) + 1.5 \times (A+B) \times (12/240) + 1.485 \times (A+B) \times (12/240)) \times (1/12))$
	평균의 100% A2-2	
	평균의 200% A2-3	
20년 (2000년~ 2019년)	평균의 50% A2'-1	$((1.8 \times (A+B) \times (96/240) + 1.5 \times (A+B) \times (12/240) + 1.485 \times (A+B) \times (12/240) + 1.47 \times (A+B) \times (12/240) + 1.455 \times (A+B) \times (12/240) + 1.44 \times (A+B) \times (12/240) + 1.425 \times (A+B) \times (12/240) + 1.41 \times (A+B) \times (12/240) + 1.395 \times (A+B) \times (12/240) + 1.38 \times (A+B) \times (12/240) + 1.365 \times (A+B) \times (12/240) + 1.35 \times (A+B) \times (12/240) + 1.335 \times (A+B) \times (12/240)) \times (1/12))$
	평균의 100% A2'-2	
	평균의 200% A2'-3	

위의 계산식에서 A값은 2010년 현재 적용되는 1,750,959으로 계산하였으며 B 값은 평균의 50%인 경우가 1,210,000원, 평균의 100%인 경우가 2,420,000원, 평균의 200%인 경우 3,680,000으로 계산하였다.

아래 <표 4-16>의 사례 B는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전업주부의 임의가입 또한 10년간입과 20년간입으로 계산하였으며 모두 가입시작 년도가 2000년이므로 20년 가입인 경우에는 연금급여가 2020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4-16> <사례 구성 B> 전업주부가 임의가입하는 경우

가입기간	남편의 기준소득월액	전업주부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B 값)
10년	평균의 50%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50% B1-1-1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100% B1-1-2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200% B1-1-3
	평균의 100%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50% B1-2-1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100% B1-2-2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200% B1-2-3
	평균의 200%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50% B1-3-1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100% B1-3-2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200% B1-3-3
20년	평균의 50%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50% B2-1-1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100% B2-1-2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200% B2-1-3
	평균의 100%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50% B2-2-1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100% B2-2-2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200% B2-2-3
	평균의 200%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50% B2-3-1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100% B2-3-2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200% B2-3-3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한 경우의 계산식 중에서 10년 동안 가입한 경우는 앞의 남편 연금 급여액 계산식의 10년 가입과 같은 식이다. 이때 A 값은 2010년 현재 적용되는 1,750,959으로 하였으며 B 값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었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50%인 경우 690,000원, 100%인 경우 1,380,000원, 200%인 경우 2,760,000원으로 계산하였다. 2010년 7월 1일부터 임의가입을 위한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전체의 평균으로 재조정되어 990,000원 이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임의가입의 다양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 사업장 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과 그 절반 수준의 가입금액을 설정하여 계산하였다. 전업주부가 임의 가입한 경우 계산식 중에서 20년 동안 가입한 경우는 남편의 20년 가입 계산식 중에서 A2'패널에 나오는 식과 동일한 식으로 계산하였으며 A 값과 B 값은 전업주부 10년 가입과 동일한 값이다.

(3)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결과

아래 <표 4-17>은 남편만 가입한 경우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각 사례별로 계산한 결과이다.

<표 4-17> 각 사례별 남편의 월 평균 연금액 및 소득대체율*

(단위: 월/원, %)

사례	남편의 연금액	소득대체율	남편 연금액 + 부양가족 연금액	소득대체율
A1-1	214,484	0.18	232,890	0.19
A1-2	302,134	0.12	320,540	0.13
A1-3	393,405	0.11	411,811	0.11
A2-1	475,953	0.39	494,359	0.41
A2-2	654,352	0.27	672,758	0.28
A2-3	840,124	0.23	858,529	0.23
A2'-1	387,516	0.32	405,921	0.34
A2'-2	545,874	0.23	564,280	0.23
A2'-3	710,777	0.19	729,183	0.20

* 소득대체율은 연금액 계산시 사용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대비 연금액으로 계산 하였고, 부양가족 연금액은 2010년 현재 연간 220,870원으로 이를 월단위로 계산한 결과임.

<표 4-1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편 혼자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낮고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높아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양가족연금액을 고려할 경우 최저 11%에서 최고 41%의 수준에 머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입기간이 최근 10년 (A1 패널) 혹은 2000년 이후부터 20년 (A2' 패널)의 경우에는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연금 수급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위의 표는 부부가계에서 남편 혼자 국민연금을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 만으로는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

적인 노후준비의 3층 적인 보장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편이 혼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남편 사망이후의 유족연금을 각 사례별로 계산해 보면 아래 <표 4-18>과 같다.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는 남편의 가입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의 40~60%의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때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의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의 50%이며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는 60%가 된다. 본 분석에서는 앞서 계산된 기본연금액만을 이용하여 유족연금액을 계산하였다. 위의 <표 4-18>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남편보다 오래 사는 전업주부들의 경우 유족연금은 은퇴이전 남편의 표준소득월액의 5%에서 2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8> 각 사례별 유족연금액 및 소득대체율*

(단위: 월/원, %)

사례	유족연금액	소득대체율
A1-1	107,242	0.09
A1-2	151,067	0.06
A1-3	196,703	0.05
A2-1	285,572	0.24
A2-2	392,611	0.16
A2-3	504,074	0.14
A2'-1	232,509	0.19
A2'-2	327,525	0.14
A2'-3	426,466	0.12

* 소득대체율은 연금액 계산 시 사용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대비 연금액으로 계산

다음 <표 4-19>는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자가 되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연금수령액을 계산한 표이다. 전업주부가 임의 가입한 경우 남편의 연금수령액과 본인의 연금수령액을 합하면 은퇴이전 소득 (남편의 기준소득월액)의 15%~81%까지의 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은퇴이후의 소득이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집단이 존재하지만 남편만 가입한 경우와 비교하면 월등히 늘어난 수치이다.

<표 4-20> 은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각 수준에 따른 소득대체율의 증감을 보여주는 표이다. 주부가 국민연금에 추가적으로 임의가입한 경우 소득대체율은 사례에 따라 최저 36%에서 최고 138%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증가는 남편의 급여수준이 낮을수록 컸으며 남편의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에 부인이 임의가입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표 4-20>은 임의가입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증가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연금가입이 길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금의 가입기간이 20년인 경우 부인의 임의가입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증가가 확연하게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19> 각 사례별 전업주부의 연금 수령액 및 소득대체율

(단위: 월/원, %)

사례	본인연금수령액	남편+본인연금수령액	소득대체율
B1-1-1	176,817	391,301	0.32
B1-1-2	226,799	441,283	0.36
B1-1-3	326,763	541,247	0.45
B1-2-1	176,817	478,951	0.20
B1-2-2	226,799	528,933	0.22
B1-2-3	326,763	628,896	0.26
B1-3-1	176,817	570,222	0.15
B1-3-2	226,799	620,204	0.17
B1-3-3	326,763	720,168	0.20
B2-1-1	319,461	706,976	0.58
B2-1-2	409,764	797,280	0.66
B2-1-3	590,372	977,887	0.81
B2-2-1	319,461	865,335	0.36
B2-2-2	409,764	955,639	0.39
B2-2-3	590,372	1,136,246	0.47
B2-3-1	319,461	1,030,237	0.28
B2-3-2	409,764	1,120,541	0.30
B2-3-3	590,372	1,301,149	0.35

<표 4-20> 남편만 가입한 경우와 남편·아내가 모두 가입한 경우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단위: %)

가입기간	남편 급여수준	부인 가입수준	남편 소득대체율	남편+ 부인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의 증가율
10년	50%	50%	0.19	0.32	68%
		100%		0.36	89%
		200%		0.45	137%
	100%	50%	0.13	0.20	54%
		100%		0.22	69%
		200%		0.26	100%
	200%	50%	0.11	0.15	36%
		100%		0.17	55%
		200%		0.20	82%
20년	50%	50%	0.34	0.58	71%
		100%		0.66	94%
		200%		0.81	138%
	100%	50%	0.23	0.36	57%
		100%		0.39	70%
		200%		0.47	104%
	200%	50%	0.20	0.28	40%
		100%		0.30	50%
		200%		0.35	75%

앞의 <표 4-20>은 남편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한 소득 대체율 변화가 주목할 만한 것임을 보여준다. 남편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 전업주부가 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더라도 20년을 가입하면 소득대체율은 남편의 기준소득월액의 58%에 달함을 보여주는 것은 저소득 가구의 노후준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에 의한 중복급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급여를 조정하고 있다. 전업주부가 임의가입하여 남편과 부인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수령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부부가 모두 생존한 경우 각각 자신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다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 선택한 연금이 유족연금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한 연금과 유족연금의 20%를 수령하도록 되어 있다. <표 4-21>은 앞의 사례에서 부부 모두 가입한 경우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것을 가정했을 때 유리한 연금 조합 및 연금 수령액, 소득대체율을 계산한 표이다. <표 4-21>에 의하면 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의 20%를 수령하는 것이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B2-3-1의 경우로 남편의 소득이 높고 전업주부의 연금가입액이 낮은 경우로 20년을 가입한 경우이다.

<표 4-21> 각 사례별 남편 사망이후 연금 수령액

(단위: 원/월, %)

사례	본인연금수령액	유족연금수령액	유리한선택	소득대체율
B1-1-1	176,817	107,242	198,265	0.16
B1-1-2	226,799	107,242	248,247	0.21
B1-1-3	326,763	107,242	348,211	0.29
B1-2-1	176,817	151,067	207,030	0.09
B1-2-2	226,799	151,067	257,012	0.11
B1-2-3	326,763	151,067	356,976	0.15
B1-3-1	176,817	196,703	216,157	0.06
B1-3-2	226,799	196,703	266,139	0.07
B1-3-3	326,763	196,703	366,103	0.10
B2-1-1	319,461	232,509	365,962	0.30
B2-1-2	409,764	232,509	456,266	0.38
B2-1-3	590,372	232,509	636,874	0.53
B2-2-1	319,461	327,525	384,965	0.16
B2-2-2	409,764	327,525	475,269	0.20
B2-2-3	590,372	327,525	655,877	0.27
B2-3-1	319,461	426,466	426,466	0.12
B2-3-2	409,764	426,466	495,057	0.13
B2-3-3	590,372	426,466	675,665	0.18

국민연금제도에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로 중복급여의 조정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많이 지적되어 왔다. 중복급여의 조정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가입한 연금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의 <표 4-21>에서 본 바와 같이 남편의 소득이 높은 경우 전업주부가 낮은 수준(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절반)으로 임의가입한 경우 남편 사망이 부인이 연금수령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발생한 경우라면 본인의 연금가입액 모두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가입이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가 건강하여 연금수령이후의 생활을 누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4)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이 주는 이익의 크기

본 분석에서는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이 남편의 사망이후에 발생하는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계산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임의가입자가 가입기간동안 납부하게 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가치와 일생동안 수령하게 되는 노령연금급여의 가치, 남편 사망이후에 중복급여의 조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액의 가치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모든 가치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먼저, 전업주부가 가입기간동안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가치를 연금수령시점(60세)의 미래가치로 계산하였다. 이 때 가정한 이자율은 5%이다. 다음으로는 전업주부가 연금수령연령에 도달하여 (60세) 사망 시까지 받게 되는 자신의 노령연금의 가치를 연금수령시점의 가치로 계산하였다. 현행 국민연금은 연금의 급여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절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과 이자율을 감안하여 그 가치를 계산하였다. 이때 물가상승률은 4%로, 이자율은 5%로 하여 계산하였으며 현재 여성의 평균수명을 고려하여 사망시점을 85세로 가정하였다. 다음은 남편 사망이후에 중복급여의 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액의 가치를 계산하였는데 이는 두 단계로 나뉜다. 남편의 사망시점부터 부인이 혼자 생활하는 기간을 5년이라고 가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손해발생액을 남편의 사망시점의 금액으로 계산한 다음 다시 그 금액을 부인의 은퇴시점의 가치로 계산하였다. 남편 사망이후 부인이 혼자 생활하는 기간을 5년이라고 가정한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 차이에 의한 계산이다. 손해발생액의 가치를 계산할 때에도 물가상승률만큼 증가되는 연금수령액을 고려하여 가치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계산식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①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연금수령시점 가치

$$FVSST = \frac{ST[(1+r)^n - 1]}{r}$$

FVSST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의 연금수령시점 가치

STT = 국민연금 보험료

r = 이자율 (5%로 가정)

n = 가입기간 (10년, 20년)

② 노령연금 급여액의 연금수령시점 가치

$$PVSSP = SSP \times \left[\frac{1 - \left(1 - \frac{k}{1+k}\right)^n}{\frac{k}{1+k}} \right]$$

PVSSP = 노령연금 급여액의 연금수령시점 가치

SSP = 연금개시년도의 연금수령액

$$k = \left(\frac{1+r}{1+\pi} - 1 \right) \times 100, \quad r=5\%(\text{이자율}), \quad \pi=4\%(\text{물가상승률})$$

n = 연금수령기간 (25년)

③ 손해액의 연금수령시점 가치

$$PVLVP = LP \times \left[\frac{1 - \left(1 - \frac{k}{1+k}\right)^{m_1}}{\frac{k}{1+k}} \right]$$

PVLVP = 손해액의 손해발생시점 가치

LP = 손해금액 (중복급여 조정으로 인한 손해)

$$k = \left(\frac{1+r}{1+\pi} - 1 \right) \times 100, \quad r=5\%(\text{이자율}), \quad \pi=4\%(\text{물가상승률})$$

m₁ = 홀로 사는 기간 (5년)

$$PVPVLP = \frac{PVLVP}{(1+r)^{m_2}}$$

PVPVLP = 손해금액의 연금발생시점 가치

PVLVP = 손해액의 손해발생시점 가치

r = 이자율 (5%로 가정)

m₂ = 은퇴시점부터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기간 (20년)

<표 4-22>는 가입 수준과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의 은퇴시점 가치와 각 수준에 따른 연금수령액의 은퇴시점 가치를 보여주는 표이다. 이 때 은퇴시점이란 연금수급이 시작되는 연령으로 60세이다. <표 4-22>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연금수령액과 연금보험료의 비율이다. 연금가입수준이 낮을수록 연금수령에 따른 이익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래의 계산은 여성이 85세까지 생존할 경우를 계산한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표 4-22> 전업주부 임의가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와 연금수령액의 은퇴시점 가치

가입 기간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은퇴시점 가치 (원) (X)	연금수령액(원)	연금수령액 은퇴시점 가치 (원) (Y)	Y/X
10년	50% 가입: 62,100	9,643,030	176,817	42,519,528	4.41
	100% 가입: 124,200	19,286,059	226,799	54,538,769	2.83
	200% 가입: 248,400	38,572,118	326,763	78,577,251	2.04
20년	50% 가입: 62,100	25,525,191	319,461	76,821,305	3.01
	100% 가입: 124,200	51,050,382	409,764	98,536,828	1.93
	200% 가입: 248,400	102,100,763	590,372	141,967,873	1.39

<표 4-23>은 주부가 임의가입을 한 이후 남편이 주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에 대한 조정을 통한 손해액을 계산한 표이다. 손해발생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각 사례별로 유리한 선택을 한 경우 조정된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러한 손해 금액이 손해 발생 시점 (남편 사망시점)의 가치로 얼마인가를 계산한 다음 이를 앞서 계산한 은퇴시점의 연금수령액과 연금보험료 납부액 등과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 시점인 은퇴시점으로 계산하였다.

<표 4-23> 중복급여 조정으로 인한 손해금액의 은퇴시점가치

(단위: 원)

사례	본인연금 수령액 (X)	유족연금 수령액 (Y)	유리한 선택 (Z)	손해 금액 (X+Y)-Z	손해금액 발생시점가치	손해금액 은퇴시점가치
B1-1-1	176,817	107,242	198,265	85,794	4,955,227	1,867,573
B1-1-2	226,799	107,242	248,247	85,794	4,955,227	1,867,573
B1-1-3	326,763	107,242	348,211	85,794	4,955,227	1,867,573
B1-2-1	176,817	151,067	207,030	120,854	6,980,187	2,630,759
B1-2-2	226,799	151,067	257,012	120,854	6,980,187	2,630,759
B1-2-3	326,763	151,067	356,976	120,854	6,980,187	2,630,759
B1-3-1	176,817	196,703	216,157	157,362	9,088,824	3,425,482
B1-3-2	226,799	196,703	266,139	157,362	9,088,824	3,425,482
B1-3-3	326,763	196,703	366,103	157,362	9,088,824	3,425,482
B2-1-1	319,461	232,509	365,962	186,007	10,743,308	4,049,040
B2-1-2	409,764	232,509	456,266	186,007	10,743,308	4,049,040
B2-1-3	590,372	232,509	636,874	186,007	10,743,308	4,049,040
B2-2-1	319,461	327,525	384,965	262,020	15,133,576	5,703,686
B2-2-2	409,764	327,525	475,269	262,020	15,133,576	5,703,686
B2-2-3	590,372	327,525	655,877	262,020	15,133,576	5,703,686
B2-3-1	319,461	426,466	426,466	319,461	18,451,212	6,954,068
B2-3-2	409,764	426,466	495,057	341,173	19,705,260	7,426,705
B2-3-3	590,372	426,466	675,665	341,173	19,705,260	7,426,705

<표 4-24>는 연금급여의 조정으로 인한 손해와 임의가입으로 인한 이익 등을 비교한 표이다. 이 <표 4-24>는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은 중복급여 조정으로 손해액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의 특성상 평균수명이 긴 여성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 이익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의 가입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50% 수준으로 납부하더라도 국민연금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24> 임의가입과 중복급여 조정으로 인한 이익과 손해액 비교

(단위: 원)

사례	연금수령액 은퇴시점 가치 (X)	연금보험료 은퇴시점 가치 (Y)	손해금액 은퇴시점가치 (Z)	이익금액 (X-Y-Z)	(X-Y-Z)/Y
B1-1-1	42,519,528	9,643,030	1,867,573	31,008,926	3.22
B1-1-2	54,538,769	19,286,059	1,867,573	33,385,137	1.73
B1-1-3	78,577,251	38,572,118	1,867,573	38,137,560	0.99
B1-2-1	42,519,528	9,643,030	2,630,759	30,245,740	3.14
B1-2-2	54,538,769	19,286,059	2,630,759	32,621,951	1.69
B1-2-3	78,577,251	38,572,118	2,630,759	37,374,374	0.97
B1-3-1	42,519,528	9,643,030	3,425,482	29,451,017	3.05
B1-3-2	54,538,769	19,286,059	3,425,482	31,827,228	1.65
B1-3-3	78,577,251	38,572,118	3,425,482	36,579,651	0.95
B2-1-1	76,821,305	25,525,191	4,049,040	47,247,074	1.85
B2-1-2	98,536,828	51,050,382	4,049,040	43,437,406	0.85
B2-1-3	141,967,873	102,100,763	4,049,040	35,818,070	0.35
B2-2-1	76,821,305	25,525,191	5,703,686	45,592,428	1.79
B2-2-2	98,536,828	51,050,382	5,703,686	41,782,760	0.82
B2-2-3	141,967,873	102,100,763	5,703,686	34,163,424	0.33
B2-3-1	76,821,305	25,525,191	6,954,068	44,342,046	1.74
B2-3-2	98,536,828	51,050,382	7,426,705	40,059,741	0.78
B2-3-3	141,967,873	102,100,763	7,426,705	32,440,404	0.32

3) 전업주부의 노후 소득 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 방안

지금까지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으로 인한 다양한 효과를 마이크로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살펴해보았다. 분석 결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몇 가지 제공한다.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집단으로 적극적인 은퇴준비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노후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현재 국민연금에서는 임의가입제도를 두어서 적용제외자들에게도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임의가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 및 중복급여에 대한 손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현재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가입자는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일반적으로 남편보다 평균수명이 길어서 오래 살게 되는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하게 되면 순연금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금의 효과는 소득수준별로 가입기간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전업주

부의 임의가입을 장려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임의가입자가 기준년도의 중위수 평균소득월액 이상으로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 중위수 평균소득월액은 1,380,000원이며 이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는 124,200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이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위수 평균소득월액의 산정에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평균소득월액 이상으로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2010년 7월 1일 이후 사용되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평균소득월액은 99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이 경우의 보험료도 89,100원이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임의가입자가 앞서 사용되었던 사업장 가입자의 중위수 평균소득월액(138만원)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인 690,000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가입자가 가입 가능한 소득월액을 더욱 완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가계소득이 평균 이하인 집단에 대하여 임의가입 소득수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국고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소득월액이 790,000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이 791,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액으로 35,550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이러한 제도를 전업주부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거나 일정소득 이하의 집단에 한해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고려할 때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전업주부의 노후소득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원은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전업주부가 담당하는 출산 및 양육을 비롯한 무급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취지,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 노후 부양 비용의 시간적 분배 등에서 비용보다는 편익이 앞서는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 5장. 은퇴저축 장려를 위한 세제혜택에 관한 성인지 분석

1. 은퇴저축 장려를 위한 제도 및 세제혜택 개요

1) 세제혜택 개요

은퇴소득 준비를 위한 3층 보장체계에서 3층을 차지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저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와 기업차원에서 노후소득 보장 이외에 개인적 차원의 저축을 장려하여 왔다. 특히 저축 장려라는 입장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제혜택으로 인한 세금 수입의 감소보다는 저축을 통한 장기 자본의 형성 및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노인 부양을 위한 정부의 사회보장비용 부담 감소 등의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순재 · 김현수, 2009).

개인연금제도는 2000년 연금과세 개편이후 몇 가지 변화가 있었으며 본 장에서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된 연금저축에 적용되는 특징을 살펴보고 분석하도록 하겠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 부터의 세제적격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분기마다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하게 되어 있다. 노후생활비의 재원으로 사용되기 위한 장기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입기간은 최소 10년으로 하였으며 가입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소득공제의 추징과 2%의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노후의 실질적인 생활비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기 후에는 저축금액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처럼 연금으로 정기적으로 수령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급 주기는 월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금저축의 안정성과 보장성을 위하여 보험사와 은행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원금보장이 규정되고 투신운용사의 개인연금을 제외하고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세제적격연금저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소득공제혜택이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현재 2005년 말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본인 부담금과 합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소득공제를 개인연금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입유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원섭 · 강성호, 2008; 이순재 · 김현수, 2009; 임병진 · 임병학, 2004).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는 E-E-T로 일컬어지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연금저축과 연금의 가치 증가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 (Exempt)되며,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과세 (Taxed)되는 체계이다. 저축을 통하여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저축시기에는 세금을 이연하여 저축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연금소득에 대

한 소득세 (이하 연금소득세라 함)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연금저축을 통해 수령하는 총연금액에 대해 5.5%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다. 또한 연간 총 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연간 총 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도록 되어 있다.

2) 개인연금을 통한 은퇴저축 현황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3층 체계인 개인연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낮은 세대 가입률과 유지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순재 · 김현수, 2009). 노동패널자료를 중심으로 개인연금가입률을 살펴본 김원섭 · 강성호(2008)의 연구에 의하면 2006년 개인연금에 가입한 가구는 전체가구의 14.8%에 지나지 않으며 월평균 납입보험료의 수준은 24.6만원에 그쳤다. 이는 실제로 개인연금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노후생활비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노후생활비 재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에 가입한 이후에는 이를 장기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2000년도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김원섭 · 강성호의 분석에 의하면 개인연금을 2년차까지 유지하는 가구의 비율은 69%로 개인연금 가입 첫 해에 약 30%의 가구가 탈퇴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유지율은 년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3년차 유지 가구는 42.8%, 4년차 유지 가구는 27.6%에 불과하며, 6년차까지 유지하는 가구는 불과 7.5%에 그쳤다. 개인연금의 특성상 10년 이상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금을 수급하는 가계가 매우 낮음을 예측할 수 있다.

2001년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된 개인연금상품관련 데이터를 보면, 2001년 총 취업자의 17.5%가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 기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계약건은 373만 건이며 적립액 22.3조원에 이르며 24만 건의 신규계약 실적이 나타났다. 개인연금이 도입된 초기에는 연간 납입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7년 이후 2000년을 제외하고는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신계약 및 보유계약 가입율의 경우도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표 5-1> 참조).

<표 5-1 > 개인연금 계약현황 추이

(단위: 천건¹⁾, 억원²⁾, 백만원³⁾)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신계약1)	4,865	2,471	1,630	908	473	397	595	237
보유계약1)	4,107	4,960	5,178	4,997	4,115	3,811	3,869	3,733
연간납입액2)	23,405	53,849	55,605	52,321	44,259	41,587	42,425	35,938
적립액2)	19,386	54,163	89,543	120,507	139,654	168,042	196,353	223,583
1건당적립액3)	0.5	1.1	1.7	2.4	3.4	4.4	5.1	6.0
가입률(%)	20.6	24.3	24.9	23.7	20.6	18.8	18.4	17.5

출처: 금융감독원(2005), 개인연금 운용현황관련 자료.

주: 1) 가입률 = 보유계약 건수/총 취업자수

2) 금융회사별 회계연도기준이며, 2001년은 12월 말까지임.

1차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2005)를 토대로 한 개인연금 가입자 비중과 불입기간 및 월납부액은 다음과 같다. 임금근로자의 7.8%가 개인연금에 가입했으며 공적연금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개인연금에 더 높은 가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입기간은 5~10년이 가장 많았고 월납부액은 10~20만원이며 가입유형은 보험이 83.4%로 신탁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참조).

<표 5-2 > 개인연금 가입현황 (2005년)

(단위: 명, %)

구분	합계	취업형태별			공적연금가입			
		임금근로자	자영자	비취업자	가입자	비가입자		
개인연금 가입자(비중)	333 (3.9)	143 (7.8)	87 (4.4)	103 (2.2)	185 (9.7)	148 (2.2)		
관측수	8586	1822	1979	4785	1906	6680		
구분	불입기간			월납부액			가입유형	
	5년 이하	5~10년	10년 이상	10만원 이하	10~20만 원	20만원 이상	신탁	보험
가입자 수 (비중)	119 (34.3)	175 (50.4)	53 (15.3)	94 (28.4)	158 (47.7)	79 (23.9)	57 (16.6)	284 (83.4)
관측 수	347			331			341	

금융감독원(2005), 개인연금 운용현황관련 자료.

보험연구원의 2008년과 2010년 개인연금 가입률 조사 결과를 보면 (<표 5-3> 참조), 개인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2010년 32.2%로 2008년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별·소득별 가입률 조사 결과를 보면, 고연령 및 저소득층의 미가입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2008년 대비 2010년의 중·고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률이 증가한데 비해 저소득층의 가입률만이 하락하였고, 60대 이상의 가입률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표 5-3> 개인연금 가입현황(2008년과 2010년)

(단위 : %)

구분	총 가입률	연령별				소득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2008년	31.8	30.7	36.9	30.8	25.0	21.6	34.4	42.4
2010년	32.2	30.4	36.2	32.4	20.3	20.1	36.3	43.1
상승률 (%p)	0.4	-0.3	-0.7	1.6	-4.7	-1.5	1.9	0.7

출처 : 변혜원, 박정희(2010).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p.212.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2008).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p.151.

<표 5-1>, <표 5-2>, <표 5-3>의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이들 결과를 통해 공적연금의 불충분을 해소하기 위한 개인연금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공적연금의 취약집단이 다시 개인연금의 취약집단이 되는 결과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연금의 취약집단에 대한 가입 유인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개인연금관련 연구는 1994년 도입 전후와 2000년 소득세법 개정 전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94년 개인연금 도입전후의 연구로는 개인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정착방안을 제시한 김원식 (1996)과 1994년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해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여도를 분석한 문숙재 · 김연정 (1997) 등의 연구가 있다. 김원식 (1996)은 개인연금의 장기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른 연금상품으로의 이전성 보장, 연금지급액에 대해 물가상승반영, 축적된 기금을 이용한 장기금융상품 운용 여건 마련, 별도의 연금기금 · 연금보장보험설립을 통한 수급권 보장, 개인연금의 사회보장 장치로서의 정부 규제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문숙재 · 김연정 (1997)은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못한 계층을 중심으로 한 높은 가입확률을 개인연금 도입 취지인 노후소득보장에 부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승훈 외, 2006).

2000년 소득세법 개정 전후로는 주로 개인연금의 과세 효과를 다룬 연구가 다수이다. 전영준 · 한도숙 (2000)은 개인연금의 조세지원이 민간의 순저축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자산간의 대체만 가져와 노후소득준비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승훈 외, 2006).

정요섭 (2003)의 노동패널자료 분석에 의하면 개인연금 신규가입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저축, 순금융자산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2001~2003년 기간 중 신규가입 증가폭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노후대비에 관심이 많을수록 노후대비 수단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전승훈 외 (2006)에 의해 2001년 기준 개인연금 가입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 상태가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변화한 경우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인연금을 중도에 탈퇴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공적연금에서 취약한 계층인 여성에게 개인연금이 여성의 노후소득을 위한 저축으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는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 등의 이유로 개인연금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비해 개인연금 가입자 및 가입 상태 분석이 활성화되지 않아 (전승훈 외, 2006) 여성 가입자의 상태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비은퇴자의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가입구조를 살펴본 김성숙 (2009)의 연구는 50대 비은퇴자들을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유형, 공적연금만 가입한 유형, 공적연금과 퇴직금에 가입한 유형, 공적연금과 퇴직금, 개인연금 모두 가입한 유형으로 나누어서 각 유형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여성가계의 경우 무연금형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 개인연금은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가입·유지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 상 개인연금 비가입자일 가능성과 가입을 했더라도 유지비율이 낮은 경우에 속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연금 역시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남성보다 많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발적 노후대비수단으로 여성의 가입유인을 위해 세제혜택 또는 중장년층 여성 맞춤형 상품개발 등이 요구되며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에 관한 적극적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2. 성인지적 관점에서 세제 혜택에 관한 분석

우리나라 세법은 세제적격상품에 한하여 납입금액 전액을 연간 300만원한도(퇴직연금 본인 부담금과 합하여)로 소득공제하여 왔다. 다만 최근 2010년 8월 24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증가한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 분석에서의 은퇴저축 장려를 위한 세제혜택의 분석은 현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공제 혜택 금액 300만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공제액에 의한 세제혜택이 미래에 얼마의 가치를 가질 것인지를 계산하고 그 금액이 은퇴이후에 연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았다. 소득공제 혜택 금액에 대한 성인지 (gender responsive) 분석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공제되는 소득공제가 남녀의 임금차이를 생각할 때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살펴보아 세제혜택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 차이로 인하여 사망 시까지 확정연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 수급의 차이를 살펴보아 불평등이 존재하는지 수급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새로 개편된 소득공제액 400만원을 기준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덧붙였다.

1) 세제 혜택 분석의 기본 가정

은퇴저축 장려를 위한 세제혜택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가정을 하였다.

- 먼저, 세제혜택으로 인한 금액은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연간 300만원씩 불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가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최소 10년 가입을 가정하고,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동안 불입한 경우를 각각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세제혜택으로 인한 금액인 300만원에 대한 부분만 분석하였으며 기타 개인적인 저축금액은 제외하였다. 단 본 분석에서 가정한 기간 동안 300만원 소득공제혜택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 연금저축을 불입하는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불변한다고 가정하였다. 개인의 한계세율이 불입기간 (10년, 15년, 20년..., 35년) 동안 동일하다는 가정이다. 본 가정은 경우에 따라서 다소 보수적인 가정이 될 수 있으나 연금저축 세제 혜택 관련 분석의 기존 연구인 정요섭 (1999, 2003)이 사용한 가정과 동일하다.
-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기간 동안 이자율은 4%와 6%로 적용된다는 두 가지 경우를 계산하였다. 참고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금저축보험의 공시이율은 아래 <표5-4>와 같다. 연금저축의 불입은 매년 말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표 5-4> 연금저축보험 공시기준이율

년도	연금저축보험 공시기준이율
2010년	3.8% (2010년 8월 적용)
2009년	4.6%
2008년	5.5%
2007년	4.7%
2006년	4.5%
2005년	3.8%
2004년	4.3%
2003년	4.9%
2002년	5.6%
2001년	6.3%

출처: 보험개발원 (2010). 공시기준이율

-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 즉 은퇴 이후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은퇴 이전 이자율이 4%와 6% 이외에도 3%와 5%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이는 은퇴이후에 정기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자산운용을 다소 보수적으로 하려는 개인들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연령을 30세, 은퇴연령을 65세로 가정하였으며 연금수급은 은퇴연

령과 같은 65세부터 시작되어 이후 사망 시까지 매년 초에 확정연금이 지급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때, 남성의 경우는 80세까지 여성의 경우는 85세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2008년 통계청의 생명표에 의한 65세 남녀의 기대여명에 따라 설정하였다. 통계청의 생명표에 따르면 6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16.6년이며, 여성의 기대여명은 21.02년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2008).

- 연금저축을 통해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5.5%의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만 분석하기로 하였다. 연금소득에 관한 소득공제와 연금소득의 종합과세는 본 연구의 분석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원천징수되는 5.5%의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해서만을 분석하였다.
- 소득공제대상 퇴직연금 본인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세제혜택 분석모델

본 분석에서 사용된 모델은 아래와 같다.

(1) 소득공제 혜택금액의 미래가치 계산

먼저 소득공제 혜택금액을 혜택 받은 기간 동안 연금저축에 추가로 적립한다고 할 때 예상되는 미래가치를 계산하였다. 이 때 혜택의 기간은 앞의 가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에 따라 각 개인이 연간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고 이 금액을 연금저축에 매년 말에 추가로 적립하는데 이러한 혜택을 10년간 (혹은 15년, ..., 35년) 받는 경우 10년째 (15년째,... 35년째) 연말의 소득공제혜택으로 인한 적립금액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소득공제 혜택 금액의 미래가치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FVS = \frac{S[(1+r)^n - 1]}{r}$$

FVS=소득공제 혜택금액의 미래가치

S=소득공제 혜택 저축액 = 300만원 * 한계세율 * 1.1 (지방소득세 10% 반영)

r=이자율(4%, 6%)

n=소득공제혜택기간(10년, 15년, ... 35년)

여기에서 소득공제 혜택 저축액은 각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들어 한계세

율이 6%인 개인에게 이러한 혜택 저축액은 연간 198,000 (300만원 * 6% * 1.1) 원이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금저축 저축액에 대한 이자율을 4%인 경우와 6%인 경우를 계산하였으며 소득공제혜택기간은 10년부터 5년 단위로 35년 까지를 계산하였다.

(2) 소득공제 혜택 저축액의 은퇴시점 가치

다음으로는 세제적격 연금저축 가입으로 인한 소득공제혜택 저축액을 은퇴시점 (65세)까지 적립·저축 한다고 할 때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하였다. 이는 앞서 소득공제혜택 저축액을 경우에 따라서 10년에서 35년까지 적립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금액을 65세 시점까지 계속 연금저축계좌에 저축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65세에 가지게 되는 금액이다. 소득공제혜택 저축액의 은퇴시점 가치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이 때 소득공제 혜택기간 이후의 추가저축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FVSR = FVS(1+r)^{65-30-n}$$

FVSR=소득공제 혜택저축액의 은퇴시점가치

FVS=소득공제 혜택금액의 미래가치

r=이자율

n=소득공제혜택기간

여기에서는 앞의 가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공제혜택을 30세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금액이 적립되고 계속해서 저축되는 기간은 30세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기간을 제외한 65세까지의 잔여기간이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자율은 4%와 6%, 소득공제 혜택기간은 10년에서 35년까지 5년단위로 계산하였다.

(3) 소득공제 혜택저축액으로부터 연금수령액

그렇다면 소득공제 혜택 저축액을 은퇴시점까지 적립한 자금을 은퇴 이후에 매년 초 연금으로 수령할 때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 계산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이 매년 초에 사망시까지 확정된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여 금액을 계산하였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성의 경우는 15년, 여성의 경우는 20년을 수령한다고 가정하였다. 연금수령액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AD = \frac{FVRS}{\left(\frac{1 - \frac{1}{(1+r_R)^{NR-1}}}{r_R} \right) + 1}$$

AD=소득공제 혜택저축액으로 부터의 연금수령액

FVRS=소득공제 혜택저축액의 은퇴시점가치

rR=은퇴기간동안 수익률

NR=은퇴기간

여기에서 r_R 은 은퇴기간동안의 수익률로 앞의 계산에서 사용한 개인연금 저축액의 4%, 6% 수익률이외에도 3%, 5%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4가지 경우를 계산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은퇴기간 NR 은 남성의 경우 15년, 여성의 경우 20년으로 계산하였다. 이 식에서 계산한 연금 수령액은 매년 초에 지급되는 수령액이다.

3) 소득공제 혜택 금액의 미래가치

본 절에서는 세제혜택을 10년간, 15년간, 20년간, 25년간, 30년간, 35년간 받는다는 가정 하에 그러한 혜택 금액의 총합이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25년 후, 30년 후, 35년 후 각각 얼마인가를 계산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 5-5>는 불입기간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 300만원에 대한 한계세율별 세제혜택의 미래가치(이자율 4%를 가정)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 <표 5-5>에 의하면 한계세율이 6%인 경우 300만원에 대한 세제혜택은 지방소득세 10% 절세를 반영하여 연간 198,000 (300만원 * 6% * 1.1) 이며 이 혜택을 10년 동안 받은 경우 이 금액의 10년 후 가치는 이자율 4%를 적용했을 경우 238만원이다. 한계세율이 15%인 경우에 연간 세제혜택 금액 495,000원에 대한 10년 후의 가치는 594만원 이며, 한계세율이 24%인 경우 연간 세제혜택 금액 792,000원의 10년 후 가치는 951만원, 한계세율이 35%인 경우 연간 세제혜택 금액 1,155,000원의 10년 후 가치는 1,387만원이다.

<표 5-5>는 소득공제 혜택금액의 미래가치가 한계세율이 클수록 저축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저축기간이 길수록 미래가치의 증가가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공제금액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크게 나타나고 저소득층에게는 불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5> 한계세율별 소득공제 혜택금액의 미래가치 (4% 적용)

(단위: 만원)

한계세율	소득공제 혜택금액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6%	198,000원	238	396	590	825	1,110	1,458
15%	495,000원	594	991	1,474	2,061	2,776	3,646
24%	792,000원	951	1,586	2,358	3,298	4,442	5,833
35%	1,155,000원	1,387	2,313	3,439	4,810	6,478	8,507

※ 이하 소득공제 혜택금액에는 지방소득세절세에 대한 혜택이 포함된 금액임

아래 <표 5-6>은 위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금액의 미래가치가 이자율 6%인 경우에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표이다. 한계세율이 6%인 사람의 10년간 혜택금액의 미래가치는 이자율이 4%인 경우 238만원이었으나 이자율이 6%로 증가하게 되면 261만원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자율 증가에 따른 미래가치 증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6> 한계세율별 소득공제 혜택금액의 미래가치 (6% 적용)

(단위: 만원)

한계세율	소득공제 혜택금액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6%	198,000원	261	461	728	1,086	1,565	2,206
15%	495,000원	652	1,152	1,821	2,716	3,913	5,516
24%	792,000원	1,044	1,843	2,913	4,345	6,261	8,826
35%	1,155,000원	1,522	2,688	4,249	6,337	9,131	12,871

이와 같이 연금저축의 소득공제혜택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되어 소득계층에 역진적으로 작용된다. 통계청(2010)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2008년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전 직종에서 남성이 여성의 1.5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5-7>은 직업별, 성별 월 급여를 보여주는 표이다. 이 표에 의하면 남성의 임금은 동일 직종에서 여성 임금의 1.26배 (고위직 및 관리자)에서 1.6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이르고 있다. 각 직업별 남녀의 한계세율을 유추하기는 쉽지 않지만 연간 급여에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금액 300만원만을 고려할 경우 평균적으로 남·녀간에 한계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 직업군은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농업·임업·및 어업 숙련 종사자 그리고 단순노무 종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7> 직업별, 성별 근로자 임금 (2008년)

(단위: 원)

직업	성별	월급여총액	연간급여	한계세율
전직종	남	2,527,490	30,329,880	
	여	1,681,358	20,176,296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남	4,275,956	51,311,472	24%
	여	3,380,292	40,563,504	15%
전문가	남	3,468,183	41,618,196	
	여	2,259,289	27,111,468	
기술공 및 준전문가	남	2,647,161	31,765,932	
	여	1,688,392	20,260,704	
사무 종사자	남	2,668,794	32,025,528	
	여	1,705,462	20,465,544	
서비스종사자	남	1,863,241	22,358,892	
	여	1,375,378	16,504,536	
판매종사자	남	2,134,045	25,608,540	
	여	1,798,871	21,586,452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남	1,908,339	22,900,068	15%
	여	1,208,571	14,502,852	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남	2,138,591	25,663,092	
	여	1,333,749	16,004,98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남	1,995,999	23,951,988	
	여	1,353,663	16,243,956	
단순노무종사자	남	1,474,286	17,691,432	15%
	여	1,091,813	13,101,756	6%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경우 특정 직업에서 직업별 임금 차로 인하여 소득공제혜택의 미래가치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앞의 <표 5-5>와 <표 5-6>에 의하면 한계세율 15%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의 미래가치는 한계세율 6%의 미래가치보다 2.5배 크며 한계세율 24%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의 미래가치는 한계세율 15%인 경우의 미래가치보다 1.6배 크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여건으로 인한 소득공제혜택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노후 자금 마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4) 소득공제 혜택 저축액의 은퇴시점 가치

앞에서는 세제혜택을 10년간, 15년간, 20년간, 25년간, 30년간 받는다는 가정 하에 그러한 혜택 금액의 총합이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25년 후, 30년 후, 35년 후 각각 얼마인가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그러한 혜택 금액을 은퇴 시 (65세)까지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본 분석에서는 개인이 30세부터 소득공제혜택을 적립한다고 가정하였다. 10년 동안 혜택을

받은 경우는 30세부터 10년간 소득공제혜택을 적립하고 이후 40세부터 65세까지는 이 금액을 연금저축계좌에 거치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65세 때 가치를 계산하였다. 마찬가지로 15년 동안 혜택을 받은 경우는 30세부터 15년간 소득공제혜택을 적립하고 이후 45세부터 65세까지 20년간 연금저축계좌에 거치한 65세 때의 가치를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35년간 혜택을 받는 경우는 30세 개인의 연령이 65세가 되므로 소득공제 혜택 저축액의 은퇴시점 가치는 소득공제 혜택금액의 미래가치 (앞의 표 3와 표 4)와 같은 금액이 된다. <표 5-8>과 <표 5-9>에 의하면 한계세율이 6%인 근로자가 30세부터 10년간 연금저축 불입액 300만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은 경우, 그러한 금액을 65세까지 연금저축계좌에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율이 4%인 경우 65세 때 가치는 634만원이 되며 이자율이 6%인 경우는 1,120만원이 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계세율이 24%인 근로자가 30세부터 20년간 연금저축 불입액 300만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65세까지 연금저축계좌에 보유하고 있을 때의 금액은 이자율이 4%인 경우 4,247만원이 되며 이자율이 6%인 경우에는 6,982만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에 따른 혜택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득공제가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이어서 소득계층에 역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준다. 아래 <표 5-8>과 <표 5-9>를 살펴보면 한계세율 15%인 경우의 은퇴시점 가치는 한계세율 6%의 2.5배 금액이 되며, 한계세율 24%는 15%의 1.6배, 35%는 24%의 1.5배 금액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계세율 35%인 경우에는 한계세율 6%인 경우보다 세제혜택을 통한 은퇴시점의 가치가 무려 5.8배의 금액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계소득세율에 따른 격차는 <표 5-10>에 정리하였다. 이는 같은 직업계층이라도 소득수준이 낮은 여성에게 소득공제혜택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소득계층이 낮은 경우에 은퇴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시급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문제는 심각하다.

<표 5-8> 소득공제 혜택의 65세 때 가치 (이자율 4% 적용)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634	869	1,062	1,221	1,351	1,458
15%	1,584	2,172	2,655	3,051	3,378	3,646
24%	2,535	3,475	4,247	4,882	5,404	5,833
35%	3,697	5,067	6,194	7,120	7,881	8,507

<표 5-9> 소득공제 혜택의 65세 때 가치 (이자율 6% 적용)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1,120	1,478	1,746	1,945	2,095	2,206
15%	2,800	3,695	4,364	4,864	5,237	5,516
24%	4,480	5,912	6,982	7,782	8,379	8,826
35%	6,534	8,622	10,182	11,348	12,220	12,871

<표 5-10> 한계세율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의 65세 때 가치 차이

	세율 15%	세율 24%	세율 35%
6% 기준	2.5배	4.0배	5.8배
15% 기준		1.6배	2.3배
24% 기준			1.5배

5) 소득공제 혜택저축액으로부터 연금수령액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소득공제 혜택금액에 대한 연금저축 저축액을 은퇴 시점 (6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정액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하고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았다. 앞의 가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성의 경우에는 65세 이후 15년간을 생존하여 연금수령기간을 15년으로 가정하였고 여성의 경우에는 65세 이후 20년간을 생존하여 연금수령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하였으며 연금은 매년 초에 수령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아래 <표 5-11>과 <표 5-12>는 은퇴이전과 이후 연금저축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4%로 동일할 경우 남성과 여성의 연간 연금수령액을 보여주는 표들이다. 은퇴 시점까지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모은 자금 (앞의 <표 5-8>)을 은퇴이후에 정액으로 사망 시까지 수령한다는 가정에 의한 것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은퇴기간을 15년, 여성은 은퇴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연금수령액에는 차이가 난다. 여성은 남성보다 긴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은퇴시점까지 준비한 동일한 준비금으로부터 수령 받게 되는 연금액이 적다. 남성의 경우 한계세율이 6%인 경우 10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그 금액을 65세까지 연이율 4%인 개인연금 상품에 적립하고 이를 이자율 4%를 유지하면서 15년간 나누어 받는다면 매년 초에 수령하는 연금액은 55만원이 된다. 반면 여성은 그러한 금액을 20년간 나누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년 초에 수령하는 연금액은 45만원이 되어서 남성의 연금 수령액의 약 82% 수준만

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동일한 혜택에 의한 은퇴준비금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해야 하기 때문으로 동일한 혜택으로 인한 여성의 노후생활은 남성의 노후생활보다 낮은 수준을 누리게 됨을 보여준다.

<표 5-11> 소득공제혜택 저축금액으로부터의 연금수령액: 남성 65세 시작 80세 만기,
은퇴 이전 이자율 4%, 은퇴이후 이자율 4% 가정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55	75	92	106	117	126
15%	137	188	230	264	292	315
24%	219	301	367	422	467	504
35%	320	438	536	616	682	736

<표 5-12> 소득공제혜택 저축금액으로부터의 연금수령액: 여성 65세 시작 85세 만기,
은퇴 이전 이자율 4%, 은퇴이후 이자율 4% 가정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45	61	75	86	96	103
15%	112	154	188	216	239	258
24%	179	246	301	345	382	413
35%	262	359	438	504	558	602

위의 <표 5-11>과 <표 5-12>는 한계세율에 따른 연금수령액 격차를 보여준다. 앞의 <표 5-10>에서 본 바와 같이 한계세율에 따른 연금수령액에 격차가 발생하여 한계세율이 15%인 경우는 6%인 경우보다 2.5배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세율이 24%인 경우는 6%인 경우보다 4배, 35%인 경우는 6%의 경우보다 약 5.8배의 연금을 수령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5-13>와 <표 5-14>은 소득공제혜택 저축금액으로부터의 연금수령액을 계산할 때 연금저축의 은퇴이전 이자율을 4%, 은퇴이후 이자율을 3%로 가정한 경우를 보여준다. 이러한 가정은 은퇴시점 이후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은퇴이전보다 전반적인 투자를 보수적으로 운용 할 수 있음을 고려한 가정이다. <표 5-13>와 <표 5-14>에 의하면 한계세율이 6%인 개인이 소득공제혜택으로 인한 절세금액을 30세부터 10년간 4%이자율로 개인연금에 적립하고 그 금액을 65세 시점까지 유지하고 은퇴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매년 초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남성이 15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간 연금수령액은 52만원이며 여

성이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간 연금수령액은 41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계세율이 35%인 개인이 소득공제혜택으로 인한 절세금액을 20년간 적립한다면 남성이 15년간 받게 되는 연간 연금수령액은 504만원이며 여성이 20년간 받게 되는 연간 연금수령액은 404만원이다.

<표 5-13> 소득공제혜택 저축금액으로부터의 연금수령액: 남성 65세 시작 80세 만기,
은퇴 이전 이자율 4%, 은퇴이후 이자율 3% 가정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52	71	86	99	110	119
15%	129	177	216	248	275	296
24%	206	283	345	397	440	474
35%	301	412	504	579	641	692

<표 5-14> 소득공제혜택 저축금액으로부터의 연금수령액: 여성 65세 시작 85세 만기,
은퇴 이전 이자율 4%, 은퇴이후 이자율 3% 가정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41	57	69	80	88	95
15%	103	142	173	199	220	238
24%	165	227	277	319	353	381
35%	241	331	404	465	514	555

이러한 결과를 앞의 <표 5-11>, <표 5-12>와 비교해 보면 은퇴이후 이자율을 3%로 가정한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은 남성의 경우는 이자율 4%인 경우의 94%, 여성의 경우는 이자율 4%인 경우의 92%를 수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3>과 <표 5-14>에서 눈여겨 볼 점은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령액 격차이다. 은퇴이후 이자율을 은퇴이전보다 보수적으로 운용할 경우 앞의 <표 5-11>과 <표 5-12>에서 나타난 격차보다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벌어져서 여성의 연간 연금수령액은 남성 연금수령액의 80%수준에 머문다. 보수적인 운용이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하여 이자율이 낮아지는 경우에 여성의 연금수령액은 남성의 연금수령액 보다 더 많이 줄어들고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자율이 1% 줄어들었을 경우 남성의 연금수령액은 이전 수준의 94%였으나 여성은 92%만을 수령하게 되며, 남성과 여성의 격차 또한 더 벌어져서 이전에는 여성의 연금수령액의 남성 연금수령액의 82%였으나 1%

이자율 하락으로 여성의 연금수령액이 남성 연금수령액의 8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즉, 은퇴자산의 투자성과 악화나 경제상황의 악화, 지나치게 보수적인 운용 등으로 투자수익률이 악화되었을 때 평균수명이 긴 여성의 경우에 남성보다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래 <표 5-15>와 <표 5-16>은 소득공제혜택 저축금액으로부터의 연금수령액을 계산할 때 은퇴이전의 이자율을 6%, 은퇴이후의 이자율을 6%로 가정한 경우의 연금수령액을 보여준다. <표 5-15>에서는 남성의 경우를 보여주는데 65세에 은퇴하여 80세에 사망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의 각 한계세율·세제혜택기간 별에 따른 연금수령액을 보여준다. 10년간 세제혜택을 받은 한계세율 6%인 남성이 65세 이후 사망 시까지 매년 초에 수령하는 연금수령액은 109만원이며 한계세율이 35%인 남성이 65세 이후 사망 시까지 매년 초에 수령하는 연금수령액은 635만원이다.

반면, 같은 가정에서 여성의 경우 65세부터 20년간 수령한다고 할 때 10년간 세제혜택을 받은 6% 한계세율의 여성이 받게 되는 매년 초 연금수령액은 92만원이며, 한계세율 35%의 여성이 매년 초 받게 되는 연금수령액은 537만원이다 (<표 5-16> 참조). 이 때, 은퇴이후 기간이 긴 여성이 매년 받게 되는 연금액은 남성이 받는 연금의 85%수준이다. 이는 앞서 은퇴이전과 이후의 이자율이 <표 5-15> 및 <표 5-16>보다 낮은 경우 (4%) 와 비교하면 남녀격차가 좁아진 수치이나 여전히 여성의 노후생활수준이 남성의 노후생활수준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15> 소득공제혜택 저축금액으로부터의 연금수령액: 남성 65세 시작 80세 만기,
은퇴 이전 이자율 6%, 은퇴이후 이자율 6% 가정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109	144	170	189	203	214
15%	272	359	424	472	509	536
24%	435	574	678	756	814	857
35%	635	837	989	1,102	1,187	1,250

<표 5-16> 소득공제혜택 저축금액으로부터의 연금수령액: 여성 65세 시작 85세 만기,
은퇴 이전 이자율 6%, 은퇴이후 이자율 6% 가정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92	122	144	160	172	181
15%	230	304	359	400	431	454
24%	369	486	574	640	689	726
35%	537	709	837	933	1,005	1,059

<표 5-17>과 <표 5-18>은 연금수령액의 계산에서 은퇴이전의 이자율을 6%, 은퇴이후의 이자율을 5%로 가정한 결과이다. 앞의 <표 5-15>와 <표 5-16>과 비교해 볼 때 은퇴이후 이자율이 1%포인트 낮아진 경우 남성은 연금수령액이 94%수준, 여성은 93%수준이다. 여전히 여성의 연금수령액은 남성의 연금수령액과 차이를 보여 여성의 연금수령액은 남성의 연금수령액의 83%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17> 소득공제혜택 저축금액으로부터의 연금수령액: 남성 65세 시작 80세 만기,
은퇴 이전 이자율 6%, 은퇴이후 이자율 5% 가정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103	136	160	179	192	202
15%	257	339	400	446	481	506
24%	411	542	641	714	769	810
35%	600	791	934	1,041	1,121	1,181

<표 5-18> 소득공제혜택 저축금액으로부터의 연금수령액: 여성 65세 시작 85세 만기,
은퇴 이전 이자율 6%, 은퇴이후 이자율 5% 가정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86	113	133	149	160	169
15%	214	282	333	372	400	422
24%	342	452	534	595	640	674
35%	499	659	778	867	934	984

6) 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세의 남녀 차

앞의 <표 5-11>부터 <표 5-18>은 동일한 크기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은 남성과 여성이 그러한 소득공제혜택으로 인한 저축액을 은퇴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남녀의 평균수명 차이에 의한 연금수령액의 격차를 보여주었다. 본 절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부담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금수령이후에 연금소득에 부과되는 5%의 원천징수세액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5.5% 정도)만을 비교할 때 남성과 여성의 은퇴기간 동안의 세액부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 5-19>과 <표 5-20>는 앞의 <표 5-11>과 <표 5-12>에서 계산된 연금수령액을 남성의 경우 15년간 여성

의 경우 20년간 수령하면서 납부하는 5% 원천징수 연금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을 보여준다. 즉, 10년간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은 한계세율 6%의 남성이 매년 받는 연금소득 55만원(<표 5-11 참조>에 대한 5% 연금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연간 (55만원*5%)*1.1 = 약 3만원)의 15년간 총액이 45만원 (3만원 * 15) 임을 보여준다. 반면, 10년간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은 한계세율 6%의 여성이 매년 받는 연금소득 45만원(<표 9>)에 대한 5% 연금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연간 (45만원 *5%)*1.1= 약 2.47만원)의 20년간 총액은 49만원 (2.47만원 *20)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은 작지만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납부하는 연금소득세가 더 많다. <표 5-19>와 <표 5-20>를 비교해 볼 때 은퇴기간동안 남성보다 여성이 약 1.1배 많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9> 은퇴기간 원천징수 연금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액: 남성 15년간,
은퇴 이전 이자율 4%, 은퇴이후 이자율 4% 가정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45	62	76	87	96	104
15%	113	155	189	218	241	260
24%	181	248	303	348	386	416
35%	264	362	442	508	562	607

<표 5-20> 은퇴기간 원천징수 연금소득세 총액: 여성 20년간, 은퇴 이전 이자율 4%,
은퇴이후 이자율 4% 가정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49	68	83	95	105	113
15%	123	169	207	237	263	284
24%	197	270	331	380	421	454
35%	288	394	482	554	613	662

앞 절에서 계산한 다양한 시나리오 상 연금수령액에 대한 연금소득세의 은퇴기간동안 금액을 비교해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1.1배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면 은퇴시점에서 동일한 자금을 남성과 여성이 서로 상이한 은퇴기간동안 나누어서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세의 은퇴시점가치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다.

3. 한계세를 차이를 통해서 본 남성과 여성의 세제혜택 차이

지금까지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이 남성과 여성의 은퇴에 어떤 혜택을 주는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대한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혜택이 크고 소득이 낮은 경우 혜택이 낮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동일직종 평균 임금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소득공제 혜택이 평균적으로 여성에게 주는 혜택이 남성에게 주는 혜택보다 낮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 <표 5-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은 소득 및 근속연수에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취업자 수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이 전체 임금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크다. <표 5-21>에 의하면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남성 취업자 수는 13,576,000명인데 반하여 여성 취업자 수는 9,669,000명이므로 소득공제 세율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전체적으로 남성에게 여성보다 편중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5-21> 직업별, 성별 평균근속연수와 급여액 (2008년)

직업	성별	평균근속연수	연간급여	남성/여성 급여차	취업자 수 (천명)
전직종	남	6.7	30,329,880	1.5	13,576
	여	4.1	20,176,296		9,669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남	9.0	51,311,472	1.3	488
	여	4.9	40,563,504		46
전문가	남	7.1	41,618,196	1.5	1,246
	여	4.7	27,111,468		1,030
기술공 및 준전문가	남	5.8	31,765,932	1.6	1,578
	여	3.4	20,260,704		940
사무 종사자	남	7.7	32,025,528	1.6	1,790
	여	4.5	20,465,544		1,750
서비스종사자	남	4.3	22,358,892	1.4	910
	여	3.0	16,504,536		2,027
판매종사자	남	5.8	25,608,540	1.2	1,220
	여	3.0	21,586,452		1,392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남	4.7	22,900,068	1.6	783
	여	2.4	14,502,852		52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남	5.9	25,663,092	1.6	1,936
	여	4.2	16,004,988		36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남	6.8	23,951,988	1.5	2,263
	여	4.6	16,243,956		300
단순노무종사자	남	4.0	17,691,432	1.4	1,363
	여	3.0	13,101,756		1,302

더 나아가 소득공제 혜택이 남성과 여성 임금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계소득세율에서 연금저축 300만원을 차감하고 차이를 보이는 직업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위의 <표 5-21> 및 앞의 <표 5-7>을 참고하면,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그리고 단순노무종사자는 연간 급여에서 300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남성과 여성 근로자가 서로 다른 한계소득세율을 가지게 된다. 물론 연간 급여는 소득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종합소득금액과 차이를 보이게 되나 본 분석에서는 그러한 개인적인 차이를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연간 300만원을 저축한다고 할 때 그러한 저축 금액이 공제된 상황만을 비교하였다. 아래의 <표 5-22>는 한계세율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3개의 직업군에 종사하는 취업자 전체가 세제적격개인연금을 300만원 가입하였다는 가정 하에 총 소득공제혜택을 계산하여 보여준 것이다.

소득공제혜택은 [전체 취업자 수 * {(300만원 * 한계세율) * 1.1(지방소득세 감면 고려)}]로 계산하였다. 아래 <표 5-22>에 의하면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경우 남성에게 돌아가는 소득공제혜택의 총액은 약 3,865억 원인데 반하여 여성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에게 돌아가는 소득공제 혜택은 228억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어 남성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여성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약 17배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그리고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의 혜택 차이는 각각 3.75배, 2.61배에 달할 수 있다.

<표 5-22> 직업별, 성별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혜택 금액 (2008년 기준)

직업	성별	연간급여	한계세율	취업자 수 (천명)	소득공제 혜택 총액 (만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남	51,311,472	24%	488	38,649,600
	여	40,563,504	15%	46	2,277,000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남	22,900,068	15%	783	38,758,500
	여	14,502,852	6%	521	10,315,800
단순노무종사자	남	17,691,432	15%	1,363	67,468,500
	여	13,101,756	6%	1,302	25,779,600

4.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고려한 세제혜택 방안 제시

- 남성과 여성의 노후 생활수준이 동일동일한 연금수령액) 하게 되는 소득공제혜택

지금까지 은퇴저축 장려를 위한 세제적격연금저축에 대한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이 누리는 혜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소득공제 혜택 자체의 역진성은 남성과 여성의 노동 구조 차이에 의해 심화되어 전체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 뿐만 아니라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긴 여성은 동일한 혜택을 보게 되더라도 은퇴이후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남성보다 낮은 은퇴생활수준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낮은 은퇴생활은 시장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나타나게 되어서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더욱 크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세제적격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을 여성의 경우 더 많이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제적격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증가하게 되면 여성의 경우에는 은퇴이전에 은퇴시점까지 더욱 많은 자금을 저축할 수 있게 되고 소득공제금액 증가에 따른 세제의 감소는 은퇴시점에서 연금소득세로 일부 충당 가능하게 된다.

그렇다면 세제적격 소득공제금액의 여성에 대한 증가분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은퇴이후의 생활수준에 초점을 두어 은퇴이후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였다.

남성과 여성이 노후생활동안 동일한 수준의 연금을 수령받기 위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의 과정을 적용하였다. 먼저 남성의 연금수령액에서 시작하여 그러한 연금수령액을 얻기 위한 은퇴시점의 저축액을 구하고 그러한 저축액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공제 혜택금액의 미래가치를 구한다음 소득공제 혜택금액의 미래가치로부터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였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① 일정한 수준의 연금수령액을 얻기 위한 은퇴시점 저축액 계산

$$FVSR_m = A_m \left(\frac{1 - 1/(1+r_R)^{N_R-1}}{r_R} + 1 \right)$$

$FVSR_m$ = 은퇴이후 연금수령액을 A_m 으로 유지하기 위한 은퇴시점 저축액

A_m = 은퇴이후 연금수령액 (각 시나리오별로 남성의 연금수령액)

r_R =은퇴기간동안 수익률 (3%, 4%, 5%, 6%)

N_R =은퇴기간 (20년)

여기에서 A_m 은 이자율에 대한 각 시나리오 (은퇴 전 4%, 은퇴 후 4%; 은퇴 전 4%, 은퇴 후 3%; 은퇴 전 6%, 은퇴 후 6%; 은퇴 전 6%, 은퇴 후 5%)별로 계산된 남성의 연금 수령액으로 앞의 분석에서 계산된 <표 5-10> <표 5-12> <표 5-14> <표 5-16>에서 제시된 수치이다.

② 은퇴시점까지의 자금을 구하기 위한 각 혜택기간별 소득공제 혜택저축의 미래가치 계산

$$FVS_m = \frac{FVSR_m}{(1+r)^{65-30-n}}$$

FVS_m = 은퇴이후 연금수령액을 A_m 으로 유지하기 위한 저축액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공제 혜택저축 금액

$FVSR_m$ = 은퇴이후 연금수령액을 A_m 으로 유지하기 위한 은퇴시점 저축액

r =이자율(4%, 6%)

n =소득공제혜택기간(10년, 15년, ... 35년)

앞의 식에서 계산한 은퇴시점까지의 저축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통한 저축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개인연금의 이자율 4%와 6%를 적용하고 10년 이상 5년 단위 소득공제 혜택기간을 고려하였다. 여기에서 계산된 FVS_m 은 앞의 분석에서 계산된 소득공제 혜택저축의 미래가치와 동일한 개념이다.

③ 소득공제 혜택금액의 미래가치로부터 소득공제 혜택 저축액 계산

$$S_m = \frac{FVS_m \cdot r}{(1+r)^n - 1}$$

S_m = 은퇴이후 연금수령액을 A_m 으로 유지하기 위한 각 기간 (10년, 15년, ... 35년) 별 저축금액

r =이자율(4%, 6%)

n =소득공제혜택기간(10년, 15년, ... 35년)

④ 소득공제 혜택기간별 저축 금액으로부터 소득공제 금액 계산

$$S_{mt} = S_m / 1.1$$

S_{mt} = 은퇴이후 연금수령액을 A_m 으로 유지하기 위한 소득공제 금액

소득공제 혜택 기간별 저축 금액으로부터 실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방 소득세 감소분을 감안하기 위하여 앞서 계산한 저축액을 1.1로 나누어 주었다.

1) 연금저축의 은퇴이전 이자율 4%, 은퇴이후 이자율 4%인 경우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여성의 소득공제액

앞의 식에 의하여 은퇴이전의 연금저축 이자율이 4%이고 은퇴 이후에 연금수령을 하는 기간에도 이자율이 4%로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남성과 여성의 노후생활 수준이 동일하게 되는 여성의 소득공제 금액을 살펴본 결과, 여성의 소득공제금액이 366만원인 경우 은퇴이후 남성과 동일한 수준 (여성의 연금수령액이 남성 연금수령액의 99.8%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아래 <표 5-23>부터 제시하였다. <표 5-23>은 소득공제 금액을 366만원으로 증가시켰을 때 각 기간별 소득공제 혜택금액의 미래가치를 보여주며 <표 5-23>은 그러한 혜택을 65세까지 저축했을 때 가지게 되는 금액이다.

<표 5-23> 이자율 4%를 가정할 경우 36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저축의 미래가치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290	484	719	1,006	1,355	1,779
15%	725	1,209	1,798	2,515	3,387	4,448
24%	1,160	1,935	2,877	4,024	5,419	7,117
35%	1,692	2,822	4,196	5,868	7,903	10,378

<표 5-24> 이자율 4%를 가정할 경우 36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65세 때의 가치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773	1,060	1,295	1,489	1,648	1,779
15%	1,933	2,650	3,239	3,723	4,121	4,448
24%	3,093	4,239	5,182	5,956	6,593	7,117
35%	4,510	6,182	7,557	8,687	9,615	10,378

아래의 <표 5-25>는 소득공제 금액 366만원을 적용하였을 경우 그러한 금액 여성이 은퇴 기간 2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 받는다고 가정할 때 매년 초의 연금액이다. 이러한 결과를 앞의 <표 5-11>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령액은 거의 비슷하여 여성이 매년 초 받는 연금액은 남성의 연금액의 약 99.8%가 된다.

<표 5-25> 소득공제혜택 저축금액으로부터의 연금수령액: 여성 65세 시작 85세 만기,
은퇴 이전 이자율 4%, 은퇴이후 이자율 4% 가정 (소득공제금액 366만원)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55	75	92	105	117	126
15%	137	187	229	263	292	315
24%	219	300	367	421	466	504
35%	319	437	535	615	680	734

<표 5-11> 소득공제혜택 저축금액으로부터의 연금수령액: 남성 65세 시작 80세 만기,
은퇴 이전 이자율 4%, 은퇴이후 이자율 4% 가정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55	75	92	106	117	126
15%	137	188	230	264	292	315
24%	219	301	367	422	467	504
35%	320	438	536	616	682	736

2) 다양한 이자율 시나리오에 따른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여성의 소득공제액

연금저축의 은퇴이전 이자율과 은퇴이후 이자율을 다양하게 고려한 앞의 분석과 같이 은퇴이전과 이후 이자율을 고려할 때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령액 수준이 동일하게 되는 소득공제액을 계산한 결과가 <표 5-26>에 제시되어 있다.

<표 5-26>은 성과 여성의 연금수령액 수준이 동일하게 되는 소득공제액을 제시하고 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액은 작아지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증가한다. 은퇴이전 개인연금의 이자율이 4%이며 은퇴이후에는 3%라고 가정할 때 여성이 은퇴이후 사망시까지 남성과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아야 하는 소득공제는 연간 73만원이다. 만일 은퇴이전 개인연금의 이자율이 6%이며, 은퇴이후 이자율 또한 6%라고 가정한다면 여성이 추가로 받아야 하는 소득공제는 연간 54만원이 된다. 이러한 계산에 따른 저축액과 연금수령액은 부표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남성의 연금수령액과 각기 다른 소득공제액에 의한 여성의 연금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26> 다양한 이자율에 대한 가정 하에 은퇴이후 연금수령액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소득공제액

이자율 가정	여성의 소득공제액	남성의 소득공제액
은퇴이전 4%, 은퇴이후 4%	366만원	300만원
은퇴이전 4%, 은퇴이후 3%	373만원	300만원
은퇴이전 6%, 은퇴이후 6%	354만원	300만원
은퇴이전 6%, 은퇴이후 5%	360만원	300만원

3) 추가적인 소득공제 부여에 따른 영향

여성에게 추가의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할 때 미치는 영향으로 우선 세수의 감소가 발생될 것이다. 현행 세법에 의하여 300만원 한도로 주어지는 소득공제를 경우에 따라 350만원 이상으로 증가시키는데 따른 소득세 감소가 불가피 하다.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단기적으로 세수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저축을 통해서 자본을 형성하고 여성노인 부양을 위한 정부의 사회보장 비용 등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장점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득공제 증가로 인한 연금수령액 증가는 연금수령시점에서 연금소득세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서 일정부분 세수감소가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해 볼 때 현재시점에서 추가적인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감소와 미래시점에서 추가적인 연금소득세 수입을 비교할 때 현재의 손실이 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은퇴저축 활성화로 인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의 영향이 더욱 클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소득공제 300만원이 정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 및 임금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여성이 받는 혜택이 남성이 받는 혜택보다 미비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여성을 위한 연금저축 소득공제 증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실제로 아래 <표 5-27>을 보면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남성의 연금관련 소득공제 금액은 여성의 소득공제 금액의 2.79배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을 합한 값을 기준)로 남성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소득공제 혜택금액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7> 성별에 따른 연금관련 소득공제 현황 (2008년)

구분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소득공제			연금저축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 소득공제		
		인원 (원)	금액 (백만원)		인원 (원)	금액 (백만원)	
성별	남	452,125	222,983	남/여 4.32	1,050,006	2,293,214	남/여 2.70
	여	105,646	51,528		408,905	849,667	
계		557,771	274,511		1,458,911	3,142,881	

출처: 국세청(2008).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추가적인 소득공제는 또한 여성의 연금저축가입에 중요한 유인이 될 수 있다. 은퇴준비의 커다란 세 가지 축을 국가의 국민연금, 기업의 퇴직연금, 개인차원의 연금저축으로 볼 때, 개인차원의 저축부분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금가입률을 증대시키는 방안은 시사점이 클 것이다. 특히, 2008년 차경욱 등이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2·30대 근로자의 54.2%는 개인연금 등의 개인 저축이 은퇴 이후의 주요 예상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연금저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임금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은 연금가입 및 연금저축액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세제개편에 따른 영향의 성인지 분석

2010년 8월 24일 현재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관한 소득공제혜택을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마련되어 있다. 정액공제이며 소득에 역진적으로 작용하는 연금저축 세제혜택의 금액이 상향되었을 때 여성에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소득공제 혜택이 300만원인 경우와 400만원인 경우를 비교하고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공제가 얼마가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한 경우 이자율 4%와 6%를 가정할 때 미래가치는 아래 <표 5-28> <표 5-29>와 같다.

<표 5-28> 한계세율별 소득공제 혜택금액의 미래가치 (400만원, 4% 적용)

(단위: 만원)

한계세율	소득공제 혜택금액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6%	264,000원	317	529	786	1099	1481	1944
15%	660,000원	792	1,322	1,965	2,749	3,702	4,861
24%	1,056,000원	1,268	2,114	3,145	4,398	5,923	7,778
35%	1,540,000원	1,849	3,084	4,586	6,413	8,637	11,342

※ 이하 소득공제 혜택금액에는 지방소득세절세에 대한 혜택이 포함된 금액임

<표 5-29> 한계세율별 소득공제 혜택금액의 미래가치 (400만원, 6% 적용)

(단위: 만원)

한계세율	소득공제 혜택금액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6%	264,000원	348	614	971	1,448	2,087	2,942
15%	660,000원	870	1,536	2,428	3,621	5,218	7,355
24%	1,056,000원	1,392	2,458	3,885	5,794	8,349	11,768
35%	1,540,000원	2,030	3,584	5,665	8,449	12,175	17,161

<표 5-28> <표 5-29>를 앞의 <표 5-5> 및 <표 5-6>과 비교해 볼 때 약 33%의 증가를 볼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 100만원의 증가가 각 한계세율별로 미래가치를 따져볼 때 은퇴자금 33%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공제혜택의 은퇴시점 가치를 살펴보면 아래 <표 5-30> 및 <표 5-31>과 같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표 5-8> 및 <표 5-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계세율에 따라 최소 1.5배에서 최대 5.8배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표 5-30> 소득공제 혜택 400만원의 65세 때 가치 (이자율 4% 적용)

(단위: 만원)

한계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845	1,158	1,416	1,627	1,801	1,944
15%	2,112	2,896	3,539	4,069	4,504	4,861
24%	3,380	4,633	5,663	6,510	7,206	7,778
35%	4,929	6,757	8,259	9,494	10,508	11,342

<표 5-31> 소득공제 혜택 400만원의 65세 때 가치 (이자율 6% 적용)

(단위: 만원)

한계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1,493	1,971	2,327	2,594	2,793	2,942
15%	3,734	4,927	5,818	6,485	6,983	7,355
24%	5,974	7,883	9,310	10,376	11,172	11,768
35%	8,712	11,496	13,576	15,131	16,293	17,161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 400만원에 대한 연금수령액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의 <표 5-32>에서 <표 5-35>에 제시되어 있다. 다양한 이자율을 적용하였을 때 남성과 여성의 연금 수령액 차이를 보여준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금저축 세제혜택 금액의 증가로 인한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혜액 차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의 약 80%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소득공제혜택의 증가로 인하여 노후에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표 5-32> 소득공제혜택 400만원 저축으로부터의 연금수령액:

남성 65세 시작 80세 만기, 은퇴 이전 이자율 4%, 은퇴이후 이자율 4% 가정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73	100	122	141	156	168
15%	183	250	306	352	389	420
24%	292	401	490	563	623	673
35%	426	584	714	821	909	981

<표 5-33> 소득공제혜택 400만원 저축으로부터의 연금수령액:

여성 65세 시작 85세 만기, 은퇴 이전 이자율 4%, 은퇴이후 이자율 4% 가정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60	82	100	115	127	138
15%	149	205	250	288	319	344
24%	239	328	401	461	510	550
35%	349	478	584	672	743	802

<표 5-34> 소득공제혜택 400만원 저축으로부터의 연금수령액:

남성 65세 시작 80세 만기, 은퇴 이전 이자율 6%, 은퇴이후 이자율 6% 가정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145	191	226	252	271	286
15%	363	479	565	630	678	714
24%	580	766	904	1,008	1,085	1,143
35%	846	1,117	1,319	1,470	1,583	1,667

<표 5-35> 소득공제혜택 400만원 저축으로부터의 연금수령액:

여성 65세 시작 85세 만기, 은퇴 이전 이자율 6%, 은퇴이후 이자율 6% 가정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123	162	191	213	230	242
15%	307	405	479	533	574	605
24%	491	648	766	853	919	968
35%	717	946	1,117	1,245	1,340	1,411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여성의 추가적인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본 결과는 아래 <표 5-36>과 같다.

<표 5-36> 다양한 이자율에 대한 가정 하에 은퇴이후 연금수령액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소득공제액

이자율 가정	여성의 소득공제액	남성의 소득공제액
은퇴이전 4%, 은퇴이후 4%	485만원	400만원
은퇴이전 4%, 은퇴이후 3%	496만원	400만원
은퇴이전 6%, 은퇴이후 6%	473만원	400만원
은퇴이전 6%, 은퇴이후 5%	480만원	400만원

국민개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주기 위한 세제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노후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따른 정책의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임금 및 고용에 따른 차이와 평균수명에 따른 차이를 감안할 때 여성의 경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노후소득 부양에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비용을 고려해 본다면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제 6장. 결론 및 요약

인구통계적인 변화, 사회경제적인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등은 여성의 노후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가중시켜왔다. 특히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장수위험 (longevity risk)은 여성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인 여건은 여성이 충분한 노후소득을 마련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에서 공적연금제도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과 연금저축 세제혜택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노후 및 은퇴 준비, 여성 노인의 생활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를 고찰하였으며 해외의 연금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핵가족화와 이혼율증가로 인한 가족해체와 가족구조의 급속한 변화의 결과 여성가구주가 증가하여왔다. 여성가구의 두드러진 특징은 빈곤층 여성가구의 증가와 60세 이상 여성가구의 증가이다.

여성은 경제활동 참가 여부 및 형태가 남성에 비해 취약하고, 상당수의 여성이 남성가장의 피부양자로서 배우자의 소득 및 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과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면 심각한 경제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여성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과 연결되어 여성의 노후생활 빈곤을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가 될 수 있다(이순재, 2007). 남성보다 긴 여성의 평균수명이나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을 고려해 본다면 여성 노인의 빈곤 가능성은 높아진다. 한국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는 경제활동 연령에 있는 여성의 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 경제활동 연령 여성의 빈곤이 장기화되고 누적되어 여성 노인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성가구의 빈곤층 증가 이유로 여성의 노후준비나 은퇴계획에 있어서 실행 부족 또한 지적되고 있다. 남성가구의 경우 자녀의 교육 및 양육, 혼인비용 지출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남성 위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며, 여성가구의 경우는 동일한 이유로 자신의 노후준비마저도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후를 위한 준비에는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후에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정책에 성인지적 특성이 반영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여성 노인의 경우 남성에 비해 65세 이후의 노후소득 중에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의 비중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개인연금을 위한 세제혜택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선진국의 경우 최근 퇴직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추계에 따라 후세대의 부담가중과 연금재정 건전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OECD, 2001). 선진국의 경우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을 통한 수급권 보호를 확립하는 형태로 연금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역할분담을 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이 임의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도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역할이나 제도 참여율에 있어서 법정제도와 다름이 없는 기능을 하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방하남 외, 2002).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금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기적 재정 안정을 목표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의 사례처럼 근로유인 강화를 통한 연금지급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들도 있지만, 이러한 해결책은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등에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못한다.

연금재정 안정화는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신규가입을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에게 수급자격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임의가입자들의 가입 유인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선행연구의 결과 노후준비 계획이 남성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남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여 개인연금의 과세에 차이를 두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성에게 성인지적관점에서 동일한 과세 혜택을 준다면, 즉 여성에게 더 높은 과세 혜택을 준다면 은퇴설계 시 여성이 배제되는 것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제언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국민연금 제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가입의 적격성 측면에서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금저축 세제혜택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의 하나로 노후 소득재원의 3층보장체계에서 1층을 담당하고 있는 기본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제도에는 법적, 제도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연금의 사각지대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의 수급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제도 내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노후가 길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에게 국민연금은 중요한 노후 소득 재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가입을 성별로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20~60세 사이의 남성의 45.8%가 가입되어 있는 반면, 여성의 25.8%만이 가입되어 있는 형편이다. 특히,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는 2009년 4월 기준으로 4,864,576명(우해봉(2010) 참조로 계산)이며 무소득 배우자가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인 임의가입자 수는 2009년 12월 기준으로 27,253명에 지나지 않아서 임의가입자가 모두 전업주부라고 가정하더라도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전업주부의 국민연금에 가입률은 최대 0.6%에 그치고 있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연금 갖기 캠페인을 시작하여 임의가입자가 2010년 4월 현재 44,25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 수치를 4,864,576명과 비교해 보더라도 가입률은 0.9%에 그쳐서 채 1%도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후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이고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여성이 전체의 80%이상이라는 기존연구의 결과를 고려해 볼때 여성의 노후 소득 안정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이후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어 전국민 연금이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전업주부의 경우 자신 명의의 연금이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큰 집단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업주부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노후소득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임의가입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평균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업주부 임의가입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안을 제언한다.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연금제도의 성격상 가입기간이 길어야 하며 수혜기간 또한 길어야 순연금 효과가 나타나고 연금의 중복 급여 발생시 조정이 생겨서 연금 보험료를 내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손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수혜 받는 기간이 길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상태가 연금가입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평균적으로 연금가입으로 인한 혜택이 중복급여의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손해 보다는 크며 그러한 혜택은 노후소득안정화가 시급한 저소득층 일수록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의 가입소득월액을 기준연도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월액이상으로 정하여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노후 소득 안정 특히 전업주부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하여 현재 임의가입의 경우 기준연도의 지역가입자 중위수 평균소득월액 이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여 소득수준이 평균 이하인 가계의 전업주부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평균소득월액 이하라도 자유롭게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제언한다. 임의가입의 가입소득월액을 자유롭게 하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를 들면 가계소득이 평균을 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평균소득월액 이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정하고 가계소득

이 평균 이하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와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월액이 790,000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791,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액으로 35,5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보험료의 보조는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예산의 부담이 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만 보조해 주는 방안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금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방안은 연금의 가입기간을 길게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임병인과 강성호 (2005)는 저소득층 일수록 연금의 가입기간이 길어야 소득대체율에 효과가 있어서 이들에게 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된다면 2009년 기준 중위수 소득월액의 50% 수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소득대체율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회보험의 성격상 남편의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에 전업주부의 추가가입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증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우에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3층 보장 중 1층의 역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업주부의 임의가입확산은 여성의 노후소득안정화에 기여하여 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기금을 증가시켜서 국민연금 재정위험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현재 2010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내 연금 갖기 캠페인 - 평생월급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임의가입 최저보험료를 지역가입자의 중위수평균소득월액으로 하향조정하여 연금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의 자발적인 임의가입이 증가한 실정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후소득재원 마련을 위한 연금저축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근로기간 중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노후기간은 상대적으로 긴 여성에게 소득공제 금액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행 노후를 위한 3층 보장에서 개인연금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지만 여성의 가입률이 낮고 여성에게 돌아가는 소득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 여성이 노후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은 세제적격개인연금상품에 한하여 납입금액 전액을 연간 300만원한도(퇴직연금 본인 부담금과 합하여)로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으나 개인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가계는 약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2010년 8월 24일 기준) 세법개정안의 발표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개인부담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늘여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성인지적인 내용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수명이 길고 일생에 걸친 경제활동 패턴이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노후소득재원 마련을 위한 개인적인 저축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

우가 남성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다.

개인적인 연금저축 및 그에 따른 소득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금저축(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세제적격 개인연금) 소득공제를 받은 남성은 1,050,006명인데 반하여 여성은 408,905명에 그쳤으며 소득공제 금액 또한 남성이 여성의 2.70배에 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소득공제에 의한 혜택의 크기는 소득이 큰 집단에게 크게 나타나서 동일한 세제혜택으로 인한 저축을 동일한 기간 동안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은퇴시기까지 (65세 시점) 저축하는 총액을 비교하면 세율이 15%인 경우는 세율이 6%인 경우보다 약 2.5배의 자금을 마련하게 되며 세율이 35%인 경우는 세율이 6%인 경우보다 약 5.8배의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크기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노후생활이 평균적으로 긴 여성은 남성의 80% 수준의 연금을 수령해야 사망시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노후소득재원을 위한 개인적인 저축 활성화를 위해 여성의 연금저축소득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금수령액의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여성의 연금저축 추가소득공제액을 제시하였으며 최근의 세법개정안 (400만원 소득공제)을 기준으로 한 여성 추가공제 금액은 은퇴이전 이자율과 은퇴이후 이자율을 모두 4%라고 가정했을 때 85만원, 은퇴이전 이자율과 은퇴이후 이자율을 모두 6%라고 가정했을 때 73만원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은 여성의 개인연금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효과적인 유인의 하나는 소득공제이며 실제 많은 수의 소비자들이 행하고 있는 연금저축에 대한 저축액도 소득공제한도선까지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현실은 최근에 마련된 세법개정안에서 소득공제한도를 늘려서 저축을 증진시키려는 의도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추가소득공제는 여성의 노후 소득대비 저축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인 자본의 형성과 미래의 노후부양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분석의 결과는 시장 상황이 나빠질수록 평균수명이 긴 여성들에게 남성에 비해 더욱 치명적인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여성의 노후소득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소득공제 추가 혜택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유인은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며, 개인연금의 과세 혜택은 여성이 노후준비 계획의 주체가 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후세대에게 가중시킨다는 현재의 우려를 불식시켜, 미래 가입자가 갖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인식 제고를 통한 신뢰도 형성은 가입률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Beveridge, W. H. (1942).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 HMSO, 6-24.
- Blanchet, D., & Le Minez, S. (2009). Projecting pensions and age at retirement in France: Some lessons from the Destinie I Model. in Zaidi, A., A. Harding, & P. Williamson (Eds.). *New Frontiers in Microsimulation Modelling* (pp. 287-306). Farnham, United Kingdom: Ashgate.
- Engelhart, G. V., Grubert, J., & Perry, C.D. (2005). Social Security and Elderly Living Arrangements: Evidence form the Social Security Notch, *Journal of Human Resources*, 40(2), 354-372.
- Fillenbaum, G. C. (1971). Retirement Planning Programs - At What Age And For Whom? *The Gerontologist*, 11, 33-36.
- Gilbert, N. (2006). The Challenge Of Pension Reform And Gender Equality In Aging Societies, *Gender Issues*, 23(1), 3-5.
- Internal Revenue Services (2010) Publication 525.
- Internal Revenue Services (2010) Publication 575.
- Internal Revenue Services (n.d.). IRS Tax Tip 2010-36. <http://www.irs.gov/newsroom/article/0,,id=107686,00.html>
- Internal Revenue Services (n.d.). Tax topic 424. <http://www.irs.gov/taxtopics/tc424.html>
- Laboul, A. (2002). *Private Pension Systems: Regulatory Policies*. OECD
- OECD (2001). Survey of Investment Regulation of Pension Funds in OECD Countries.
- OECD(2005), Pensions at a Glance: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www.OECD.org
- Oshio, T. & Shimizutani, S. (2005). The Impact of Public Pension Benefits on Income and Poverty of the Elderly in Japan, *Japanese Journal of Social Security Policy*, 4(2), 54-66.
- Rephann, T. J., & Holm, E. (2004). Economic-demographic effects of immigration: Results from a dynamic spatial microsimulation model.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27(4), 379-410.
- Schraff, E. E.(1979), Planning Now For Retirement Later, *Money*, 8(7), 32-27.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n.d.) Social Security if important to women. <http://www.ssa.gov/pressoffice/factsheets/women-alt.pdf>

- 강병창 (2010). 연금수급가능에 따른 중·고령 여성 가구주의 소득불평등과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재분배효과 연구. *노인복지연구*, 48, 131-150.
- 강성호·김경아(2009).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형태 및 국민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격차 분석, *사회복지정책*, 36(3), 153-184.
- 계선자 (1988). 기혼여성의 노후생활계획행동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7, 117-152.
- 고광수(2003), 미국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사례와 시사점,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연구*.
- 고진수(2006), 일본기업의 퇴직연금제 도입실태와 운영사례,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연구*.
- 국민연금공단(2010), 2009 국민연금통계연보.
- 국민연금관리공단 (2010). 알기쉬운 국민연금 <http://www.nps.or.kr>
- 국세청(2008).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 권문일 (2006). 여성 연금 수급권 확충 전략에 대한 국제 비교. *한국사회정책* 13(1), 229-253.
- 금융감독원(2005). 개인연금 운용현황관련 자료.
- 금융감독원(2010). 퇴직연금종합안내. 퇴직연금통계
- 김대철·권혁진(2007). 국민연금제도의 노후빈곤 완화 효과분석-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3(3), 251-275.
- 김성숙 (2009). 50대 비은퇴자의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가입구조와 특성. *사회과학논총*, 28 (1), 27-50.
- 김수완 (2005). 여성의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1(1), 85-118.
- 김수완(2006).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 제도 도입방안 연구. *사회보장연구*, 22(1), 29-56.
- 김수정(2006). 빈곤의 젠더격차: 여성가구주 빈곤의 심각성 및 빈곤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 121-147.
- 김수정(2008).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본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 *보건사회연구*, 28(2), 33-52.
- 김영란 (1997).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31, 1-28.
- 김용하 (1997). 여성빈곤과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한국사회학*, 33(가을호), 67-75.
- 김용하, 석재은 (1999).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학*, 31, 247-274.
- 김원섭, 강성호 (2008).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2(2), 262-292.
- 김원식(1996). 개인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한국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원식, 신문식(2007). 퇴직연금 가입자 특성 분석과 향후 과제,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자료집, 1-17.
- 김인숙 (2004). *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재철(2006). 미국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사례와 시사점,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연구.
- 김종일(2006).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2587-2610.
- 김진수, 이동영, 안수란 (2008). 국민연금제도의 대상자 유형별 제도인식 비교연구- 가입자와 수급자 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1), 149-173.
- 김진수 · 김재진(2007).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김태홍, 이정우, 김용하 (2000).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보건복지정책 영향평가 연구 -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 남재현(2005). 주요국의 퇴직연금 현황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 남정립 (1992). 국민연금제도와 여성의 노후빈곤, *여성문제연구*, 20, 61-81.
- 노대명 외 8인(2006).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동부, 노동부퇴직연금제도, <http://molab.go.kr/pension/index.jsp>
- 류건식 · 이상우(2007).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보험개발원.
- 류연구, 황정임, 석재은 (2007). *여성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개별수급권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류연구 · 황정임(2008). 국민연금제도에서 나타나는 젠더 차이에 대한 연구: 급여 적절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4(2), 73-112.
- 문숙재, 김연정 (1997). 가계의 개인연금 보유 여부와 불입액의 영향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117, 265-277.
- 박재규 (2003). 여성가구주의 빈곤화와 사회경제적 특성, 한국보건사회학회, 13, 81-112.
- 박정희 (2007).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 중년여성의 노후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진호 (2007). *유럽 주요국의 연금개혁 영향과 시사점*, 한은조사연구
- 방하남, 신기철, 김인재, 우재룡, 김호경, 박성재 (2002).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II)*, 한국노동연구원,
- 방하남. 권문일, 김상호, 김용하, 안종범, 문형표, 편 (2005).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원
- 변혜원, 박정희 (2010). *2010년 보험소비자설문조사*, 보험연구원
- 보험개발원 (2008).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 보험개발원 (2010). *공시기준이율* www.kidi.or.kr

- 석재은 (2001).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99-125.
- 신동면 (2003). 영국의 기업연금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연구*.
- 신화경 (2003). 예비여성 노인의 노후 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노후 동거계획, 주거계획 및 경제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4* (4), 31-38.
- 심창학 (2003). 프랑스 퇴직연금제도,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연구*.
- 심창학 (2006). 프랑스 퇴직연금의 제도적 특징과 형성과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연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
- 안현선, 김효민, 안진경, 김양희 (2009).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도와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137-155.
- 안홍순 (1996). 국민연금 가입자 한계설정의 문제점, *한국사회복지학회*, 12(1), 147-167.
- 우해봉 (2010). 여성 무소득 배우자의 노후 준비 현황과 정책적 함의. *사회복지정책*, 37(1), 311-338.
- 유호선 (2010). 국민연금의 양육 크레딧 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회보장연구*, 26(1), 179-208.
- 윤석명, 김대철, 조준행 (2006).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정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21(1), 115-148.
- 이근홍 (2006). 국민연금의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32, 7-30.
- 이상록 (1998). 유족여성가구의 가구소득결정요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록 (2001). 여성 수급권 보장 방안 모색에의 주요 쟁점,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학술대회*, 127-132.
- 이순재 (2007). 노후소득의 성별 차이에 대한 요인 분석, *한국경영학회*, 학술발표자료.
- 이순재, 김현수 (2009). 개인연금의 현황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선방향. *사회보장연구* 25(3), 249-280.
- 이정우 (2004). 독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사회정책학회보*, 11(1), 59-104.
- 이정원 (2008). 프랑스의 퇴직연금제도 개혁 동향,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 이정화, 문상호 (2010). 중년여성의 경제활동과 노후소득보장제도 가입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9(2), 129-159.
- 임미영·한인숙 (2002). 한국 국민연금의 성 불평등 구조: 가입과 급여의 적격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4), 167-185.
- 임병인, 강성호 (2005). 국민, 퇴직, 개인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보험개발연구*

- 16(3), 89-121.
- 임병진, 임병학 (2004). 3층보장체계하의 개인연금저축제도 세제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회 논문집*, 467-484.
- 전승훈, 임병민, 강성호 (2006). 개인연금 가입 결정 및 가입상태 변화 분석, *보험개발연구*, 17(1), 137-168.
- 전영준, 한도숙(2000). 연금 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전지혜 (2002).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공공부조 효과 연구: 빈곤감소효과 및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배성 (2006). 우리나라 퇴직연금제의 수급군보호와 향후과제. *세무회계연구*, 19, 41-60.
- 정요섭 (1999).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의 분석과 평가. *리스크관리연구* 12(1), 147-171.
- 정요섭(2003). 신·구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금리·세제효과 비교. *리스크관리연구* 14(1), 3-22.
- 정요섭, 이정화(2008).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의 소득재분배 완화효과 분석. *리스크관리연구*, 19(1), 139-162.
- 정운영, 백은영(2009). 은퇴에 대한 인식, 은퇴태도와 은퇴준비 행동의 인과관계분석. *사회보장연구* 25(2), 115-139.
- 차경옥, 박미연, 김연주(2008). 20, 30대 임금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149-163.
- 최선화 (1997). *빈곤문제와 사회발전*, 세종출판사,
- 최원(2009).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에 대한 헌법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25(3), 135-169.
- 최현수(200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 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 *한국노년학* 22 (1), 223-243.
-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2007). 장래가구추계
- 통계청 (200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온라인 간행물
- 통계청 (2009). 한국인의 사회지표, 온라인간행물
- 통계청 (2010). 경제활동 인구조사
- 통계청(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 통계청(2008). 완전생명표
- 통계청, 사회통계국 (2009). 2009 노후준비방법

하나HSBC생명(2010).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대비 실태조사.

한국경제(2008. 9.10). “한국직장인들 은퇴준비 가장 미흡”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홍연숙 (1998). 연금보험에 있어서 여성수급권보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부록]

부록 1. 은퇴이전 이자율 6%, 은퇴이후 이자율 6%인 경우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령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소득공제액 계산에 따른 표 (남성의 소득공제액 300만원, 여성의 소득공제 354만원)

<부표 1-1> 각 기간별 354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저축의 미래가치

단위: 만 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308	544	859	1,282	1,847	2,604
15%	770	1,360	2,149	3,205	4,618	6,509
24%	1,232	2,175	3,438	5,127	7,388	10,414
35%	1,796	3,172	5,014	7,477	10,775	15,187

<부표 1-2> 354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65세 때의 가치

단위: 만 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1,322	1,744	2,060	2,296	2,472	2,604
15%	3,304	4,360	5,149	5,739	6,180	6,509
24%	5,287	6,976	8,239	9,182	9,887	10,414
35%	7,710	10,174	12,015	13,391	14,419	15,187

<부표 1-3> 소득공제혜택 저축금액으로부터의 연금수령액: 여성 65세 시작 85세 만기, 은퇴 이전 이자율 6%, 은퇴이후 이자율 6% 가정 (소득공제금액 354만원)

단위: 만 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109	143	169	189	203	214
15%	272	359	424	472	508	535
24%	435	574	678	755	813	857
35%	634	837	988	1,101	1,186	1,249

부록 2. 은퇴이전 이자율 4%, 은퇴이후 이자율 3%인 경우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령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소득공제액 계산에 따른 표 (남성의 소득공제액 300만원, 여성의 소득공제 373만원)

<부표 2-1> 각 기간별 373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저축의 미래가치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296	493	733	1,025	1,381	1,813
15%	739	1,232	1,833	2,563	3,452	4,533
24%	1,182	1,972	2,932	4,101	5,523	7,253
35%	1,724	2,875	4,276	5,981	8,054	10,577

<부표 2-2> 373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65세 때의 가치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788	1,080	1,320	1,518	1,680	1,813
15%	1,970	2,700	3,301	3,794	4,200	4,533
24%	3,152	4,320	5,281	6,070	6,719	7,253
35%	4,596	6,301	7,701	8,853	9,799	10,577

<부표 2-3> 소득공제혜택 저축금액으로부터의 연금수령액: 여성 65세 시작 85세 만기, 은퇴 이전 이자율 6%, 은퇴이후 이자율 6% 가정 (소득공제금액 373만원)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51	70	86	99	110	118
15%	129	176	215	248	274	296
24%	206	282	345	396	438	473
35%	300	411	503	578	639	690

부록 3. 은퇴이전 이자율 6%, 은퇴이후 이자율 5%인 경우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령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소득공제액 계산에 따른 표 (남성의 소득공제액 300만원, 여성의 소득공제액 360만원)

<부표 3-1> 각 기간별 36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저축의 미래가치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313	553	874	1,304	1,878	2,648
15%	783	1,383	2,185	3,259	4,696	6,619
24%	1,253	2,212	3,496	5,214	7,514	10,591
35%	1,827	3,226	5,098	7,604	10,957	15,445

<부표 3-2> 36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65세 때의 가치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1,344	1,774	2,095	2,335	2,514	2,648
15%	3,360	4,434	5,237	5,836	6,284	6,619
24%	5,376	7,095	8,379	9,338	10,055	10,591
35%	7,841	10,346	12,219	13,618	14,664	15,445

<부표 3-3> 소득공제혜택 저축금액으로부터의 연금수령액: 여성 65세 시작 85세 만기, 은퇴 이전 이자율 6%, 은퇴이후 이자율 6% 가정 (소득공제금액 360만원)

단위: 만원

세율	10년 혜택	15년 혜택	20년 혜택	25년 혜택	30년 혜택	35년 혜택
6%	103	136	160	178	192	202
15%	257	339	400	446	480	506
24%	411	542	640	714	768	809
35%	599	791	934	1,041	1,121	1,180

토론

최 현 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 차이와 노동패턴의 차이로 인한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성노인 문제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와 은퇴준비를 위한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등 관련 정책을 평가하였으며 구체적인 제안을 마련하고자 남성과 여성의 노후소득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가족구조의 변화 중 하나가 여성가구주가계의 증가이다. 특히 60세 이상의 여성가구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으로 인해 여성가구주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에 비해 읍면부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사별이나 이혼에 인한 비중이 높으며, 교육수준도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여성의 경제적 지위로 연결되어 진다. 즉 여기에 기인한 취업 상태(경제활동 참가여부와 참가형태)의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으며 상당수의 여성은 남성 가장의 피부양자로 배우자의 소득 및 연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같은 가족구조의 취약점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더라도 여성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노후에 대한 준비는 여성들의 매우 중요한 삶의 이슈이지만 대다수의 여성들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가족 내적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은퇴준비 수단인 국민연금의 수급에서도 여성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그 목적상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보장생활을 위한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소외계층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제도가 시행되는 상황과 적용되는 대상의 특성으로 인해 성적편향이 발생하게 된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연금급여의 수급 불평등성, 여성의 고용기간이 남성에 비해

짧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급의 불안정성, 낮은 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이 유발하는 연금수급액의 불충분성, 그리고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가입불완전성 등에 의해 연금급여에서 남녀간에 격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주요 연구문제로 삼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해 제시된 결과는 그 시사점이 매우 크다. 특히 다양한 가입기간(10년, 20년), 남편의 기준소득월액(평균의 50%, 100%, 200%), 전업주부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중위수의 50%, 100%, 200%)을 조합한 사례들을 토대로 분석한 임의가입시의 연금액과 소득대체율, 중복급여로 인한 손해/이익액의 비교 결과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시의 중복급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경감시키고 임의가입의 순연금효과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한 노후소득안정화 방안마련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입가능 기준소득수준의 완화와 농어업인에 대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를 전업주부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자는 제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추가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가능 기준소득월액을 긍정적인 순연금효과가 발생하는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각 경우에 대해 보험료 보조 수준을 적시하는 것도 좀 더 구체적인 정책적인 방안의 제시 차원에서 고려해 볼 적하다고 사료된다.

3층보장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주요 노후소득원은 개인저축이다. 특히 은퇴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및 세제혜택의 마련은 노후소득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세제혜택에 관한 다양한 분석은 개인연금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매우 적절하며 그 결과 또한 매우 의미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여성과 남성의 수명차이에 기인하는 남녀간의 연금액의 차이를 보정하는 여성의 소득공제액의 산출은 적용가능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만 시장 적용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장수위험을 지니고 있으면서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지니고 있는 여성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명시적으로는 여성에게 다소 우호적일 수 있는 세제혜택지원 방안을 제안했을 때 어떻게 시장의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좀더 논의가 보완되었으면 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노후소득안정화 방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논리정연한 근거들과 탄탄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마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토론

백 은 영

(경희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과 교수)

‘여성의 노후 소득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노후 준비가 절실히 필요하나 실제적으로는 노후준비에 취약한 여성들의 노후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한 연구이다. 그동안 사회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여성이 가장 노후 준비에 있어서 취약한 집단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후 준비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의 연구 공백을 메워 줄 수 있는 하나의 연구로 상당히 의미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의 노후 준비에 관해 구체적으로 여성의 노후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현실적인 정책적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가치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노후 소득 안정화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다각도로 고찰하고 있으며 서술이나 전반적인 전개도 매끄럽게 정리가 되어 있어 여성의 노후 소득 안정화에 관한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몇가지 보완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과 논의해 볼 만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때 외국의 성공적인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그 중 우리 실정에 적절한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3장에서 해외 연금제도 개요 및 개혁, 개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는데, 해외 연금제도 중 여성에 관한 사항, 개혁 내용 중 여성의 노후 생활 안정화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고찰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연금 부분과 세제 혜택 부분을 같이 고려하고 있는 만큼 외국 사례(혹은 국외 연구)에서는 여성의 노후 준비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혜택은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이 같이 일부 고찰이 이뤄졌더라면, 후반부 분석 부분에서 왜 특히 세제 혜택 중에서 소득공제액에 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또 전반적인 분석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4장에서는 여성에 초점을 두어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를 잘 정리해 주고 있다. 남녀노인

가계 소득원천 및 소득에 대해 분석한 필자의 연구에서도 여성노인가계의 공적연금소득원이 있는 경우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남성과 비교해 볼 때, 소득원, 소득액 면 모두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어 국민들의 기본 노후 보장이 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여성의 노후보장에는 상당히 미흡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보장이 되어야 하는 국민연금 부분에서 여성의 노후 소득 보장 안정화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분석 부분 가정에서 전업주부와 남성을 비교하기 부분에서 가정에 사용한 기준 연도가 달리 적용된 부분, 계산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므로 계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히 해야 하는 부분 등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

4장의 결과 부분에서 남편 급여소득이 낮은 경우 전업주부 추가가입에 따른 소득대체율 증가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P58의 표에서 소득대체율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명확히 했으면 하는 것이다. 같은 표에서 81% 소득대체율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케이스는 남편급여소득이 낮은 경우의 전업주부가 중위수의 200%를 내고 가입했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남편 급여소득이 낮은 경우 남편 급여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중위수 또는 중위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수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또한 본 분석이 국민연금은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소득이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으로 이분화하여 전개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나 전업주부가 공적연금의 완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면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여성 역시 연금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여성의 경우 노동참여의 패턴을 생각할 때 남성보다 근속연수가 더 짧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함께 고려해 보았으면 하는 측면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제도와 여성 관련 내용 고찰을 하면서 양육 크레딧 부분에 대한 정리가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여성의 경우 양육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는 경우 많다는 점에서, OECD국가들이 양육 크레딧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는 측면, 고령화의 두 축 중 중요한 부분인 출산장려 부분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같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5장에서도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부분에 대해 꼼꼼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 대비 더 길다는 측면에서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바, 다른 가정 부분에서도 약간 남녀차를 고려한 가정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개인연금 수령이 55세부터 가능한데 연금 수령을 65세부터로 가정한 부분 등 약간의 가정이 달라질 경우에 대한 분석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전반적으로 정리가 잘 된 보고서이나 결론 부분을 좀 더 보강하면 더욱 훌륭한 마무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출산 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 지원을 위한 성인지적 세제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 이 상 신 (서울시립대학교)

공동연구원 : 정 병 욱 (서울시립대학교)

공동연구원 : 허 원 (서울시립대학교)

목 차

제1장 서론	129
1. 연구목적	129
2. 연구대상, 방법 및 범위	130
3. 선행연구	131
제2장 현행 세제의 분석	133
1. 출산 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과 세제지원	133
2. 양육과 관련한 세법 규정	137
3. 출산 후 재취업까지의 양육비 지원세제의 평가	165
제3장 외국 입법례	172
1. 미국	172
2. 일본	183
3. 시사점	185
제4장 양육비 세제지원의 효과 분석	187
1. 일본	187
2. 우리나라	192
제5장 개선방안	205
참고문헌	215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권,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경우 출산 및 육아라는 부담 때문에 취업 중 일정기간 경제활동 중단이 있을 수 있으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열악한 육아여건 등의 문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에 공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¹⁾ 결혼 후 직장에 복귀하는데 2.5년, 출산을 하면 9.7년이 걸리며, 결혼과 출산이 연속되기 때문에 상당수 여성들의 직장복귀가 어렵다. 특히 자녀를 1명 낳으면 4년 후 고용률이 60%까지 올라가지만 2명 이상 낳으면 초산 후 40개월 시점에서 2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자녀가 많을수록 단절기간이 길어진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출생통계 잠정결과」를 보면 2009년 출생아수는 43만 5,000명으로 2008년보다 2만 1,000명이 줄어들었으며, 밀레니엄 베이비붐이 일었던 2000년과 비교하면 20만 명 정도가 줄어든 수치이다. 산모는 20대 후반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평균 초혼연령이 상승하면서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도 31세로 2008년보다 0.2세가 상승했다. 지역별 출산율에서는 상대적으로 대도시에서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 여자가 평생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²⁾을 통해 주요국의 출산력 수준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1.15명으로 2008년보다 0.04명이 감소했다. 이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며 일본이나 대만, 홍콩 등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1.0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최소한 2.1이 되어야 세대 간 교체(generational replacement)가 보장된다고 한다. 이는 2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 자녀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줄지 않고 현상유지가 가능함을 뜻하는 것이다.³⁾

1) 한국경제신문 2010.4.6자(<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40648541>)

2)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며, 출산력 수준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률의 총합한 사회의 출산수준을 다른 사회와 비교할 때 유용한 단일 지표이다. /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통계 메타 DB>용어조회 참조

3) 조세일보 2010.3.2자 “저출산문제, 돈만으로 될 일인가” 기사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0/03/2010030297996.html>) 참조

[그림-1] 주요국 합계 출산율 - 2009년 기준 (단위:명) 4)



우리나라의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다자녀 가구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이고, 보건복지부도 중산층 맞벌이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지원 대상의 자격을 한층 완화하는 내용의 보육료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⁵⁾

본 연구에서는 출산 후 재취업까지의 양육비 지원 세제를 검토함으로써 출산여성의 사회적 재진출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의 지원 및 권리신장 차원의 세제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헌법적 가치인 실질적인 양성평등과 모성보호를 조세제도를 통해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행 세제를 분석한 후 바람직한 세제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방법 및 범위

출산여성의 사회적 재진출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이므로 “출산 전부터 직업을 계속유지하려

4) 출처 : '세계 최저 출산율, 불가피한 문제인가' 통계청 세미나 자료(<http://v.daum.net/link/7241811>) 참조

5) 조세일보 2010.7.27자 “다자녀 稅지원 확대-무(無)자녀 기본공제 감소될 듯” 기사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0/07/20100727102681.html>), 2010.7.12자 “보육료 지원받는 맞벌이가구 두배 늘린다” 기사(<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0/07/20100712102139.html>) 참조

고 하지만 부득이 출산을 하게 되어 휴직이나 퇴직을 한 후 재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정하여 논하고자 한다. 따라서 해결방안은 저출산 문제와 일부 공통되는 점도 있다. 하지만 출산 후의 재취업을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출산 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을 어렵게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특히 첫 자녀 출산 후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학력과 가구소득이 결정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또한 자녀돌봄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도 있다. 이에 의하면 자녀돌봄비용에 대한 여성노동 공급의 탄력성 크기의 추정치는 0.06에서 -1.24까지 다양하며, 어머니의 수입이나 기술수준이 낮거나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자녀돌봄비용에 대한 여성노동 공급의 탄력성이 더 높다고 한다. 즉 자녀돌봄비용에 대한 여성노동공급의 탄력성이 음의 값으로 높다는 것은 자녀돌봄비용이 증가하면 노동공급이 크게 줄어들고, 반대로 자녀돌봄비용을 지원하면 노동공급이 크게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이 중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비(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있게 되면 사회적 재진출에 유효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조사에 의하고 제도적 탐색에 중점을 둔다. 출산여성의 사회적 재진출을 지원하는 선진적인 조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탐색하고, 출산여성의 사회적 재진출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제도를 분석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 및 내용은 먼저 현행 세제상 출산 후 재취업까지의 양육비 지원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주요 국가의 조세제도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정밀한 세제를 가진 미국과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유사한 조세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한다.

3. 선행연구

출산 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을 위한 세제지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연구는 보이지 않으나, 모성보호, 저출산, 여성의 사회진출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진척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자녀양육비공제는 미국의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유사하며, 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 또는 학원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미국의 돌봄비용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정규언(2007)에 의하면, 자녀돌봄비용에 대

한 지원(childcare subsidies)은 여성의 근로참여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그 논리는 첫째, 자녀 돌봄비용에 대한 지원은 일하는 어머니의 세부담을 줄여주므로 노동공급이 한계세율에 대하여 탄력적인 어머니들의 근로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자녀돌봄비용에 대한 지원은 성평등, 저소득어머니의 빈곤 해소, 자녀발달을 위해서 유익한데,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한 살 이하의 유아에게는 공적인 탁아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공적인 탁아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Jaumotte 2003). 또한 Gelbach(2002)은 미국 자료를 분석하여 무료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경우 배우자 없는 여성의 취업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찾았으며, Chevalier와 Viitanen(2002)은 영국 자료를 분석하여 공적인 자녀돌봄기관에 대한 이용가능성의 증가가 여성의 근로참여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반대의 주장도 있다. 자녀돌봄비용에 대한 지원의 여성취업 증가 효과는, 첫째, 자녀돌봄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기 전에도 사적인 비용으로 자녀돌봄 서비스를 구매하여 일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돌봄비용에 대한 지원이 취업증가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둘째 실제 발생한 자녀돌봄비용에 대하여 지원이 될 경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자녀돌봄을 부탁하다가 대가를 지급하는 공적인 곳에 자녀를 맡기게 된다는 현상에 의하여 상쇄된다는 것이다.

Blau와 Hagy(1998)의 연구결과에서도, 자녀돌봄비용에 대한 전액 보조를 했더니 무료로 자녀를 맡기던 일하는 어머니들이 좀 더 높은 품질의 유료 탁아로 전환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어머니의 취업을 10% 증가시켰지만 유료 탁아의 이용률은 취업증가율보다 더 많은 19%나 증가하여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쇄효과에도 불구하고 자녀돌봄비용에 대한 지원이 어머니들의 근로참여를 증가시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최근 노동부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여성 506명, 남성 494명)을 상대로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여전히 ‘육아부담’이라는 조사가 나왔기 때문이다.⁶⁾

조사에 따르면 여성 취업의 최대 장애요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가 ‘육아부담’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사부담’(13.9%) △‘사업체 남녀차별 관행’(11.1%) △‘장래비전 부족’(4.3%) △‘구인정보 부족’(3.1%) 등의 순이었다. 또한 아기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로는 ‘직장보육시설’(47.0%)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보육비 지원’(17.5%),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16.8%),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9.8%), ‘산전후 휴가 및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6.5%)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조세지원제도가 출산 후 여성의 재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6) 내일신문 2010.3.30자(<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534697&sid=E&tid=4>)

제2장 현행 세제의 분석

1. 출산 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과 세제지원

1) 출산 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 지원의 당위성과 방법

출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출산 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에 있어서는 장애요인이 많이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것이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혼인 및 가족생활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러 가지 법률 규정들이 존재하고 형식적으로 보호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양육이 개인의 문제 특히 엄마에게 있다는 관념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여성이 사회적 재진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최근 저출산 문제와 연결되어 육아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육아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고, 육아문제를 사회 인력 재생산으로 보고 국가와 사회에 책임을 지우도록 하자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 최근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으므로,⁷⁾ 먼저 이에 대한 검토를 해 본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5. 1. 31.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5. 4. 1. 단기복무장교인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자로서, 2005. 9. 3. 딸 이○영이 출생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구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본문 제4호가 장기복무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부사관, 단기복무 중인 여자군인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같은 남성 단기복무장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그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군인의 범위에 남성 단기복무장교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구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이 청구인의 자녀 양육권과 교육권,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5.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7) 2008. 10. 30. 2005헌마1156 전원재판부

첫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남성 단기복무장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자녀를 양육·교육할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의 양육을 통하여 청구인이 인격을 발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둘째, 이 사건 법률조항은 ① 단기복무장교 중 여성에게만 육아휴직신청권을 부여하여 여성 단기복무장교와 남성 단기복무장교를 차별하고 있고, ② 남성 장교 중 장기복무장교에게만 육아휴직신청권을 부여하여 장기복무장교와 단기복무장교를 차별하고 있으며, ③ 장·단기 구분이 없는 준사관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용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조건에 있는 단기복무장교와 차별하고 있으며, ④ 군법무관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장기 군법무관에게는 육아휴직신청권을 부여하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청구인과 같은 단기 군법무관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양자를 차별하고 있고, ⑤ 남성 단기복무장교 가정의 경우 처가 자녀의 양육을 전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자녀양육에 있어 부부를 차별하고 있으며, ⑥ 남녀 구분없이 육아휴직이 인정되는 다른 공무원과 군인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군인의 육아휴직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군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인력상황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 부여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일 뿐이다.

둘째, 남성 단기복무장교는 병역법상의 현역복무의무를 이행하는 자이므로 장기복무장교 등 직업군인들과는 복무형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남성 단기복무장교에게 육아휴직신청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자가 의무복무라는 복무형태와 장기간의 공백이 용인될 수 없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허용범위를 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남성 단기복무장교는 사병과 달리 주거가 영내로 제한되지도 아니하고, 연가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의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첫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육아휴직신청권을 가지는 근로자로서의 권리성, 육아휴직의 허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다른 의무복무군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의 허용 대상을 정한 것이므로, 국가가 헌법상 용인될 수 있

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함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을 최소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장교를 포함한 남성 단기복무군인은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만 복무하는 데 반하여 직업군인은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여 상대적으로 장기간 복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그와 같은 복무형태의 차이 및 육아휴직 신청권이 갖는 근로자로서의 권리성, 제도의 전면적 실시에 따른 국가부담의 증가, 의무복무군인 사이의 형평성, 국방력의 유지 등 국가가 추구하는 다른 정책적 목표를 고려하여, 육아휴직의 적용대상으로부터 의무복무 중인 단기장교를 제외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의무복무군인인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남성 단기복무군인과 달리 장교를 포함한 여성 단기복무군인은 지원에 의하여 직업으로서 군인을 선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단기복무군인 중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이 아니라 의무복무군인과 직업군인이라는 복무형태에 따른 차별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다음을 이유로 한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이 있다.

첫째, 병역의무를 일방적으로 양육의무보다 우위에 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을 긴절히 필요로 하는 남성 단기복무장교에게 육아휴직의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육아휴직을 긴절히 필요로 하는 남성 단기복무장교에게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방력의 약화나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추가적인 인적·예산상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육아휴직신청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의무복무중인 남성 단기복무장교와 직업군인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위 사례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나, 양육권의 보호 내지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반대의견과 다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의 의의에 대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

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양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가족의 자율영역이 국가의 간섭에 의하여 획일화·평준화되고 이념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데, 가족생활을 구성하는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이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판례집 12-1, 427, 445-448 참조].

한편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판례집 14-2, 170, 180).

따라서 양육권은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군인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제도의 의미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당초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된 구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제도는 여성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4항과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아왔으나,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모성보호 및 근로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당초의 취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녀양육의 지원을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 및 직장가정의 양립, 출산장려와 아동복지 제고, 남성의 가족책임 분담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가족내 양성 평등의 달성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신청권에 대해서는 이를 법률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36조 제1항이 국가에게 자녀 양육을 지원할 의무를 부과

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위 헌법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개인에게 국가에 대하여 육아휴직제도의 전면적 시행과 같은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거나 국가에게 그에 관한 입법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국민정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제정하는 입법에 적용요건, 적용대상,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3. 7. 24. 2002헌바51, 판례집 15-2상, 103, 118 참조).....」

투박하게 말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양육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구체적 입법을 통해서만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원방법

출산이 당위적인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당연할 것이다. 저출산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출산에 대한 지원 내지 우대조치가 필요함은 물론 출산 이후의 사회적 재진출에 대한 지원 내지 우대조치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양육권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지원방법은 육아수당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더욱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 방법은 직접적으로 출산한 여성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고 그 환경조성에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 중 이 글에서는 세제지원과 관련한 것만을 논하기로 한다.

2. 양육과 관련한 세법 규정

현행 소득세법에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추가공제인 자녀양육공제 및 부녀자공제와 특별공제인 교육비공제 및 의료비공제가 있으며, 이 외에도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세제지원 및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양육과 관련한 세법 규정들이다. 이들 제도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자녀양육공제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한다. 다만, 당해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원천-162, 2010.2.19.).

만약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한다(소득46011-1245, 1999.04.02.).

Ⅱ 부양가족의 판단(원천-162, 2010.2.19.) Ⅱ

[질의내용]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는 장인, 장모에게 생활비 및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보내드리며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하고 있음. 장인, 장모와 주소를 같이하는 장애인 처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해당 여부

[회 신]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다만, 당해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요 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관련예규]

○ 서면1팀-16, 2007.01.04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취학·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4420, 1999.12.28.)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3-4420, 1999.12.2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

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취학·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4420, 1999.12.28.)을 참고하기 바람.

【제목】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동생)이 취학 등의 목적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 및 교육비 공제방법

【질의】

(사실관계1)

근로자 거주지역 ; 서울

부모님과 동생(18세) 거주지역 ; 충청남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모님과 동생의 생계 및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고, 부모님은 무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한지

(사실관계2)

근로자 거주지역 ; 서울

동생 : 충청남도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음.(학비는 근로자가 부담)

동생은 대학교에 다니기 전까지는 근로자와 함께 생계를 같이 했던 부양가족이었으며,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현재는 충남에 거주. 근로자의 부모님은 사망하였으며 다른 형제자매는 없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한지.

【회신】

1.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나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 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3. 거주자가 일시 퇴거한 자의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Ⅱ 이혼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부양가족 해당 여부(소득46011-1245, 1999.04.02) Ⅱ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양가족을 정의할 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동거 등의 여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만일 부모가 이혼하면서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 제4항에 의거 모가 친권을 행사하기로 협의하여 호적법 제7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신고하고, 또 민법 제837조 제1항에 의거 그 자에 대하여 모가 양육을 하되 부가 매월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합의되어 현실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위 미성년의 자는 그 부에 대한 관계에서 소득세법 제53조가 규정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 신]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한다.

[요 지]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고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부녀자공제)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3조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동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한다(서면1탐-228, 2007.03.05).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1탐-887, 2004.07.01).

Ⅱ 배우자없는 여성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탐-288, 2007.03.05) Ⅱ

[질의내용]

미혼여성으로 어머니(41년생)를 부양하고 있으나, 같은 주소지에 각각 세대주로 하여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 가능여부

[회 신]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3조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동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 지]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녀자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관련예규]

○ 서면1탐-1159, 2004.08.20

【제목】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녀자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함

【질의】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있고, 부양가족이 다음과 같을 경우 부녀자추가공제 적용여부

(질의 1)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의미

(질의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세대주로서 부양가족으로 종합소득이 없는 2003.12.31. 현재 21세가 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세대주로서 부양가족으로 종합소득이 없는 19세 및 22세인 자녀가 있는 경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는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Ⅱ 부녀자공제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2004.07.01.) Ⅱ

[질의내용]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부녀자공제”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규정되어 있음.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아래의 경우에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1.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이나 타지에 있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여성
2.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여성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3조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동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 지]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관련예규]**

○ 서면1탐-16, 2007.01.04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취학·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4420, 1999.12.28.)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3-4420, 1999.12.2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취학·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4420, 1999.12.28.)을 참고하기 바람.

【제목】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동생)이 취학 등의 목적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부양가족공제 및 교육비 공제방법

【질의】

(사실관계1)

근로자 거주지역 ; 서울

부모님과 동생(18세) 거주지역 ; 충청남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모님과 동생의 생계 및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고, 부모님은 무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한지

(사실관계2)

근로자 거주지역 ; 서울

동생 : 충청남도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음.(학비는 근로자가 부담)

동생은 대학교에 다니기 전까지는 근로자와 함께 생계를 같이 했던 부양가족이었으며,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현재는 충남에 거주. 근로자의 부모님은 사망하였으며 다른 형제자매는 없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한지.

【회신】

1.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나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 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3. 거주자가 일시 퇴거한 자의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 추가공제“라 한다)한다.

②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③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100만원의 금액을 공제한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에는 거주자 본인, 배우자 및 그 밖의 부양가족과 함께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거주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이 포함된다.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는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민법」또는「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소득세과-1386, 2009.09.09).

Ⅱ 거주자의 동거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대상 해당여부(소득세과-1386, 2009.09.09) Ⅱ

[질의내용]

1. 다자녀추가공제대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2. 다자녀추가공제대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입양한 양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51조의2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민법」또는「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요 지]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는 동거입양자(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의 2 【다자녀추가공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관련예규]

○ 재소득-100, 2008.05.14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법 제51조의 2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1팀-541, 2007.04.30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손녀는 「소득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입양으로 인한 친족범위에 관한 질의(법무부, 해석일자 : 연도미상)

【제목】

입양으로 인한 친족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중소기업사업조정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지배기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지배기업자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甲의 從祖父(4촌)가 再從曾祖父의 養子, 즉 三從祖父(8촌)로 입양되었을 경우 그의 孫(10촌이나 입양이 없었더라면 6촌)인 乙이 甲과의 사이에 위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

[답설] 친족관계 해당없음

[을설] 입양으로 양자가 된 자는 그 친생부모와 기타 혈족과의 기존의 친족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양자의 직계비속도 양자의 경우와 같이 이중적 친족관계를 가지게 되어 6촌이 되므로 친족관계에 해당됨

【회답】

6촌인 혈족으로 친족에 해당됨(을설이 타당)

나. 부녀자공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가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소법 51조 1항 3호).

부녀자추가공제에서 규정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3조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동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

당하지 않는다(서면1팀-887, 2004.07.01, 서면1팀-1159, 2004.08.20). 그러나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거주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법인46013-4386, 1999.12.22⁸⁾, 법인46013-4312, 1999.12.14, 법인46013-671, 1999.02.22).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심사례⁹⁾가 있다. 혼인으로 인해 분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청구인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였다하여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독립생계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거주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직계존속의 소득발생상황이 어떤지,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8) 장남이 부모와 장인·장모를 실제부양하거나 장녀가 시어머니와 친정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직계존속이 60세(여자는 55세)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 직계존속이 65세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1조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직계존속의 소득발생 상황,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9) 심사소득2003-0221, 2003.09.29.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독립생계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거주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직계존속의 소득발생상황이 어떤지,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첫째, 쟁점소득공제를 받은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친정부모 및 외조모는 청구인이 혼인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으나, 직계존속인 친정부모 등 가족의 소득발생상황을 보면 소득이 발생이 없는 등 직계존속의 독립생계능력이 없는 것에 해당되고, 둘째, 청구인이 혼인으로 분가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중에 청구인만 근로소득이 있었고, 분가 이후에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부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의 의료보험증에 친정부모 및 외조모가 피보험자로 등록된 사실로 보아 알 수 있고, 셋째, 청구인의 다른 형제 자매 및 배우자 등의 종합소득세 계산시에 쟁점소득공제를 받은 친정부모 및 외조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등을 중복하여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혼인으로 인해 분가하여 쟁점소득공제를 받은 청구인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였다하여 쟁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견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Ⅱ 기본공제대상 해당여부(법인46013-4386, 1999.12.22) Ⅱ

[질의내용]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장남이 부모, 장인, 장모를 부양하는 경우 및 장녀가 매월 생활비로 일정금액을 친정부모에게 송금할 때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가능 여부

[회 신]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장남이 부모와 장인·장모를 실제부양하거나 장녀가 시어머니와 친정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직계존속이 60세(여자는 55세)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 직계존속이 65세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1조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직계존속의 소득발생 상황,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 지]

장남이 부모와 장인·장모를 실제부양하거나 장녀가 시어머니와 친정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직계존속이 60세(여자는 55세)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유사사례]

○ 법인46013-4265, 1999.12.10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에서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

가 또는 취업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근로자 본인(그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부양가족공제는 장남(장녀)인 경우와 차남(차녀)인 경우에 불구하고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053, 1999.3.2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Ⅱ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모친의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4312, 1999.12.14) Ⅱ

[질의내용]

장남으로서 직계존속인 모친(1929.03.20일생)이 농촌인 ○○ ○○군 ○○에서 단독 세대주를 구성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증도 장남의 직장의료보험에서 발행된 언격지 의료보험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 모친의 인적공제, 경로자우대공제, 의료비공제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1조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 지]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Ⅱ 부모와 한 세대에 동거하여야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4312, 1999.12.14) Ⅱ

[질의내용]

처남이 부양하던 장인, 장모를 처남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됨에 따라 장녀인 처가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부모와 한 세대에 동거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며, 당해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요 지]

당해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다. 교육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소법 제52조 3항).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생략)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조문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표-1>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된다.

<표-1> 공제대상 교육비

구분	공제액
본인분	① 학교 교육비(대학원생 포함) 전액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 근로자 수강지원금
기본공제대상자	①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②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은 1인당 연 9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中 장애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을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대상 국외교육기관(영110조의3 ④)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며, 국외 소재 영유아 보육시설 비용 및 취학전 아동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한도는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단, 본인은 전액 공제 가능)이다. 공제대상 교육비(법52① 4 가목 (3))는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을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를 말하며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에 한한다. 다만, 국외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위하여 지출한 국외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①「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해당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는 자로서 유학 떠날 당시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거나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서 일정한 자. ②「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등이다.

국외교육기관의 학제가 우리나라와 달라 동일한 연도에 고등학교 등록금과 대학교의 등록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한도액 계산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출한 교육비 중 당해 과세연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공제한도액 계산방법은 각 학생 신분에 해당하는 각각의 한도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300만원 한도 내의 금액과 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9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내의 금액 합계액(① + ②) 중 전체 공제한도인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하도록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7, 2004.03.02).

한편,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 받는 자녀학자금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재소득-67, 2003.12.13).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10)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1, 2004.07.21).

Ⅱ 당해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의 교육비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7, 2004.03.02) Ⅱ

[질의내용]

자녀가 미국에 자비유학 중이며 매 학기별 등록금을 송금하고 있음.우리나라의 학교 체제와 달리 미국에서 학년의 구성 때문에 자녀가 상반기에는 고등학생의 신분이고 하반기에는 대학생의 신분이 되어 등록금을 1학기에는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였고 2학기에는 대학교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겼음

- 교육비공제는 1학기는 고등학교, 2학기는 대학교 등록금을 국내 교육비 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 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대학교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외국유학 중 당해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당해 과세연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공제한도액 계산방법은 각 학생 신분에 해당하는 각각의 한도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 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내의 금액 합계액(① + ②) 중 전체 공제한도인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하는 것입니다.

[요 지]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의 합계액을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10)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Ⅱ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의 과세소득 여부
(재소득-67, 2003.12.13) Ⅱ

[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

[회 신]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그 원천이 출연금인지,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Ⅱ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교육비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1, 2004.07.21) Ⅱ

[질의내용]

개정된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 교육비(어린이 놀이방 등)에 대하여 실비로 지원하고있는바, 당사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10만원 이내의 급여를 초과
제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라. 의료비공제

소득세법 제52조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이를 정리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대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同)의료비를 <표-2>와 같이 구분한 후에 이를 이용하여 <표-3>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2> 공제대상 의료비의 구분

구분	내용
본인 등 의료비(㉑)	해당 거주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분
일반의료비(㉒)	㉑ 外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및 소득요건 불제한)분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의 한도 적용

<표-3>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의료비공제액 = ① + ②	
① 일반의료비공제액 = MIN(기준초과의료비, 연 700만원)	
(기준초과의료비 = (a - (총급여액×3%)) (≥0), {·}<0인 경우에는 “기준미달의료비”)	
② 본인 등 의료비 공제액 = b - 기준미달의료비	

다소 복잡한 <표-3>의 계산을 정리하면 {a - (총급여액×3%)}의 크기에 따라 <표-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4>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구분	의료비 공제액
{a - (총급여액×3%)} ≥ 700만원	700만원 + b
0 ≤ {a - (총급여액×3%)} < 700만원	(a + b) - (총급여액×3%)
{a - (총급여액×3%)} < 0	(a + b) - (총급여액×3%)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여 산후조리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의료비영수증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라면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병원에서 직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법인46013-25, 1997.01.08, 서면 1팀-81, 2006.01.23).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재정경제부 소득46073-12, 2001.01.01). 따라서 올해 결혼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딸을 위하여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서이 46012-10376, 2003.02.24).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 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이46013-10442, 2002.03.11, 원천46013-83, 2002.03.09).

Ⅱ 의료기관외에 의료비 지출시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법인46013-25, 1997.01.08) Ⅱ

[질의내용]

본인의 아들은 1992.11. 출생으로 행동 및 언어발달이 느려 병원진단 결과 자폐증으로 진단되어 장애인 공제혜택을 위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음. 현재까지 자폐증 치료를 위한 병원에서의 수술 또는 약물치료방법은 없다고 하며, 오로지 특수교육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함. 현재 자폐증 치료를 위한 특수교육은 정규대학 특수교육학과 출신으로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가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본인의 아들도 자폐증치료를 위해 특수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바, 교육원비로 한달 25만원 납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 자폐증 치료를 위한 특수교육원비가 의료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 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공제대상의료비는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의료비(의료법 제3조 규정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약품 구입비용)를 말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지출한 비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 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제1항 제3호

Ⅱ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81, 2006.01.23) Ⅱ

[질의내용]

당사는 ○○병원으로 당사에서 직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 인지 여부

[회 신]

1.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여 산후조리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의료비영수증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라면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요 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의료비영수증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라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Ⅱ 결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아닌 경우 소득공제 여부
(서이46012-10376, 2003.02.24) Ⅱ**

[질의내용]

근로자가 올해 결혼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딸을 위하여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및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당해 의료비 및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면 딸의 배우자(사위)가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기 질의회신인 [재정경제부 소득46073-12, 2001.01.01], 국세청46013-2470(1998.09.02), 법인46013-2470(1998.09.02), 우리센터 서이46013-10828(2001.12.2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46073-12, 2001.01.01

1.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3-2470(1998.09.02)

2.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요 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 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제1항 제3호

Ⅱ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 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여부

(서이46013-10442, 2002.03.11) Ⅱ

[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를 다음해에 지원하는 경우 당해 의료비지원금의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시기를 질의함.

[회 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제1항

Ⅱ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원천46013-83, 2002.03.09) Ⅱ

[질의내용]

- (1) 본인부담 의료비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2001년 연말정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를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지원금은
 - ① 2001년에 지급받은 총지원금(2000년+2001년 진료분)인지
 - ② 2001년에 지급받은 총지원금중 2001년 진료분인지

[회 신]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요 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유사사례]

- 재경부소득46073-206, 2001.11.8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의료비는 「공제대상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마.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세제지원

소득세법 제12조 마목에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및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적

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同)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2008년부터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¹¹⁾ 이와 같이 2007년 이전에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구분하던 육아휴직 급여 등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취지는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특정 요건을¹²⁾ 모두 갖춘 경우에 월 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거법률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¹³⁾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¹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복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특정 요건을¹⁵⁾ 모두 갖춘 경우에 <표-8>과 같이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의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11)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는 2007.7.19.자 소득세법에서 개정되어 개정법률 시행(2008.1.1.) 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2008.12.26.자 소득세법에서 개정되어 2008.12.26.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즉, 2008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후자의 개정은 일반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공무원 등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그 성격이 동일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무원 등의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12)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표-7>과 같다.

<표-7>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각호)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동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을 것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같은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3)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0조).

14)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표-9>와 같다.

<표-8> 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1조)

1. 상한액 :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5만원. 다만,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하한액 :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또한, 근거법률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고, 동(同)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9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이나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¹⁶⁾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를 공제한다고 규정하였다.¹⁷⁾

여기서 근거법률로 제시한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는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였고, “직장보육시설”을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¹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

<표-9>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 (고용보험법 제75조 각호)

1. 휴가가 끝난 이전에 동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동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16) 그 밖에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특정시설(조세특례제한법 <별표 9>에서 규정한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등)도 해당한다.
 - 17) 이러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에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18) “보육시설”은 “보호자(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의 위탁을 받아 영

한다.)”로 정의하였다.

또한, 동법 제24조에서는 <표-10>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동법시행규칙 <별표 8>의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동(同)기준의 주요한 내용은 <표-10>과 같다.

<표-10>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8>)

: 2. 보육시설의 운영 가. 보육대상 보육시설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 다. 보육시간 보육시설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바. 비용의 지출 1) 보육시설의 지출은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 보험가입 1)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및 화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보육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3. 안전 및 위생관리 : 다.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1)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 정의하였다.

3. 출산 후 재취업까지의 양육비 지원세제의 평가

1) 개괄적인 평가

조세제도¹⁹⁾ 내의 양성 불평등 요소는 법적 주체에게 부과되는 법인세나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보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에 직접 부과되는 소득세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며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시스템에서 발생하며, 뚜렷한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와 달리 암묵적인(implicit)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식별이 어렵다.²⁰⁾

그런데 현행 소득세 과세제도는 전체적으로 부부의 소득을 각자 과세하는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부녀자공제제도 등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어서 명시적인 여성 차별적인 요소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에 비해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기혼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소득세를 통한 경제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면서 육아를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바람직한 개선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 다른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혼 여성에게 자녀양육과 관련한 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확대시켜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혼 여성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추게 하여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시키고 육아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혼여성에게 낮은 실효 소득세 부담을 제공하는 것이 여성의 노동공급 활성화,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출산률 제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다시 육아 문제를 중심으로 기혼 여성에 제공되는 조세혜택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현행 소득세제는 제도상 미흡한 점이 있다. 별개의 항목으로 설명한다.

2) 자녀양육비 지원(child care subsidies)의 평가

현행 소득세법에서 자녀양육비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종합소득공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의 공제를 허용하고(자녀양육공제,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19) 이하의 분석은 김현숙(2007, 기혼여성과 소득세)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20) 명시적인 뚜렷한 불평등 요소는 법령이나 규정, 규제 등에 의해 식별이 가능하지만 암묵적인 요소는 법령이나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반응이나 행위가 다르므로 인해 나타나는 것들로 의도적으로 존치시키는 경우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으나 경제주체의 행위로 인해 결과하는 것일 수도 있다.

경우에는 연 {50만원+100만원×(자녀인원수-2명)}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다자녀추가공제, 동법 제51조의 2 제1항).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직계비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와 보육시설 등에 지급한 교육비로서 1명당 연 300만원 내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녀 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연 700만원의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현행 세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그 지원에 실효성이 작다. 자녀양육비에 대한 소득세법의 지원규정은 절대적인 수준에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동(同)지원규정이 종합소득공제를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임금수준에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는 기혼 여성근로자들에게 실효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동일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적용되는 세율이 더 높은 고임금 근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세금부담의 감소효과가 더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소득공제의 적용으로 인해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혼 여성근로자들이 자녀양육비에 대한 지원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자영업 여성근로자를 배제하고 있다. 근로소득 외에 자영업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 여성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급여근로자에 비해 차별없는 조세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전술한 교육비 공제와 의료비 공제의 혜택을 전혀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 기혼근로자들에게 보다 실효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을 근로자에 한정하는 대신 모든 종류의 소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소득공제 방식의 현행 지원규정에 미국세법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른 Phase-Out 규정을 적용하거나 일본세법과 같이 지출액 수준에 따른 Phase-Out 규정을 적용하거나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세수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비교적 소득이 낮은 기혼 여성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맞벌이가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자녀양육비에 대한 이상의 직접적인 지원규정과 함께 현행 소득세법은 기존의 사회보장망의 보호가 취약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시행하여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하고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 기혼근로자의 소득이 비교적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EITC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EITC를 수급하기 위한 신청자격과 산정금액은 <표-5> 및 <표-6>와 같다.

<표-5> EITC의 신청자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① 부양자녀 요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부양자녀를 ²¹⁾ 1명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a)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일 것 ²²⁾	b) 18세 미만일 것 ²³⁾
c)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② 소득 요건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종합소득의 합계액(분리과세분 포함)이 1,700만원 미만일 것	
③ 무주택 요건	
세대원 전원이 주택 불소유 (단,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	
④ 재산가액 요건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²⁴⁾	

<표-6> 근로장려금의 산정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총급여액 ²⁵⁾	근로장려금
-800만원	15%
800만원-1,200만원	0% (최대 120만원)
1,200만원-1,700만원	-24%

<표-5>에서 제시한 EITC의 신청자격 중에서 소득 요건은 기혼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맞벌이 가구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영유아의 양육 대신 취업을 선택한 기혼 여성에게는 자녀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EITC 제도의 취지가 차상위계층을 노동시장에 유입시킴으로써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계계층에 속한 가정에서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 기혼 여성이 육아 문제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추가적으로 취업하는 점을 고려하면 <표-5>의 신청자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표-6>와 같이 최대 120만원에 그치는 근로장려금도 이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동(同)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1)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하지만 ① 직계비속의 경우 또는 ② 거주자(또는 부양자녀)가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도 해당한다.
 22) 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 포함한다.
 23) 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이 없다.
 24) 이상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도 ① 생계급여·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자 ②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또는 ③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을 배제한다.
 25)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합산

3) 과세단위로 본 소득세 과제구조의 적합성 평가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²⁶⁾ 제외하면 부부의 소득을 별개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세액계산을 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부부의 자산소득합산 과세”를 통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부부 중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부부를 동일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았으나 2002.8.29.자 헌법재판소 판결(헌재2001헌바82)에서 (구)소득세법 제61조를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는 소득재분배 등의 공익보다는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에 비해 차별취급 받아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크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이후에는 완전한 부부별산제가 시행되고 있다.²⁷⁾

이와 같은 현행 소득세법의 완전한 부부별산제는 부부의 합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에 비해서는 대부분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국가경제 전체의 노동투입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 결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대부분 이차적 수입원인 여성근로자들의 경제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육아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²⁸⁾ 또한 소득세의 현행 개인단위 과세방식은 결혼에 대한 중립성의 보장과 프라이버시(privacy)의 보호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기혼부부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부부의 공동기여를 고려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제도 및 상속 기여분과도 조화되지 않으며, 소득의 인위적인 분산을 일으켜서 과세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조세회피의 방지에 따른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다.²⁹⁾

한편 현행 소득세에서는 기혼 여성근로자의 면세점이 연간 700만원으로 비교적 낮고,³⁰⁾ 동(同)금액은 기혼 여성근로자들이 월 200만원 내지 250만원의 가치에 이르는³¹⁾ 가사 및 육아를 포기하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단위 과세방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과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조세혜택이 필요하다.

26)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27) 물론 이후에도 2005.12.31.자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방법을 전환함으로써 부부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기도 했지만, 동(同)법률은 2008.11.13.자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이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28) 이하의 분석은 김완석(2005,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29) 이러한 문제점들은 배우자공제 등과 같은 인적공제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완전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30) 700만원(총급여)-500만원(근로소득공제(500만원×80%+ 200만원×50%))-150만원(기본공제)-50만원(추가공제)=0원

31) 2000.4.19.자 서울가정법원 판결 등 참고

4)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세제지원 평가

육아휴직과 관련한 법령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해 대부분의 경우 여성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최대 1년으로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고 월 50만원의 충분하지 못한 급여는 동(同)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이후에 휴직 이전과 유사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휴직기간 동안의 업무단절로 인해 사실상 중요성이 낮은 업무에 배치되고 이로 인해 해당 직장에서의 장기적인 경력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세법에서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것이 동(同)휴직을 고려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약간의 유인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취학전 자녀의 양육과 직장 내의 경력관리 및 경제적 보상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가급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고 근무시간과 형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육아에 유리한 근무시간 및 형태 등의 채택과 관련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2009.3.25.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고용위기가 확산되고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함으로써³²⁾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와 사회안전망의 확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취지로 근로자에게 육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자의 추가적인 부담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할 경우에는 현재의 육아휴직 제도에 비해 여성근로자들의 육아와 경제활동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산전후 휴가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기초적인 모성보호와 출산장려를 위해 산전후휴가는 육아휴직에 비해서는 여성근로자가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고 급여도 비교적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출산을 전후한 일회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산전후휴가 이후에도 여성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32) 이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을 기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동(同)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을(결과적으로 임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super-deduction”이라고 한다.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동(同)급여가 사업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육아휴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산전후휴가를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한 여성근로자들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갖추고 육아에 유리한 근무시간 및 형태 등을 채택·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추가적인 부담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사업주의 추가적인 필요경비나 공제가능한 세액으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역시 현행 제도에 비해 여성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고 경제활동에 따르는 제약도 최소화시켜서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의 평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제상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사업자는 영유아가 있는 여성의 숙련된 노동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직장내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사업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에 비해서는 지출의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충분한 조세혜택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조세혜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동(同)시설을 신축·구입하도록 유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자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표-11>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고(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공제한다고 규정하였다.

<표-1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세액공제액 = ①+②+③

- ①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 20% (중소기업은 30%)
- ②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20% (중소기업은 30%)
- ③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않거나 ①·②를 선택하지 않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MAX(④, ⑤)
- ④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소급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 40% (중소기업은 50%)
- 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공제율³³⁾ (중소기업은 25%)

<표-11>과 같이 직장보육시설의 신축·구입에 비해 훨씬 사업관련성이 크고 지출의 우선순위도 높은 연구·개발활동의 경우 시설투자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일반적인 지출액만 고려하더라도 지출액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장보육시설은 취득금액, 특히 동(同)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의 매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를 세액공제로 허용하는 것은 사업자들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조세감면이 적용되어 감면후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중 일부를 배제하기 때문에(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직장보육시설의 취득금액 중에는 이상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조세감면의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되어 제한없이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에서 중소기업의 동(同)세액공제 전액과 대기업의 동(同)세액공제 중에서 내국인의 석·박사 인건비분 세액공제액은 이러한 최저한세 적용배제분에 해당한다.

즉, 특정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과 같이 과세관청이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보는 일부 조세감면의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제한없이 세금혜택을 제공하는데 반해 해당 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신축·구입하더라도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해 동(同)시설의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同)세액공제를 통한 조세유인도 제한적일 수 있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교적 사업관련성이 작은 직장보육시설의 취득금액은 다른 사업용 지출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는데 동(同)취득금액보다 우선순위가 앞선 사업용 지출에서 이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同)취득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정의한 영유아보육법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해석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해당 기업에서 동(同)시설의 신축·구입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즉,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을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同)보육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의 법률해석 여부에 따라서 동(同)세액공제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특정 시설에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과 6세 이상의 취학전 아동을 동시에 보육하는 경우 동(同)시설이 세액공제 대상인 보육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로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동(同)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이를 영유아만을 보육하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동(同)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은 아직 없지만 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에 의하면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전자와 같이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세액공제를 기대하고 시설을 신축·구입한 사업자가 이후 동(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3) 공제율 = MIN(3%+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수입금액)×50%, 6%)

제3장 외국 입법례

1. 미국

1) 표준공제와 납세지위³⁴⁾

납세자가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법적으로 배우자와 결별한 상태인 경우 과세기간 전체에 걸쳐 미혼자로 간주된다.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에 이혼이 성립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 전체에 걸쳐 미혼자의 지위를 얻는다. 만약 오직 미혼자로서 세금 환급의 목적만으로 당해 연도에 이혼하였다가 다음 과세연도에 재혼하는 경우 납세자와 배우자 모두 기혼자로서 과세된다. 미혼자로 간주되는 경우 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지위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미망인(남/녀)의 지위로 신고할 수 있다.

기혼자인 경우 납세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신고할 수 도 있고 분리하여 신고할 수 도 있다. 기혼자로 인정되려면 부부가 현재 살고 있는 주 또는 결혼한 주의 법에 따라 납세자와 배우자가 남편과 부인으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야 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면 기혼자로 간주한다. 이혼절차 중에 있는 경우 최종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혼자(미혼자)로 보지 않는다. 만약 과세기간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기혼자로 간주하며, 동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재혼하지 않았다면 납세자와 사망한 배우자 공동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다음 2과세연도까지 부양자녀가 있는 미망인(남/녀)에 대한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사망한 연도에 재혼하는 경우, 납세자는 새로운 배우자와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망한 배우자는 당해 연도에 기혼자의 지위로 신고가 가능하다. 기혼상태이지만 부부가 서로 떨어져 사는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미혼자로 간주될 수 있어,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대주로서 신고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기혼자로서 신고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표준공제액은 더 커지며, 납부세액은 작아지게 된다. 또한 EIC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기혼자가 분리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한 이유는 공동신고에 비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최저한세의 적용에 따른 총 면세액도 1/2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자녀보육비 세액공제와 부양가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회사에서 부양가족 지원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공동신고에 비해 절반인 \$2,500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EIC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34) http://www.irs.gov/publications/p501/ar02.html#en_US_publink100041810

교육비 세액공제(Hope credit, American opportunity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나 학생대출금이자 공제(deduction for student loan interest), 교육비 공제(tuition and fees deduction) 등을 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공동신고 소득의 1/2수준의 소득구간에서의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감소된다.

가. 독신세대주(Head of Household)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독신세대주(Head of Household)로서 세금 신고가 가능하다.

1. 미혼이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최종일을 기준으로 미혼으로 간주되는 자
2. 매년 가정생활비용의 1/2 이상을 지출하는 자
3. 일시적인 사유(학교 등)로 반 년 이상을 함께 거주하는 적격자. 적격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요건에 해당함

‘미혼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독신세대주가 되려면 직전 과세연도의 최종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분리신고하여야 한다.
2. 1과세연도 동안의 가정생활비용의 1/2이상을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3. 과세연도의 최종 6개월 간 배우자가 본인의 집에 거주하여서는 안 된다. 배우자가 특수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본인의 집이 6개월 이상 친자녀 또는 의붓자녀(step child), 수양자녀(foster child) 등의 주된 주거지였어야 한다.
5. 자녀에 대한 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독신세대주로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독신자 또는 기혼자 중 분리신고 하는 자에 비해 적용세율이 낮아지며 표준공제액은 더 커진다.

나. 부양자녀가 있는 미망인(Widow(er) With Dependent Child)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는 기혼자로서 공동신고할 수 있다. 배우자 사망 후 다음 2과세연도 동안에는 부양자녀가 있는 미망인(남/녀)의 지위로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동신고에 적용되는 세율과 높은 표준공제액을 적용받게 되지만 공동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부양가족공제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에는 친자녀 외에 의붓자녀(step child)나 수양자녀(foster child)³⁵⁾도 포함되지만 납세자보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되며 배우자와 공동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보다도 어려야 한다. 풀타임학생의 경우 24세 미만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된다.

2) 자녀보육 관련 비용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³⁶⁾

납세자가 자녀보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요건을 갖춘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출이어야 하며, 납세자 또는 공동신고하는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육비 지출은 납세자 또는 공동신고하는 배우자의 근로활동의 유지 또는 구직활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외식 등의 외출을 위해 보모(babysitter)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관련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 보육비가 될 수 없다. 또한 1주일 중 3일만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1주일치의 보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3일치의 보육비에 대해서만 근로관련 지출로 인정한다. 만약 3일간의 보육비만 따로 지급할 수 없고, 1주일단위의 비용으로만 지급가능한 경우에는 지출액 모두를 근로관련소득으로 인정한다. 이 때 보육비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이어야 하므로, 배우자에게 지급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혼자는 공동신고하는 경우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혼이거나 독신세대주, 부양자녀가 있는 미망인(남/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신상정보는 납세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부양가족을 통해 보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자녀 1인의 보육에 대해서는 \$3,000까지, 자녀 2인의 보육에 대해서는 \$6,000까지 비과세 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보육비 세액공제는 적격 자녀 보육비용에 20%~35%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적격비용은 자녀 1인은 3,000달러 자녀 2인은 6,000달러까지 인정된다. 자녀 2인을 가진 부부 합산세대로서 AGI가 \$27,500달러인 경우 28%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보육비로 최대 \$6,000달러를 인정받는 경우의 세액공제액은 \$151이며, 자녀 2인을 가진 이혼자로서 AGI가 \$29,000이며 두 자녀에 대한 보육비로 \$2,400달러를 지불한 경우 세액공제액은 \$672가 된다.

35) 입양자녀(adopted child)는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를 뜻하며 언제나 자녀에 포함된다. 수양자녀(foster child)는 공인주선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판결에 의해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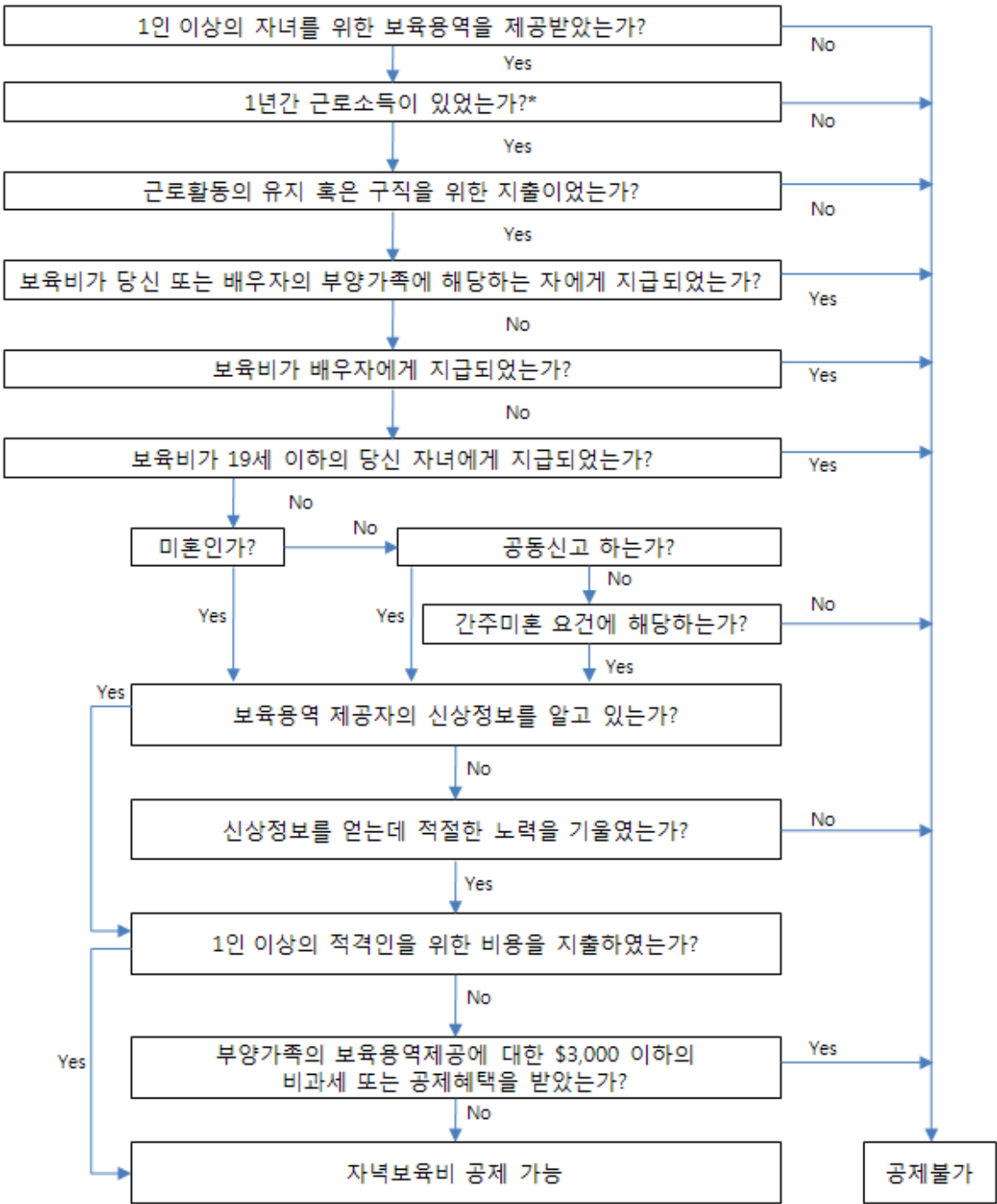
36) http://www.irs.gov/publications/p503/ar02.html#en_US_publink1000121278

<표-12> 자녀보육비 공제율

소득구간 (AGI)	적용공제율
\$0 — \$15,000	35%
15,000 — 17,000	34%
17,000 — 19,000	33%
19,000 — 21,000	32%
21,000 — 23,000	31%
23,000 — 25,000	30%
25,000 — 27,000	29%
27,000 — 29,000	28%
29,000 — 31,000	27%
31,000 — 33,000	26%
33,000 — 35,000	25%
35,000 — 37,000	24%
37,000 — 39,000	23%
39,000 — 41,000	22%
41,000 — 43,000	21%
43,000 — No limit	20%

자녀보육비 공제에 관한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 자녀보육비 공제 요건 테스트



* 이 요건은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풀타임학생인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3)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³⁷⁾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에 대하여 자녀보육 관련비용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와 EIC(earned income credit) 외에 자녀 1인당 최고 \$1,000까지 추가적인 공제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공제대상이 되는 자녀는 해당 과세연도의 절반 이상을 납세자와 함께 거주한 자녀, 의붓자녀, 수양자녀 등으로서 17세 미만인 자에 한한다. 다만 부부합산세대로서 조정후소득(AGI)이 11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미혼, 독신 세대주(head of household) 또는 미망인(qualifying widow(er))으로서 7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부부가 분리하여 신고하는 세대로서 5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 공제액이 감액된다.

최현수(2007b)에 의하면, 이 제도는 부양아동에 대한 인적공제(소득공제)와는 다른 환급형 세액공제로서 납부해야 할 연방 소득세액이 있는 가구의 세액을 공제할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를 연방정부로부터 현금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방식의 제도인데, 2005년 현재 약 462억 달러로 EITC를 제치고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소득지원 프로그램이 되었다.³⁸⁾

4) 교육 관련 비용 세액공제(Tax Benefits for education)³⁹⁾

소득세액 중 교육 관련 비용을 세액공제 해 주는 제도로는 2009년 현재 American opportunity credit, Hope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의 3종류가 인정된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⁴⁰⁾제도는 적격요건을 갖춘 교육비용에 대하여 학생 1인당 최대 \$2,5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세액공제액은 납부소득세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데,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공제(deduction)방식이 아니라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공제방식이 사용된다. 따라서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의 40%가량은 환급대상이 된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적용받으려면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지출한 적격교육비용이어야 하며, 적격요건을 갖춘 학생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적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인정받으려면 최근 4년간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또는 Hope credit을 신청한 적이 없어야 하며, 해당 과세연도 전에 중등과정 이후의 최초 4년간의 교육과정(일반적으로 대학교의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의 4년 과정을 뜻한다)이 완료되지 않

37) http://www.irs.gov/publications/p972/ar02.html#en_US_publink100012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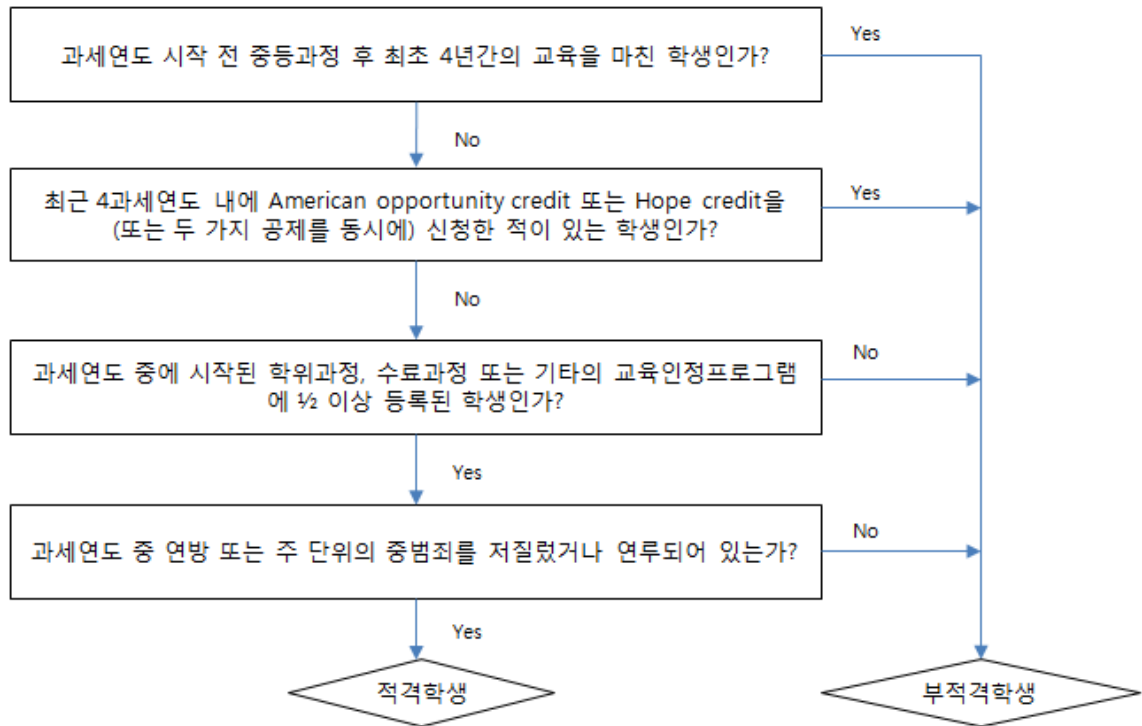
38) 이상신, “출산장려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201.

39) http://www.irs.gov/publications/p972/ar02.html#en_US_publink100012080

40) <http://www.irs.gov/publications/p970/ch02.html#d0e1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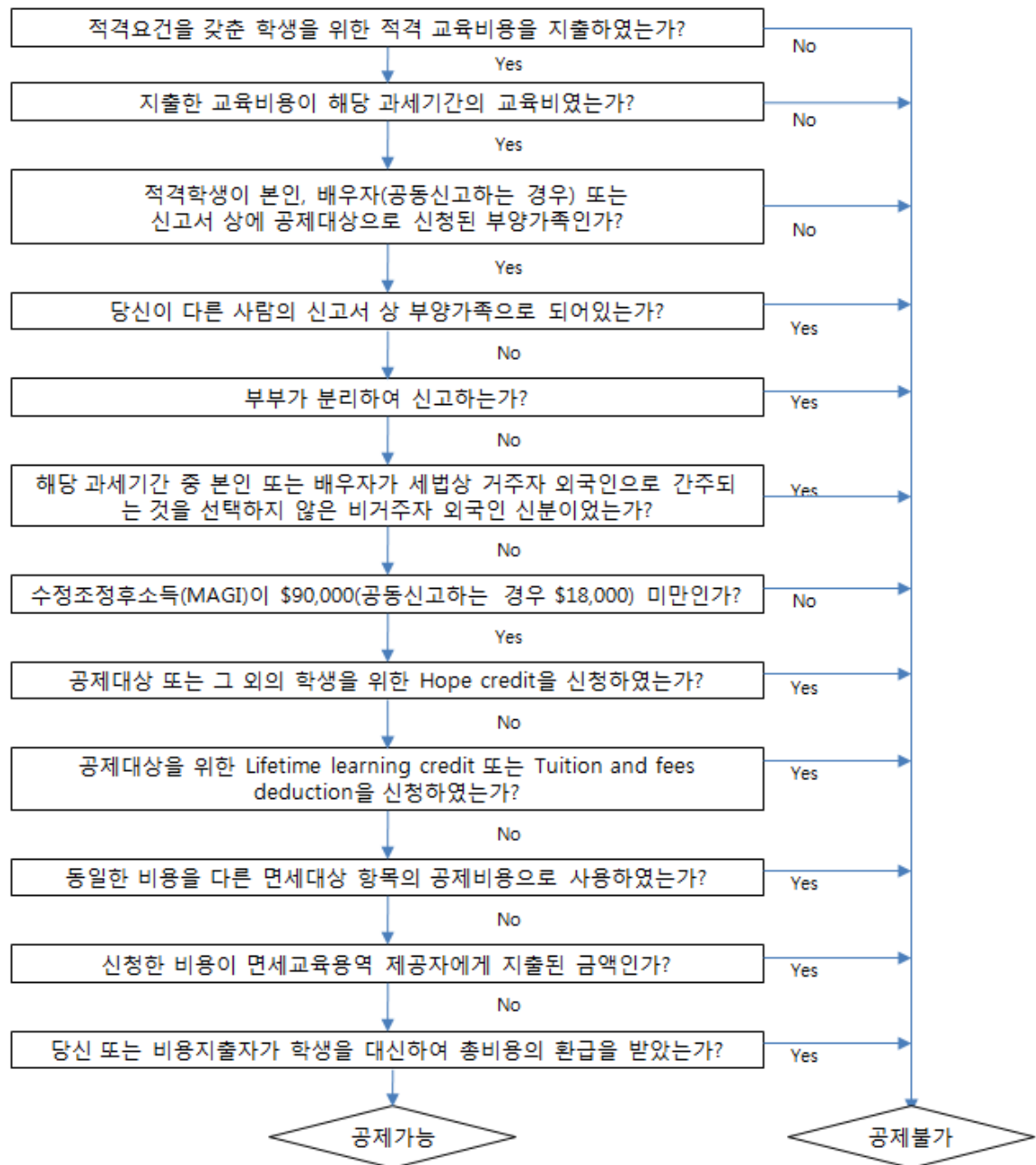
은 상태이어야 한다. 만약 해당 과세연도에 연방 또는 주법에 따라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연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적격학생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적격학생에 관한 요건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3] 교육비 공제대상 적격학생 요건 테스트



적격요건을 갖춘 학생에는 납세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동일한 과세연도에 Hope credit의 적용을 신청한 자가 1명이라도 있거나 동일한 자가 lifetime learning credit이나 tuition and fees deduction을 신청한 경우에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부부가 분리하여 신고하는 경우나 교육비지출자가 그의 부모 등과 같이 다른 누군가의 세금신고에 부양가족으로 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조정후소득(AGI)에 공제액을 반영한 수정조정후소득(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90,000 이상(공동신고 하는 경우에는 \$180,000 이상)인 경우에도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의 적용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4]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요건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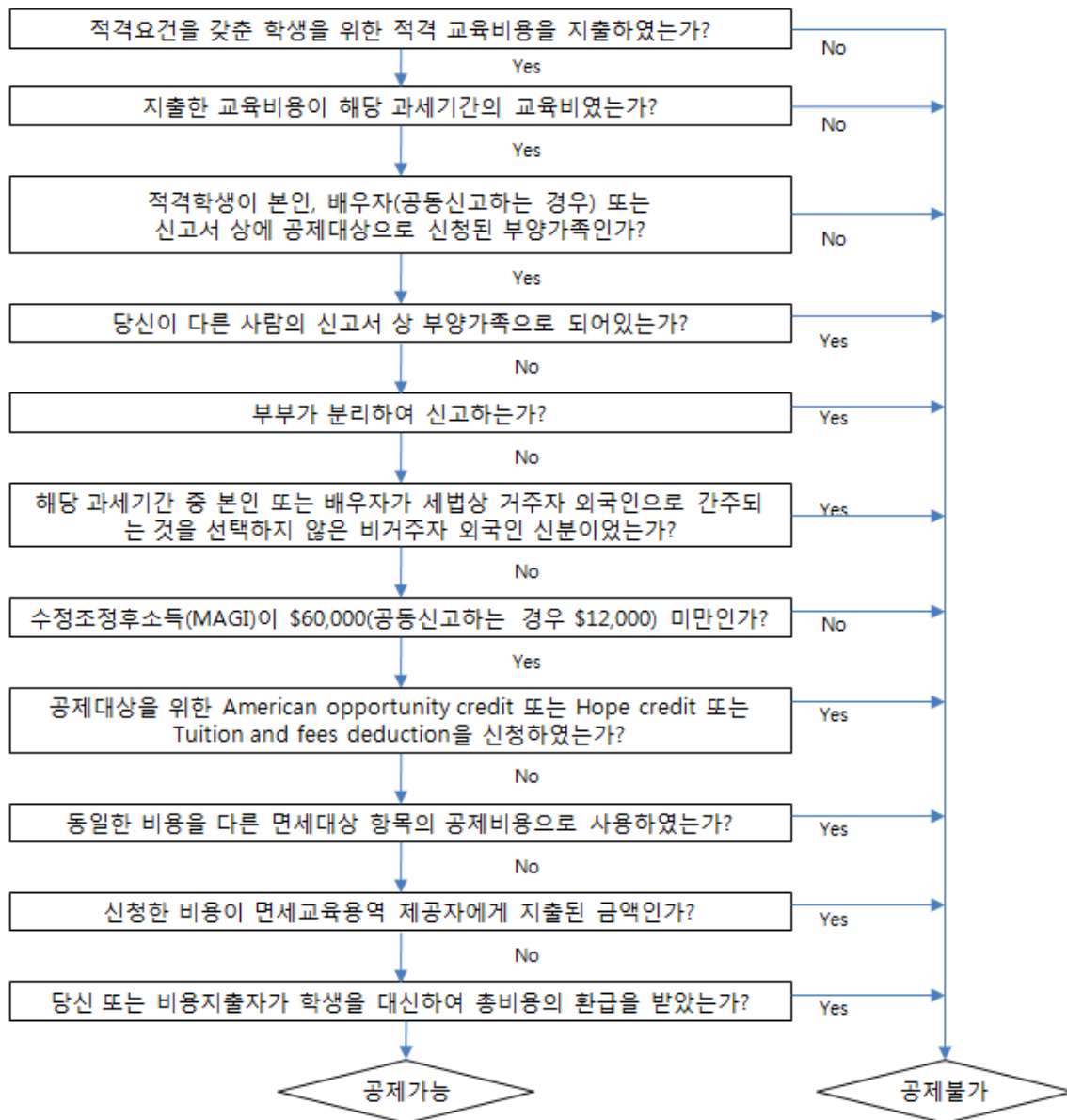
Hope credit⁴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기존의 Hope credit제도는 새로운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의 도입으로 대부분 대체되었지만, 예외적으로 중서부지방의 재난지역에 대해서는 대규모 Hope credit(최대 \$3,600)이 여전히 적용 가능하다. Hope credit을 적용받으려면 중서부지방 재난지역에 속해있는 적격 교육기관에 적어도 1인 이상의 학생이 출석하고 있어야 하며,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중 동일한 과세연도에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신청한 자가 없어야 한다. Hope credit의 적용제한 소득금액 한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어, 2008년 수정조정후소득(MAGI)이 \$58,000(공동신고하는 경우 \$116,000) 이상인 경우 Hope credit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이 2009년에는 \$60,000((공동 신고하는 경우 \$120,000)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Hope credit은 학생 1인당 최대 \$1,800 (중서부지방 재난지역에 속하는 경우 \$3,6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공제제도는 환급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세액이 감액되어 0이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급은 되지 않는다.

Lifetime learning credit⁴²⁾은 학생 1인당 최대 \$2,000(중서부지방 재난지역에 속하는 경우 \$4,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공제제도는 학생 1인당 신청가능한 연도수의 제한이 없어 적격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공제가 가능하다. Hope credit과 마찬가지로 환급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세액이 감액되어 0이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급은 되지 않는다. Lifetime learning credit의 적용제한 소득금액한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2008년 수정조정후소득(MAGI)이 \$58,000(공동신고하는 경우 \$116,000) 이상인 경우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이 2009년에는 \$60,000((공동신고하는 경우 \$120,000)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상의 요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 <http://www.irs.gov/publications/p970/ch03.html>

42) <http://www.irs.gov/publications/p970/ch04.html>

[그림-5] Lifetime learning credit 요건 테스트



Tuition and fees deduction⁴³⁾은 과세가능소득에 대하여 최대 \$4,000까지 공제해주는 소득 공제제도이다. 납세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한 해 동안 지출한 적격 교육비는 공제(deduct)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가 분리하여 신고하였거나 교육비지출자가 그의 부모 등과 같이 다른 누군가의 세금신고에 부양가족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지출한 것만이 적격 교육비로 인정된다. 수정조정후소득(MAGI)이 \$80,000(공동신고하는 경우 \$160,000)이상인 경우와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가 분리하여 신고하였거나 교육비지출자가 그나 Hope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 등의 경우에는 Tuition and fees deduction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5) 의료 관련 비용 세액공제(Medical and Dental Expenses)⁴⁴⁾

의료비에는 진단비용, 치료비용, 통증완화비용, 처치비용, 질병예방비용, 신체의 특정 기능이나 특정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처치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에는 합법적인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내·외과 의사, 치과의사 등에게 지불되는 비용은 물론 이와 관련된 장치나 물품 등의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의료비용은 반드시 그 주요한 목적이 신체적·심리적 고통의 완화와 질병의 예방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영양공급이나 휴식과 같이 단순히 일반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선천적 불구나 신체적 상해에 따른 성형수술비, 치료기간 동안의 통원비나 숙박비, 장애치료를 위한 특수학교의 수업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휠체어, 보조견, 라식수술비용, 응급실비용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미용만을 위하여 불법적 수술이나 처치에 소요된 비용,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품비 등은 공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⁴⁵⁾ 의료비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 지출이나 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출은 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올해의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의료비는 그 제공시기와 관계없이 오직 올 한 해 동안 지출된 것인가만을 파악하여 결정된다. 보험회사 혹은 기타 경로를 통해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총액은 조정후소득(AGI)에서 차감하게 되는데, AGI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므로 7.5%에 미달하는 통상적인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AGI가 \$40,000이라면 AGI의 7.5%인 \$3,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만약 의료비로 한 해 동안 총 \$2,500을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는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43) <http://www.irs.gov/publications/p970/ch07.html#d0e7909>

44) http://www.irs.gov/publications/p502/ar02.html#en_US_publink100014757

45) 김완석, 『소득세법론』, 광교이텍스, 2009, p.83

공제가능한 의료비는 본인이 지출한 것 외에 일반적으로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위해 지출한 것도 인정받을 수 있다. 자녀 등의 부양가족은 19세 미만이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보다 어려야 하며 풀타임학생인 경우에는 24세 미만까지 포함한다.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그가 지출한 의료비가 모두 공제대상으로 인정된다.

6) 근로소득 공제(Earned Income Credit)⁴⁶⁾

근로소득공제(EIC, earned income credit)는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9세 미만 또는 풀타임학생 24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이거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⁴⁷⁾ 이 공제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액을 감액시켜 주는 것으로서 일정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환급도 가능한 제도이다. 기준금액이 되는 조정후소득(AGI) 한도액은 적격요건을 갖춘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 <표-13>과 같이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고 있다.

<표-13> 자녀 수당 조정후소득 한도액

자녀 수	조정후소득(AGI)
자녀 3인 이상	\$43,279(공동신고 하는 경우 \$48,279) 미만
자녀 2인	\$40,295(공동신고 하는 경우 \$45,295) 미만
자녀 1인	\$35,463(공동신고 하는 경우 \$40,463) 미만
자녀 없음	\$13,440 (공동신고 하는 경우 \$18,440) 미만

2.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과정은 개산경비공제, 의료비나 보험료공제와 같은 개인적 지출에 관한 공제,⁴⁸⁾ 기초공제와 부양공제와 같은 인적공제 등으로 나누어진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의 종류는, 잡손 공제, 의료비 공제, 사회보험료 공제, 소규모 기업 공제 등 부금 공제, 생명보험료 공제, 지진 보험료 공제, 기부금 공제, 장애자

46) <http://www.irs.gov/publications/p596/ar01.html#d0e23>

47) There are two ways to get earned income : You work for someone who pays you, or; You work in a business you own.

48) 개인적 지출에 관한 공제는 우리의 특별공제와 같다(김완석, 전계서, 91면).

공제, 과부 공제(이 공제는 여성의 경우와 남성의 경우 요건에 차이가 있다), 근로학생 공제, 배우자 공제, 배우자 특별 공제, 부양 공제, 기초공제 등이며, 이 중 기초공제의 액수는 38만 엔이다.⁴⁹⁾ 이것을 정리하면,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배우자특별공제 및 부양공제가 인적 공제항목에 해당하며, 과부공제와 근로학생공제, 장애인공제가 추가공제에, 그리고 잡손공제와 의료비공제가 특별공제에 해당한다. 다른 항목들은 법령에 의해서 가입의무가 지워지거나 한 경우들로서 담세력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⁵⁰⁾

일본의 경우 기초공제는 납세의무자 본인에 대한 것이라는 점, 교육비공제항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우리의 공제제도와 구별되지만, 소득공제라는 점 및 그 공제의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우리 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이하에서는 양육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정리한다.

1) 자녀보육비

일본의 경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소득공제의 방식에 의한다. 국세의 경우 부양공제는 자녀 1명당 38만 엔이며, 자녀의 연령이 16~23세인 경우에는 특정부양공제라고 하여 공제액이 63만 엔이 된다(日소득세법 제84조). 특정부양공제는 실질적으로는 교육비에 다액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공제의 성격을 갖는다.⁵¹⁾

2) 의료비

의료비의 경우에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일 소득세법 제73조)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의료비 중 보험금 등에 의해 보전되는 부분을 제외한 총소득금액 등의 5%(총소득금액이 200만엔이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또는 10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의 합계액-보험금등에서 보전되는 금액-10만엔」에 의해 산출되며, 200만 엔을 한도로 한다.⁵²⁾

출산과 관련하여 의료비공제의 대상이 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임신이라고 진단된 후의 정기 검진이나 검사 등의 비용, 통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며, 출산으로 입원할 경우에 택시를 이용했을 경우 그 택시 요금은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된다. 조산사에 의한 출산의 경우에도 그 시중의 대가에 대해 의료비공제가 인정된다. 그러나 입원시 잠옷이나 세면도

49) <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1100.htm>

50)金子宏, 「租税法」(제14판), 弘文堂(2009), p.183 이하 참조

51)水野忠恒, 「租税法」(제2판), 有斐閣, 2005, p.267

52) <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1120.htm>(소득세법 73, 120, 소령 262, 소기통 73-1~10)

구 등 물품을 구입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병원의 식사대는 의료비공제대상이 되지만 외부로부터 요리 배달을 시키거나 외식한 것에 대해서는 공제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⁵³⁾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답례를 한 경우에도 의료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간병인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공제대상으로 인정한다. 일반적인 의료비에 있어서도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진료비, 입원비(식사비를 포함하며, 병실료 차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치료 목적의 진찰료(식사비를 포함하며, 병실료 차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통원을 위한 교통비(전철이나 버스), 긴급시의 택시 요금, 건강진단 비용(병발견의 경우) 등이며,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자가용차로 통원했을 경우의 기름값, 건강 유지를 위한 영양ドリンク 비용, 건강진단 비용(병이 발견되지 않았던 경우) 등이다.⁵⁴⁾ 6개월 이상 외병생활로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기저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기저귀대도 의료비공제가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의사가 발행한 「기저귀 사용 증명서」가 필요하다.

3. 시사점

미국의 소득공제제도는 총소득금액(gross income)에서 사업관련비용 등 공제액(deductions)을 차감하여 조정후소득(AGI)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의료비와 같은 항목별공제 또는 표준공제액을 공제하고 다시 인적공제액(exemptions)을 차감하여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9세 이하 또는 24세 이하의 풀타임학생인 자녀에 대해서는 2008년 현재 1인당 3,500달러의 인적공제가 인정되며,⁵⁵⁾ 이 외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조세지원항목으로 미국 세법상의 제도는 자녀보육비, 교육비, 의료비, EITC 제도 등이 인정된다. 미국의 제도와 우리가 확연히 다른 점은 보육비와 관련된 비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인적공제의 기본구조를 개정하고 아동에 대한 부양공제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거나 확대하려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개산경비공제, 의료비나 보험료공제와 같은 개인적 지출에 관한 공제, 기초공제와 부양공제와 같은 인적공제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초공제는 납세의무자 본인에 대한 것이라는 점, 교육비공제항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우리의 공제제도와 구

53) <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1124.htm>(소득세법 73, 소령 207, 소기통 73-3, 73-7~9)

54) <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1126.htm>(소득세법 73, 소령 207, 소기통 73-3, 73-6, 73-8, 73-9)

55) Generally, you can deduct \$3,500 for each exemption you claim in 2008

(http://www.irs.gov/publications/p501/ar02.html#en_US_publink100041810: 최종접속일자 : 2010.3.3)

별된다.

다만 양육비 항목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제적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세제지원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일본과 비교하여 수행하기로 한다.

제4장 양육비 세제지원의 효과 분석

1. 일본

1) 교육비 자료

일본의 경우에는 교육비와 관련된 통계자료가 잘 되어 있었으며, 특히 각 교육단계별·상황별 교육비 통계가 잘 되어 있었다. 일본의 통계자료에서 육아 비용에 크게 관계되는 연령별 학비에 대해서, 학교별로 교육비용(평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⁶⁾

가. 유치원비

유치원 비용은, 총 합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립이 공립의 2.1배 정도 더 소요되었다.

<표-14> 유치원 소요비용

항목	공립 유치원 비용 3년간 약 75만엔		사립 유치원 비용 3년간 약 162만엔	
	연간 평균	3년간 총액	연간 평균	3년간 총액
수업료	74,446엔	223,338엔	243,267엔	729,801엔
그 외 유치원 교육비 (제복·교과서·소품비 등)	58,900엔	176,700엔	125,125엔	375,375엔
유치원 급식비(간식 포함)	14,390엔	43,170엔	25,153엔	75,459엔
원의 활동비(학원·습관 비용 등)	103,588엔	310,764엔	144,861엔	434,583엔
학습비 합계	251,324엔	753,972엔	538,406엔	1,615,218엔

文部科學省「平成18年度子どもの學習費調査」より

나. 초등학교에 소요되는 학비

초등학교의 비용은 사립이 공립의 4.1배 정도 소요되었는데, 학교 교육비에는, 입학금·기부금, 소품·수학 여행비, 학급·PTA 회비, 교과서비, 학용품비, 통학비, 제복대, 통학 용품비, 그 외의 학교 납부금등이 포함되어 있다.

56) http://lify.jp/contents/insurance_point/p18.php

<표-15> 초등학교 학비

항목	공립 초등학교 비용 6년간 약 200만엔		사립 초등학교 비용 6년간 약 824만엔	
	연간 평균	6년간 총액	연간 평균	6년간 총액
수업료	0엔	0엔	396,119엔	2,376,714엔
그 외 학교 교육비	56,655엔	339,930엔	383,882엔	2,303,292엔
학교급식비	40,937엔	245,622엔	30,843엔	185,058엔
학교외 활동비(학원·습관 비용 등)	236,542엔	1,419,252엔	562,340엔	3,374,040엔
학습비 합계	334,134엔	2,004,804엔	1,373,184엔	8,239,104엔

文部科學省「平成18年度子どもの學習費調査」より

다. 중학교 학비

중학교의 학비는 사립이 공립의 2.7배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6> 중학교 학비

항목	공립 중학교 비용 3년간 약 142만엔		사립 중학교 비용 3년간 약 381만엔	
	연간 평균	3년간 총액	연간 평균	3년간 총액
수업료	0엔	0엔	410,918엔	1,232,754엔
그 외 학교 교육비	133,183엔	399,549엔	546,975엔	1,640,925엔
학교급식비	36,563엔	109,689엔	7,254엔	21,762엔
학교외 활동비(학원·습관 비용 등)	302,006엔	906,018엔	304,244엔	912,732엔
학습비 합계	471,752엔	1,415,256엔	1,269,391엔	3,808,173엔

文部科學省「平成18年度子どもの學習費調査」より

라. 고등학교 학비

고등학교(전일제)의 경우 사립이 공립의 2.0배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7> 고등학교 학비

항목	공립 고교 비용 3년간 약 156만엔		사립 고교 비용 3년간 약 314만엔	
	연간 평균	3년간 총액	연간 평균	3년간 총액
수업료	112,296엔	336,888엔	323,652엔	970,956엔
그 외 학교 교육비	231,626엔	694,878엔	461,637엔	1,384,911엔
학교외 활동비(학원·습관 비용 등)	176,581엔	529,743엔	259,945엔	779,835엔
학습비 합계	520,503엔	1,561,509엔	1,045,234엔	3,135,702엔

文部科學省「平成18年度子どもの學習費調査」よ

마. 대학학비

대학학비의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된다. 하나는 학부의 문제(문과 혹은 이과)이고 다른 하나는 통학이나 아니면 독립생활을 하느냐이다. 독립생활을 하는 경우 주거비가 필요하므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 내용은 다음 <표-18>과 같다.

<표-18> 대학교 학비

항목	국공립 대학 비용 4년간 약 518만엔	사립 대학/문과 비용 4년간 약 671만엔	사립 대학/이과 비용 4년간 약 828만엔
입학 비용	896,000엔	991,000엔	1,004,000엔
재학 비용	4,288,000엔	4,716,000엔	7,276,000엔
비용 합계	5,184,000엔	6,707,000엔	8,280,000엔

國民生活金融公庫「平成19年教育費負担の實態調査」より

<표-19> 대학교 주거비

항목	남자 입주시 비용 약 57만엔	여자 입주시 비용 약 67만엔
보증금·사례금	약 20만엔	약 24만엔
집세	약 5만 9,000엔	약 6만 4,000엔
생활 용품비	약 31만엔	약 37만엔
합계	약 56만 9,000엔	약 67만 4,000엔

東京地区私立大学教職員組合連合「2006年度私立大学新入生の家計負担調査について」より

이외에도 학교 진학을 위한 수험료가 필요한데, 이에 관하여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6] 학교 진학 수험료

中 学	私立中学の受験(入学考査)料 1校あたり 約2万5,000円
高 校	公立高校入試の受験(入学考査)料 2,200円
	私立高校の受験(入学考査)料 1校あたり 約2万5,000円
大 学	センター試験検定料 1万8,000円
	国公立大学検定料(2次試験/前期) 1万7,000円
	国公立大学検定料(2次試験/後期) 1万7,000円
	私立大学の受験(入学考査)料 1校あたり 約3万5,000円+願書代

유치원 3세부터 대학교육까지의 총 교육비용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사립·공립의 경우에 따라 학비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각각의 사례별로 교육비용을 계산하면 다음 <표-20>과 같다.

<표-20> 교육비 총액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진로					학습비 총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	대학	
【케이스 1】 고등학교까지 모두 공립	공립	공립	공립	공립	국공립	10,919,541엔
	753,972엔	2,004,804엔	1,415,256엔	1,561,509엔	사립·문과	12,442,541엔
	고등학교까지의 학습비 5,735,541엔				사립·이과	14,015,541엔
【케이스 2】 유치원만 사립	사립	공립	공립	공립	국공립	11,780,787엔
	1,615,218엔	2,004,804엔	1,415,256엔	1,561,509엔	사립·문과	13,303,787엔
	고등학교까지의 학습비 6,596,787엔				사립·이과	14,876,787엔
【케이스 3】 고등학교만 사립	공립	공립	공립	사립	국공립	12,493,734엔
	753,972엔	2,004,804엔	1,415,256엔	3,135,702엔	사립·문과	14,016,734엔
	고등학교까지의 학습비 7,309,734엔				사립·이과	15,589,734엔
【케이스 4】 유치원과 고등학교가 사립	사립	공립	공립	사립	국공립	13,354,980엔
	1,615,218엔	2,004,804엔	1,415,256엔	3,135,702엔	사립·문과	14,877,980엔
	고등학교까지의 학습비 8,170,980엔				사립·이과	16,450,980엔
【케이스 5】 초등학교만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사립	국공립	15,747,897엔
	1,615,218엔	2,004,804엔	3,808,173엔	3,135,702엔	사립·문과	17,270,897엔
	고등학교까지의 학습비 10,563,897엔				사립·이과	18,843,897엔
【케이스 6】 고등학교까지 모두 사립	사립	사립	사립	사립	국공립	21,982,197엔
	1,615,218엔	8,239,104엔	3,808,173엔	3,135,702엔	사립·문과	23,505,197엔
	고등학교까지의 학습비 16,798,197엔				사립·이과	25,078,197엔

文部科学省「平成18年度子どもの学習費調査」/ 国民生活金融公庫「平成19年教育費負担の実態調査」より

2) 표준생계비

평성 18년 4월에 발표된 일본의 총무성 통계 중 기후시(岐阜市)의 표준생활비는 다음 <표-21> 및 <표-22>과 같다.⁵⁷⁾ 이 중 잡비1은 보건의료, 교통·통신, 교육, 교양오락과 관련된 항목을, 잡비2는 기타의 소비지출(교제비 등과 제잡비)을 말한다.

57) <http://www.pref.gifu.lg.jp/pref/s13201/kankoku/h18sanko-3.pdf> 참조. 한편 동경의 경우에는 4인 가족의 경우 식료비 65,060, 주거관계비 58,300, 피복비 14,030, 잡비1 95,890, 잡비 2 34,140 등 총 267,420엔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약 1인의 경우 3만엔부터 5인의 경우 8만엔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1> 전 세대의 표준생계비

단위 : 엔

	1인	2인	3인	4인	5인
식료비	24,620	33,950	44,900	55,850	66,810
주거생활비	21,070	34,440	33,560	32,680	31,800
피복비	4,520	6,260	8,110	9,960	11,820
잡비1	22,240	38,460	53,160	67,850	82,550
잡비2	10,620	30,130	31,670	33,210	34,750
계	83,070	143,240	171,400	199,550	227,730

<표-22> 근로자 세대의 표준생계비

단위 : 엔

	1인	2인	3인	4인	5인
식료비	23,400	32,270	42,680	53,080	63,500
주거생활비	22,640	37,010	36,070	35,120	34,170
피복비	4,780	6,610	8,570	10,530	12,480
잡비1	25,750	44,530	61,540	78,560	95,570
잡비2	14,920	42,350	44,510	46,680	48,840
계	91,490	162,770	193,370	223,970	254,560

3) 세제지원 효과의 분석

4인 가족(근로자)의 경우 223,970×12월로 계산하면, 총 2,687,640엔으로 계산된다.

세법상 공제가능한 한도액만을 비교하는 경우, 교육비공제의 성격을 갖는 자녀보육비 공제는 자녀 1인당 38만엔, 특정부양공제의 경우 63만엔이므로 자녀 2명인 경우 최대 126만엔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의 경우도 최대 200만엔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즉 이론상은 소득을 넘는 최대 326만엔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2. 우리나라

1) 교육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은 다음 <표-23>와 같다.

<표-23>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구 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1) (만원, %)				
	2007년	2008년	증감률	2009년	증감률	2007년	2008년	증감률	2009년	증감률
전 체	22.2	23.3	5.0	24.2	3.9	28.8	31.0	7.6	32.3	4.2
초등학교	22.7	24.2	6.6	24.5	1.2	25.6	27.6	7.8	28.1	1.8
중학교	23.4	24.1	3.0	26.0	7.9	31.4	33.2	5.7	35.0	5.4
고등학교	19.7	20.6	4.6	21.7	5.3	35.9	38.6	7.5	40.4	4.7
일반고	24.0	24.9	3.7	26.9	8.0	38.8	41.1	5.9	42.8	4.1
전문고	6.7	6.9	3.0	6.0	-13.0	19.8	22.7	14.6	22.9	0.9

사교육의 참여율은 대체로 70%선이었다.

<표-24>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별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구 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사교육 참여율 (%, %p)		
	2008년	2009년	증감률	2008년	2009년	증감차
외 별 이	23.4	24.6	5.1	74.8	74.8	0.0
아 버 지	25.2	26.6	5.6	78.6	78.7	0.1
어 머 니	12.4	12.2	-1.6	51.8	51.1	-0.7
맞 별 이	23.8	24.5	2.9	76.9	76.7	-0.2
경제활동 안함	7.8	8.4	7.7	36.7	40.1	3.4

공교육과 사교육 관련 비용을 종합한 통계자료는 다음 <표-25>과 같다.

<표-25> 2009년 연간 교육비 (공/사교육비) 지출 현황

		공교육비		사교육비	
		국공립	사립		
초등학교		0	0	3,372,000	
중학교		249,600	249,600	4,200,000	
고등학교		1,800,900	1,800,900	4,848,000	
대학교*		대학등록금		대학입학금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계열	전문대학	6,537,200	8,709,900	436,000	1,000,000
	교육대학	3,242,000	-	179,000	-
	인문/사회계열	9,764,100	7,840,300	423,000	1,572,000
	자연계열	8,025,300	9,360,800	423,000	1,034,200
	공학계열	11,803,800	9,679,700	423,000	1,572,000
	예체능계열	9,696,800	11,158,000	423,000	1,029,000
	의학계열	9,991,600	12,208,000	178,000	935,000

공교육비, 대학 등록금 "2009각급학교 납입금 징수액현황 (1인당 연액)" - 교육통계연보
초/중/고 사교육비 "2009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통계청 2009. 2

* 대학등록금 및 입학금은 계열별 최고금액을 표시

2) 표준생계비

2009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2006년에 개정된 '표준생계비 모형'에 의거하여,⁵⁸⁾ 2008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 12개 광역시도 20개 지역의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물가조사를 거쳐 산출된 것으로서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58) 2006년도 모형은 2005년도에 실시한 '표준생계비 산출을 위한 조합원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10개 비목을 가구규모별로 구성한 이론생계비로서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생활실태를 반영한 것이다.

<표-26> 2009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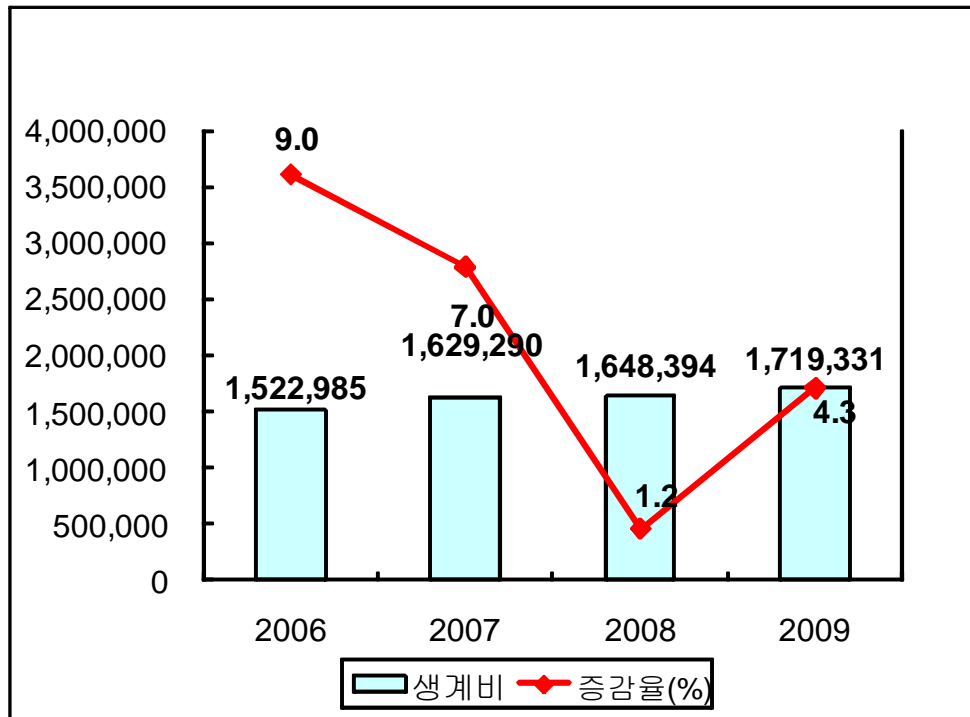
구분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I	4인가구 II	4인가구 III
식료품	326,481	287,919	308,169	670,159	817,420	1,081,985	1,142,699	1,178,470
주거비	348,160	348,160	348,160	444,848	506,331	724,491	724,491	724,491
광열수도비	79,699	79,699	79,699	93,711	109,028	133,966	133,966	133,966
가구가사 용품비	75,249	77,208	76,229	125,261	135,121	151,387	151,844	152,300
피복신발비	74,639	92,268	83,454	162,500	188,623	221,099	234,158	244,890
보건위생비	79,424	110,036	94,730	167,744	212,650	276,819	261,794	261,794
교육비	74,327	74,327	74,327	74,327	327,078	468,231	486,384	737,475
교통통신비	170,656	170,656	170,656	494,965	532,379	628,261	664,141	700,021
교양오락잡 비	346,199	311,324	328,762	367,413	411,813	420,599	420,599	420,599
제세공과금	157,391	153,731	155,145	299,171	403,561	587,377	616,407	696,634
합계	1,732,225	1,705,328	1,719,331	2,900,099	3,644,004	4,694,215	4,836,483	5,250,640

이에 의하면 2009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4인 가구 I 이 4,694,215원으로 조사된 데 비하여 전 노동자 임금평균은 2008년 3/4분기 기준 월평균 2,632,534원(차액 2,061,681원)으로 나타나 생계비에 비하여 현실 임금이 56.1%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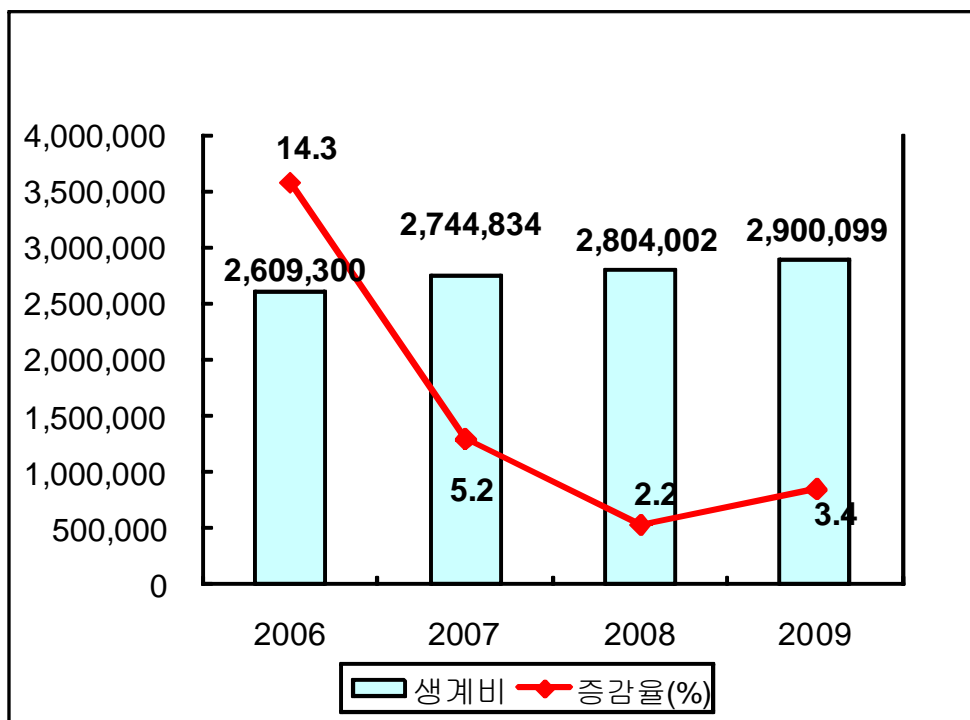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인가구 I 의 경우, 전체 표준생계비는 4,694,215원이며, 이 가운데 교육·의료·주거비가 차지하는 표준생계비는 1,469,541원으로서 31.3%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생계비 10개 비목 중 주거·의료·교육비가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의료·교육비에 대한 사회 공공정책으로서의 국가적 책임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판단된다. 가계의 생계가 개별 노동자의 월급여로만 충당되어야 하는 현실이므로 한국노총의 표준생계비가 임금인상의 준거자료로 제시될 수밖에 없으며, 더불어 이런 주거·의료·교육비에 대한 비중은 노사간 임금협상시 인상요인으로 나타나게 되어 기업은 가격경쟁의 부담에 직면하게 되며, 노동자는 임금인상으로 생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가계부담이 가중되어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의료·교육비는 1개 기업차원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공공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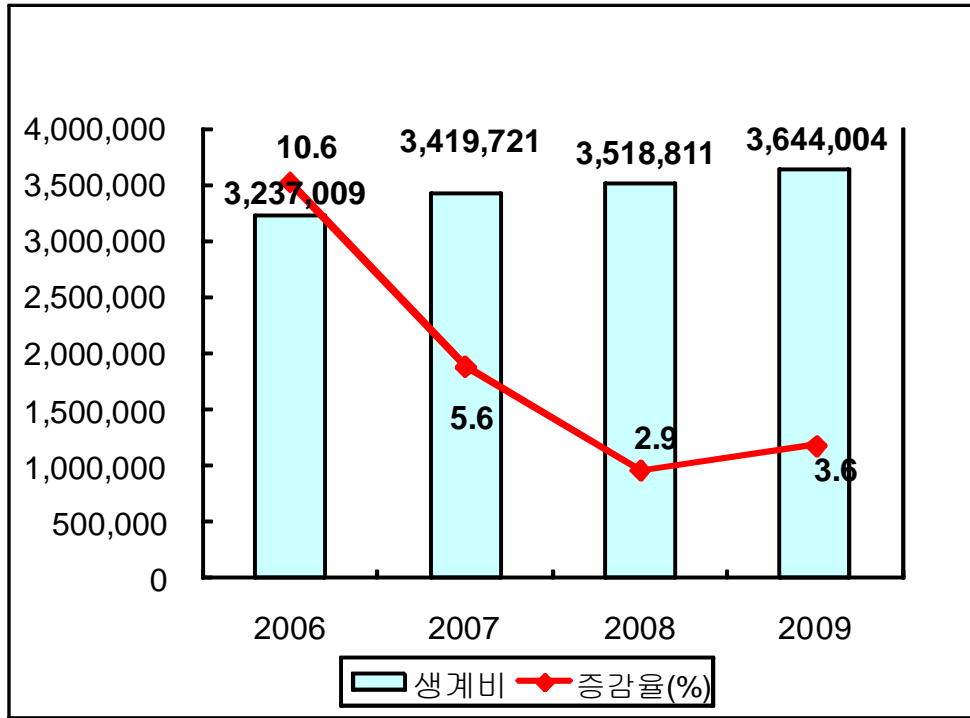
<표-27> 단신가구 생계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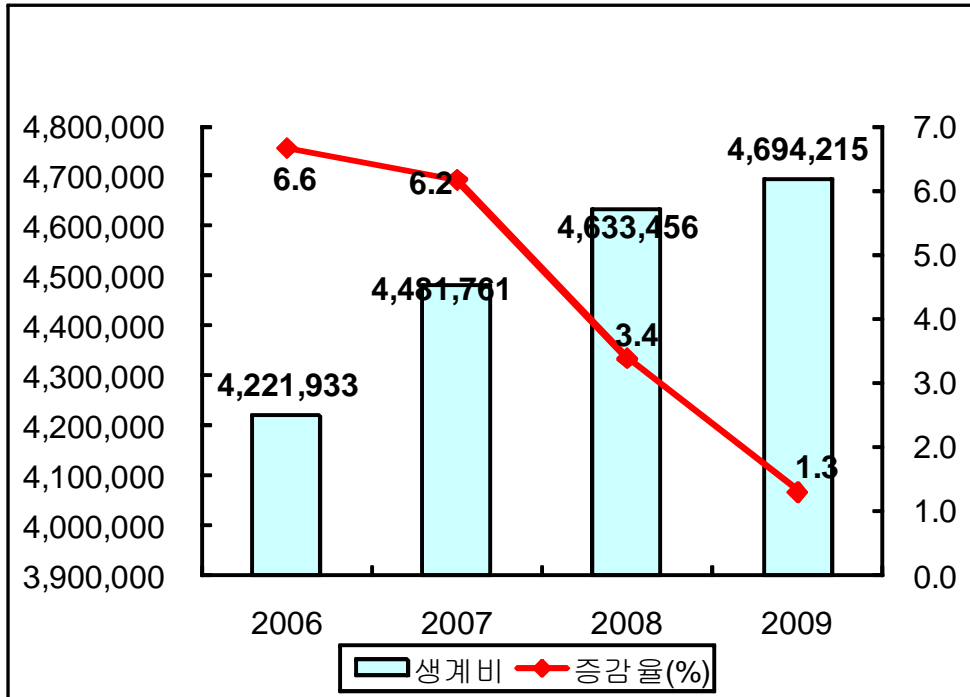
<표-28> 2인가구 생계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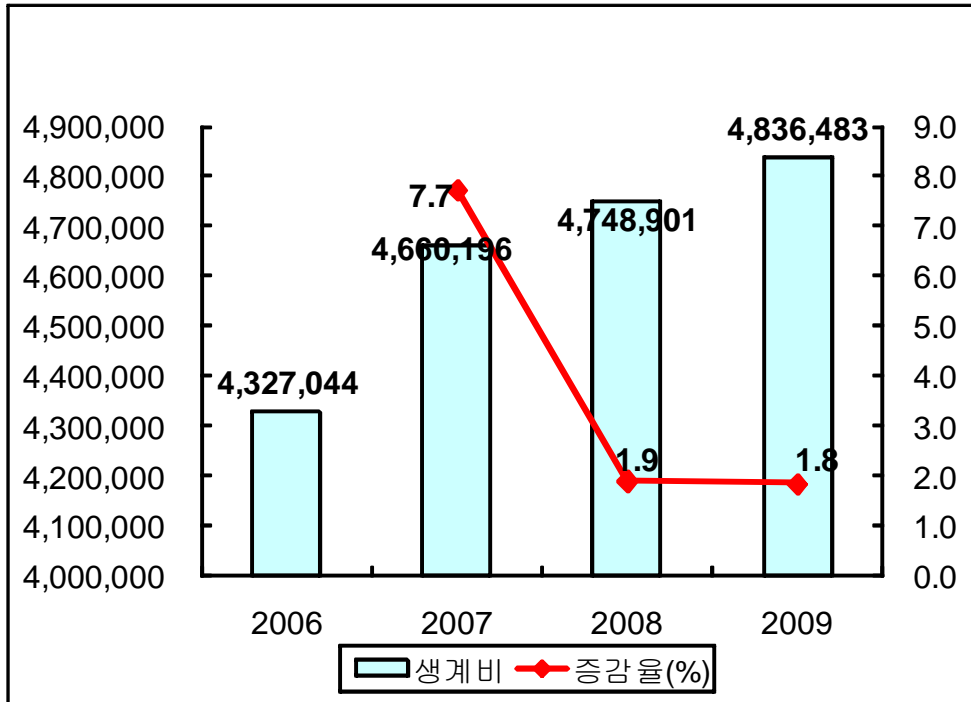
<표-29> 3인가구 생계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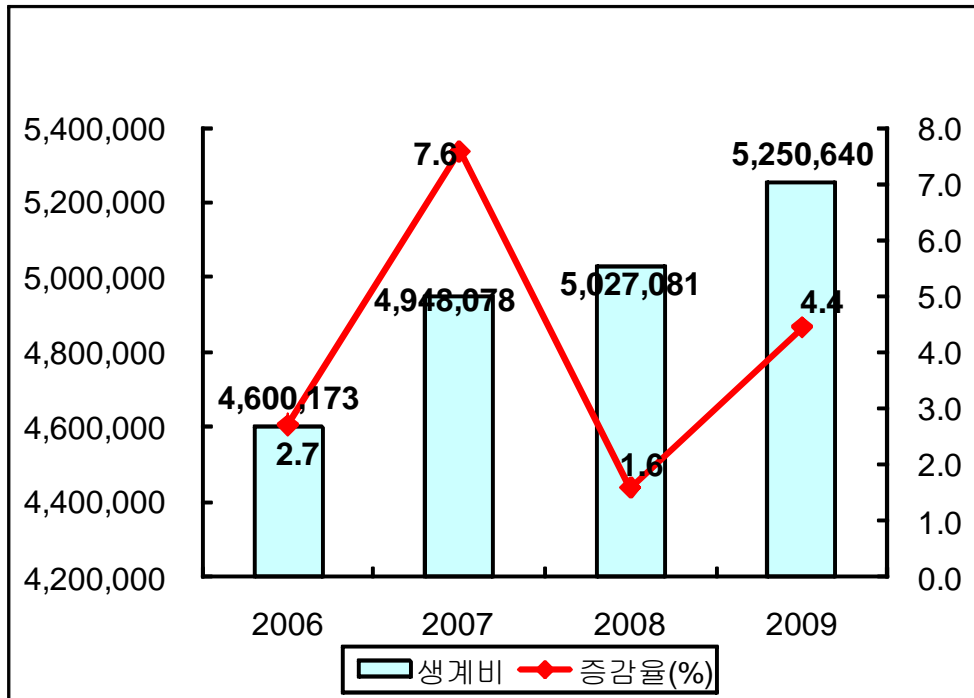
<표-30> 4인가구 I 생계비 추이



<표-31> 4인가구Ⅱ 생계비 추이



<표-32> 4인가구Ⅲ 생계비 추이



<표-33> 주거·의료·교육비와 다른 생계비 비목(7개)과의 가구별 표준생계비 비교

구 분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I	4인가구 II	4인가구 III
주거의료 교육 소계	501,911 (29.0%)	532,523 (31.2%)	517,217 (30.1%)	689,919 (23.7%)	1,046,059 (28.7%)	1,469,541 (31.3%)	1,472,669 (30.4%)	1,723,760 (32.8%)
주거의료 교육제외 소계	1,228,314 (70.9%)	1,172,805 (68.8%)	1,202,114 (69.9%)	2,213,180 (76.3%)	2,597,945 (71.3%)	3,224,674 (68.7%)	3,363,814 (69.6%)	3,526,880 (67.2%)
합계	1,732,225	1,705,328	1,719,331	2,900,099	3,644,004	4,694,215	4,836,483	5,250,640

<표-34> 주거·의료·교육비를 구분한 한국노총 가구별 표준생계비

구 분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I	4인가구 II	4인가구 III
주거비	348,160	348,160	348,160	444,848	506,331	724,491	724,491	724,491
보건위생비	79,424	110,036	94,730	167,744	212,650	276,819	261,794	261,794
교육비	74,327	74,327	74,327	74,327	327,078	468,231	486,384	737,475
주거의료 교육소계	501,911 (29.0%)	532,523 (31.2%)	517,217 (30.1%)	686,919 (23.7%)	1,046,059 (28.7%)	1,469,541 (31.3%)	1,472,669 (30.4%)	1,723,760 (32.8%)
식료품	324,481	287,919	308,169	670,159	817,420	1,081,985	1,142,699	1,178,470
광열수도비	79,699	79,699	79,699	93,711	109,028	133,966	133,966	133,966
가구가사용품비	75,249	77,208	76,229	125,261	135,121	151,387	151,844	152,300
피복신발비	74,639	92,268	83,454	162,500	188,623	221,099	234,158	244,890
교통통신비	170,656	170,656	170,656	494,965	532,379	628,261	664,141	700,021
교양오락잡비	346,199	311,324	328,762	367,413	411,813	420,599	420,599	420,599
제세공과금	157,391	153,731	155,145	299,171	403,561	587,377	616,407	696,634
합계	1,732,225	1,705,328	1,719,331	2,900,099	3,644,004	4,694,215	4,836,483	5,250,640

3) 표준생계비 자료를 이용한 소득공제의 과세소득 절감 효과

이하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발표한 “2009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이하 “표준생계비”)” 자료에서 상정한 4인 가구의 가구모형에서 역시 동(同)자료에서 계산한 표준생계비에 근접하는 연간 5,000만원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기준)을 얻었을 경우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부녀자공제, 교육비 공제 및 의료비 공제를 각각 얼마나 적용받아서 가구 단위의 과세소득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⁵⁹⁾.

59) 자녀양육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자녀양육공제이지만 동(同)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라야 하는데 <표-35>의 분석대상 가구모형들은 이에

우선 표준생계비 자료에서 상정한 3가지 유형의 4인 가구의 가구모형은 <표-35>와 같다⁶⁰⁾.

<표-35> 표준생계비 자료에서 상정한 4인 가구의 가구모형

구분	4인 가구 I	4인 가구 II	4인 가구 III
가구구성	가家主 (40세)	가家主 (43세)	가家主 (46세)
	배우자 (37세)	배우자 (40세)	배우자 (43세)
	자녀1 ⁶¹⁾ (11세·초등학생)	자녀1 (14세·중학생)	자녀1 (17세·고등학생)
	자녀2 (9세·초등학생)	자녀2 (12세·초등학생)	자녀2 (15세·중학생)

다음으로 표준생계비 자료에서 제시한 가구별 표준생계비 자료는 <표-36>과 같다.

<표-36> 가구별 표준생계비 자료

구분	4인 가구 I	4인 가구 II	4인 가구 III
주거비	724,491	724,491	724,491
보건위생비	276,819	261,794	261,794
교육비	468,231	486,384	737,475
주거의료교육소계	1,001,314 (31.3%)	986,289 (30.4%)	986,289 (32.8%)
식료품	1,081,985	1,142,699	1,178,470
광열수도비	133,966	133,966	133,966
가구가사용품비	151,387	151,844	152,300
피복신발비	221,099	234,158	244,890
교통통신비	628,261	664,141	700,021
교양오락잡비	420,599	420,599	420,599
제세공과금	587,377	616,407	696,634
합계	4,694,215	4,836,483	5,250,640

표준생계비 자료에서는 <표-35>의 가구모형이 맞벌이 가구인지 여부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데 이하에서는 이들이 맞벌이 가구인지의 여부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단, 이들이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남성 가구주가 근로소득자인 것으로 가정하고,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가 각각 80%(연간 4,000만원의 근로소득)과 20%(연간 1,000만원의 근로소득)의 근로소득을 얻는 것으로 가정하였다⁶²⁾. 따라서 이하의 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60) 표준생계비 자료에서는 <표-35> 외에도 단신 가구(성인 1인), 2인 가구(성인 남녀) 및 3인 가구(가家主(35세)·배우자(32세)·유치원생 자녀(5세))를 가구모형으로 상정하였다.

61) 자녀1과 자녀2의 성별은 각각 男과 女이다.

62) 후자의 가정은 표준생계비 자료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통계청의 2007년도 3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조사에서

석에서는 <표-37>과 같이 6가지의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따라 부녀자공제, 교육비 공제 및 의료비 공제를 각각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37> 분석을 위한 경우의 구분

구분	4인 가구 I	4인 가구 II	4인 가구 III
남성 가구주가 연간 5,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경우I	경우II	경우III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가 각각 연간 4,000만원·1,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경우IV	경우V	경우VI

분석대상 소득공제 항목들 중에서 교육비 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하는데 이하의 분석에서 이용하기 위해 표준생계비 자료에서 인용한 가구규모별 교육비 지출액은 <표-38>과 같다.

<표-38> 가구규모별 교육비 지출액

구분	4인 가구 I	4인 가구 II	4인 가구 III
공교육비	0	267,072	2,173,008
사교육비	일반사교육비	579,648	918,768*
	과외활동비	4,147,200	4,866,000
	성인교육비	891,924	891,924
	소계	5,618,772	6,676,692
합계	5,618,772	5,836,608	8,849,700

* 교과서비 101,376원 포함

<표-38>의 교육비 지출액 중에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은 공교육비이기 때문에 공교육비 지출액만을 분석에 이용했는데,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의 한도액이 연간 300만원이기 때문에 공교육비 지출액 전액을 교육비 공제액으로 계산하였다⁶³⁾. 단, 고등학생 자녀가 1명 포함된 4인 가구 III의 경우에는 일반사교육비에 교육비 지출액에 해당하는 교과서비 101,376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同)금액을 포함한 2,274,384원(=2,173,008원+101,376원)을 교육비 공제액으로 계산하였다.

근로소득의 79.9%가 가구주의 소득이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6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명의 자녀를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 중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더라도 교육비 공제액의 차이는 없다(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크고 그 결과 한계세율도 높은 남성 가구주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 350만원(1,000만원(총급여)-700만원(근로소득공제, 500만원×80%+ 500만원×50%))에서 부녀자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자녀의 공제대상 교육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두 명의 자녀는 모두 남성 가구주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였다.

다음으로 이하의 분석에서 이용하기 위해 표준생계비 자료에서 인용한 가구규모별 의료비 지출액은 4인 가구의 유형에 관계없이 <표-39>와 같이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다.

<표-39> 4인 가구의 의료비 지출액

진료비	의약품비	안경	계
755,664	393,756	41,928	1,191,348

<표-39>에서 제시된 개별 의료비 항목들은 전액 공제가능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상 구분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4인 가구의 구성원 중에서 누구를 위해 지출되었는지의 구분이 중요한데 이것은 표준생계비 자료에서 제시한 다른 비율을⁶⁴⁾ 이용하여 전체 의료비 중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가 각각 40%를 지출하고 두 명의 자녀가 각각 10%씩 지출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표-37>의 경우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부녀자공제, 교육비 공제 및 의료비 공제를 각각 계산하면 <표-40>과 같다.

<표-40> 각각의 경우별 소득공제액의 비교

구분	경우Ⅰ	경우Ⅱ	경우Ⅲ	경우Ⅳ	경우Ⅴ	경우Ⅵ
	외벌이	외벌이	외벌이	맞벌이	맞벌이	맞벌이
	4인가구	4인가구Ⅱ	4인가구Ⅲ	4인가구	4인가구Ⅱ	4인가구Ⅲ
부녀자공제	0	0	0	500,000	500,000	500,000
교육비공제	0	267,072	2,274,384	0	267,072	2,274,384
의료비공제	0	0	0	0	0	0
소득공제 합계	0	267,072	2,274,384	500,000	767,072	2,774,384

<표-40>에서 부녀자공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즉, 경우Ⅳ, 경우Ⅴ 및 경우Ⅵ) 여성 배우자가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500,000만원을 적용하였고, 교육비공제는 <표-38>의 계산결과를 이용하였다.

의료비공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명의 자녀를 각각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즉, 두 명을 모두 남성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방법, 두 명을 모두 여성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방법 및 한 명

64) 표준생계비 자료에 의하면 2인 가구의 월평균 의약품비는 28,352원으로 4인 가구의 월평균 의약품비 32,813원의 86.4%로 제시되어 있다. 진료비와 안경 구입비에 대해서는 동(同)비율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하의 분석에서는 위 비율과 가까운 80%를 이용한 것이다.

씩 나누어서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방법) 중에서 의료비공제액을 가장 크게 하는 두 명을 모두 여성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방법을 채택했지만 공제가능한 의료비는 어느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았다⁶⁵⁾.

<표-40>의 결과와 같이 표준생계비 자료를 이용하여 4인 가구가 표준생계비에 근접하는 연간 5,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얻을 경우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부녀자공제, 교육비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얼마나 적용받아서 가구단위의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는 지 계산하면 동(同)과세소득을 전혀 줄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최대 270만원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지출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소득을 최대한 줄이더라도 그 절감액이 월평균 231,199원($=2,774,384\text{원} \div 12\text{월}$)에 불과하여 <표-36>의 자료와 비교하면 월평균 보건위생비나 피복신발비 수준에 그칠 정도로 낮은 근로소득의 5.5%($2,774,384\text{원} \div 5,000\text{만원}$)의 수준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6>의 표준생계비 자료와 다르게 통계청의 2010년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남성 가구주가 근로소득자인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을 계산하면 대략 3,000만원과 5,000만원인데⁶⁶⁾ 이들 각각의 경우에 <표-35>의 4인 가구 I, 4인 가구 II 및 4인 가구 III의 가구구성을 적용해서 <표-40>과 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 부녀자공제, 교육비 공제 및 의료비 공제를 각각 계산하면 <표-41>과 같다⁶⁷⁾⁶⁸⁾.

<표-41> 표준생계비 자료 대신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계산한 각각의 경우별
소득공제액의 비교

구분	경우I	경우II	경우III	경우IV	경우V	경우VI
	외벌이	외벌이	외벌이	맞벌이	맞벌이	맞벌이
	4인가구	4인가구	4인가구III	4인가구	4인가구II	4인가구III
부녀자공제	0	0	0	500,000	500,000	500,000
교육비공제	0	160,243	1,364,630	0	267,072	2,274,384
의료비공제	0	0	0	0	0	0
소득공제 합계	0	160,243	1,364,630	500,000	767,072	2,774,384

65)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성 가구주의 의료비 공제액은 항상 0원이었다. 즉, 일반의료비 및 본인 등 의료비의 합계액이 항상 총급여액의 3%인 120만원보다 작았기 때문에 의료비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었다. 또한, 여성 배우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350만원(1,000만원(총급여)-700만원(근로소득공제, 500만원 \times 80%+500만원 \times 50%))에서 본인분 기본공제 150만원과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차감한 후 다시 자녀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다시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이미 150만원의 자녀분 기본공제가 추가로 발생하여 종합소득금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료비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다.

66) 즉, 통계청의 2010년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남성 근로자의 전직종 평균 월급여총액은 2,252,490원이기 때문에 남성 가구주가 근로소득자인 외벌이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은 대략 3,000만원($\div 2,252,490\text{원} \times 12\text{월}$)이다. 또한, 동(同)조사에 의하면 여성 근로자의 전직종 평균 월급여총액은 1,681,358원이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은 대략 5,000만원($\div (2,252,490\text{원} + 1,681,358\text{원}) \times 12\text{월}$)이다.

67) 단, <표-41>의 계산을 위해서 연간 근로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표-38>의 교육비 지출액과 <표-39>의 의료비 지출액도 60%(3,000만원 \div 5,000만원)를 적용하였다.

68) 표준생계비 자료를 이용한 위 분석에서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각각 4,000만원과 1,000만원인 것으로 가정했지만, <표-41>의 분석에서는 동(同)금액을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5,000만원-3,000만원)으로 가정하였다.

<표-41>의 결과도 외벌이 가구의 교육비 공제금액이 다소 감소하는 것을 제외하면 <표-40>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지출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소득을 최대한 줄이더라도 그 수준은 역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⁶⁹⁾.

4) 일본 자료를 활용한 효과 분석

추가적으로 앞서 소개한 일본측 자료에 <표-40>의 분석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와 소득공제의 효과를 비교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일본측 가구모형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표-35>의 가구모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표-42>와 같이 연간 270만엔($\div 223,970 \times 12$ 월)의 근로소득을 얻었을 경우 앞서 소개한 자녀보육비 및 의료비 공제가 가구 단위의 과세소득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분석하면 <표-43>과 같다⁷⁰⁾.

<표-43> 일본측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각각의 경우별 소득공제액의 비교

구분	경우	경우II	경우III	경우IV	경우V	경우VI
	외벌이	외벌이	외벌이	맞벌이	맞벌이	맞벌이
	4인가구I	4인가구II	4인가구III	4인가구I	4인가구II	4인가구III
보육비공제	760,000	760,000	1,010,000	760,000	760,000	1,010,000
의료비공제	0	0	0	0	0	0
소득공제 합계	760,000	760,000	1,010,000	760,000	760,000	1,010,000

<표-43>의 결과와 같이 구체적인 자료의 미비로 인해 비록 다양한 추정이 개입되었지만 일본측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할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비교적 큰 금액의 보육비공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소득을 최대 37.4%(101만엔 \div 270만엔)까지 줄일 수

69) 추가적으로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수준인 1,700만원($\div 1,363,091$ 원 $\times 12$ 월)의 연간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를 가정한 결과는 <표-42>와 같다(단,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맞벌이를 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남성 가구주가 근로소득자인 외벌이 가구를 가정하였다.).

<표-42> 표준생계비 자료 대신 최저생계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각각의 경우별 소득공제액의 비교

구분	경우I	경우II	경우III
	외벌이	외벌이	외벌이
	4인가구I	4인가구II	4인가구III
부녀자공제	0	0	0
교육비공제	0	90,804	773,290
의료비공제	0	0	0
소득공제 합계	0	90,804	773,290

<표-42>의 결과도 역시 소득공제를 통한 과세소득의 감소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70) 분석을 위한 그 밖의 가정은 <표-40>에서 적용한 것들과 동일하다.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표-43>의 결과만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소득공제의 효과를 비교해서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효과가 현저하게 낮은 점은 이후의 조세제도의 개편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5장 개선방안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공제의 방식으로 추가공제인 자녀양육공제 및 부녀자공제와 특별공제인 교육비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세제지원 및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규정이 있다. 이러한 현행 세제는 그 지원의 실효성이 적다, 자영업 여성근로자를 배제하고 있다, 맞벌이가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먼저 미국과 일본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경우 9세 이하 또는 24세 이하의 풀타임학생인 자녀에 대해서는 2008년 현재 1인당 3,500달러의 인적공제를 인정하며 이 외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조세지원항목으로 자녀보육비, 교육비, 의료비, EITC 제도 등이 인정된다. 미국의 제도와 우리가 확연히 다른 점은 보육비와 관련된 비용이 “세액공제” 항목이라는 점이다.

일본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인적공제의 기본구조를 개정하고 아동에 대한 부양공제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거나 확대하려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개산경비공제, 의료비나 보험료공제와 같은 개인적 지출에 관한 공제, 기초공제와 부양공제와 같은 인적공제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초공제는 납세의무자 본인에 대한 것이라는 점, 교육비공제항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우리의 공제제도와 구별된다.

또한 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의 분석을 위해 우리와 법제가 유사한 일본의 자료를 가지고 비교·분석을 하였다. 소득공제효과의 비교분석을 한 결과 공제의 절대적 크기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의 경우 최대 326만엔까지의 공제가 이론상 가능했으며 현재 환율을 100엔당 1,200원으로 하는 경우 3,912만원으로 계산되었다. 우리의 경우에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추가공제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50만원, 교육비 공제한도액 1,800만원, 의료비 공제한도액 700만원 등 총 2,750만원이었다. 또한 우리의 양육비 수준에 대한 소득공제효과의 분석 결과 그 절감액이 월 평균 231,199원에 불과하여 월 평균 보건위생비나 피복신발비 수준에 그칠 정도로 낮아 근로소득의 5.5%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입법례와 소득공제효과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출산 후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양육비에 대한 조세 지원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에 대한 지원액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자녀 양육과 관련된 공제 혜택을 미국의 관련 세액공제와 비교하면 <표-44>와 같다.

<표-44> 자녀양육비 관련 공제의 한미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자녀양육비 공제	미취학 아동 교육비공제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돌봄비용세액공제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대상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보육시설·학원에 실제 지급한 등록금 등	17세 미만의 형제자매 및 직계비속	실제 지출한 탁아비용·보모비용
금액	1인당 소득공제 100만원	1인당 300만원 이내의 실비 소득공제	1인당 세액공제 \$1,000	1인당 \$3,000 이내의 실비 세액공제

<표-44>를 보면 우리나라는 자녀양육비 관련 공제가 모두 소득공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로 규정된 미국에 비하여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자녀양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 그 지원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미국식의 세액공제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예컨대 교육비에 있어서도 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 또는 학원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그 성격이 탁아비용이므로, 홀벌이부부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현행대로 두고 맞벌이부부와 독신세대주에 한하여 일반적인 교육비공제와 분리하여 돌봄비용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미국과 같은 세액공제의 도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표-44>의 현행 자녀양육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비 공제의 경우 자녀의 취학 이후에는 사교육 비용이 공제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데 공교육 비용에 비해 사교육 비용의 금액이 훨씬 크고 자녀의 하교 이후 낮 시간 동안에는 사교육 기관들이 사실상 양육기능을 분담하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방과 후에 지출하는 사교육 비용을 교육비 공제의 대상에 일부라도 포함시키는 것이 여성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종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편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여 각 개인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소득세법 1조①). 현행의 개인단위주의에 대하여 오정진·문미경(2002)과 김완석·

이전오(2005)의 연구에서는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2분2승제)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개인단위과세가 부부 중 제2소득자의 근로참여에 대해서는 조세중립성이 높지만, 가족의 총소득이 동일한 경우에도 부부간에 소득 분할이 다름에 따라 가족의 총 소득세가 달라지므로 수평적 공평성이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Jaumotte 2003). 따라서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더라도 맞벌이부부와 홀벌이부부 간의 조세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남성 배우자의 소득에 비해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을 얻거나 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낮은 여성 기혼근로자의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나 종합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현행 개인단위 과세제도 하에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는 기혼부부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개인단위 과세제도와 부부단위 합산 후 분할 과세제도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⁷¹⁾ 특히, 후자의 과세제도를 채택할 경우 여성 기혼근로자가 얻는 추가적인 소득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단위 과세제도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⁷²⁾

3) 산전후휴가 실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현행 산전후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급여도 비교적 큰 편이지만 사업주가 동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근거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이를 사업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 여성근로자와 사업자 간에 이해관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해서는 기업의 관련 비용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산전후휴가 실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71) 미국세법에서도 개인소득세의 신고방법은 독신자(single), 합산신고 기혼자(married filing jointly) 및 개별신고 기혼자(married filing separately)로 구분하고 있다.

72) 미국의 경우에도 <표-45>와 같이 합산신고하는 기혼자(부부단위 과세제도)에 대하여 개별신고하는 기혼자(개인단위 과세제도)에 비해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표-45> 부부의 소득에 대한 미국세법상 적용세율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

<부부단위 과세제도>		<개인단위 과세제도>	
과세소득	세율	과세소득	세율
-\$36,900	15%	-\$18,450	15%
\$36,900-\$89,150	28%	\$18,450-\$44,575	28%
\$89,150-\$140,000	31%	\$44,575-\$70,000	31%
\$140,000-\$250,000	36%	\$70,000-\$125,000	36%
\$250,000-	39.6%	\$125,000-	39.6%

산전후휴가급여의 일정비율, 예컨대 50% 정도의 비율에 대한 세액공제의 도입이 유사한 성격의 육아관련 급여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 급여를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공제가능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대체인력의 고용을 위해 지출한 추가적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지원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3)과 유사하게 동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해당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즉, 실질적으로는 필요경비를 중복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조세지원

홍기용·이기화(2005)의 연구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를 근로자복지비용 세액공제로 세액공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를 통한 여성의 근로참여 증가를 위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운영비 전액을 세액공제로 한다면 회사는 운영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 과도한 운영비 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공제율을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희열·정덕주(2005)의 연구에서는 직장보육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의 7/100에서 10/100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는 3%, 또는 7%가 인정되는 다른 투자의 세액공제에 비하여 투자유인이 적다는 측면에서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함께 전술한 바와 같이 직장보육시설을 위한 지출이 비교적 우선순위가 낮아서 보다 중요한 지출(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저한세로 인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에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의 매입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자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의 매입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에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토지를 임대한 후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⁷³⁾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줄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정의했지만 대부분의 아동이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동(同)정의를 “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이나 단순히 “취학전 아동”으로 개정하는 것이 현실에도 부합하고 법령해석의 불

73) 실제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 토지를 임대하여 골프장의 개발지(코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와는 반대로 임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즉 동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일치로 인한 사업자의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현행 소득세법에서 자녀양육공제의 대상을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로 규정하기⁷⁴⁾ 때문에 유사한 법령간의 개념정의를 조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5) 여성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출산 후 여성이 종전 직장으로의 복귀가 쉽지 않다면 여성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의 교육비공제는 특별공제의 한 항목이므로 근로소득자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육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이 여성사업자의 애로점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여성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역시 필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 조세지원방법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세액공제방식으로 이를 도입하는 것이다. 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 또는 학원 등록금을 일반적인 교육비공제와 분리하여 돌봄비용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그 대상을 근로소득자에서 맞벌이부부와 독신세대주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자는 주장은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을 통한 조세지원이다. 성별에 따라 사업자를 지원하고 특히 출산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소규모 창업으로 대상을 한정시켜 조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하게 조세제도를 설계함으로써 무임승차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간편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성실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성실중소기업은 일반납세방식 대신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실납세방식의 적용대상에 출산 후 소규모로 창업하는 여성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수입금액 요건)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명세를 기장해야 (투명성 요건) 하고 (단,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외부감사대상 법인이나 부동산임대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 동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표-46>의 예시와 같이 일반납세방식에 비해 훨씬 간편한 방식으로 사업활동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74)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4호

<표-46> 성실납세자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법인사업자인 경우의 예시)

	일반납세방식	성실납세방식
감가상각비 계상방법	임의상각제도	강제상각제도
감가상각범위액	감가상각방법에 따른 구분	미상각잔액×정액법 상각률
감가상각방법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	정액법
내용연수	내용연수 범위 內 신고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
즉시상각의제 대상 中 소액자산의 취득가액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	300만원 이하
대학교, 법정·특례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기부금 단계별로 한도액 적용	공익성기부금 합계액 — (수입금액×0.5%)
기부금 이월손금산입기간	1년 또는 3년	이월손금산입 배제
접대비 한도액	1,200만원(1,800만원)+(수입금액적용률)	1,900만원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MIN(①, ②) ① 총급여액×5% ② (퇴직급여추계액×30%)—세무상퇴직금 여충당금 이월잔액	MIN(①, ②) ① 총급여액×5% ② (총급여액×20%)—세무상퇴직급여충당 금 이월잔액
과다경비 등, 업무무관비용 및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부적용

출산후 여성 창업자들이 <표-46>의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소규모 사업자들이 세금부담 그 자체보다 더욱 크게 느끼는 세금신고의 어려움을 줄임으로써, 즉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이들의 사회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6) 부녀자 공제제도의 개편

부녀자공제에 대하여는 찬반의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오정진·문미경(2002)에서는 여성을 우대하는 차별적 규정이고, 독신여성과 기혼여성을 차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규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서희열·정덕주(2005)에서는 부녀자공제의 금액을 연 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증가하고 대상도 모든 직장여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있다.

그런데 부녀자공제의 성격을 살펴보면 두 가지 다른 내용이 묶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배우자는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의 애로를 고려하는 내용이다. 둘째는 맞벌이부부가 과세에서 불리해지는 측면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개편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소득자에 대한 부녀자공제는 맞벌이부부에

대한 소득공제의 성격을 띠고 있고 용어가 성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맞벌이부부공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소득자에 대한 부녀자공제를 맞벌이부부공제로 본다면, 현행의 50만원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여성세대주에 대한 부녀자공제의 경우에는 이를 ‘독신세대주공제’로 변경하여 배우자는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남성세대주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독신세대주공제의 금액은 독신세대주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행의 5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상의 대략적인 개편방안들은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들 중에서도 본인이나 남성 배우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면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데 출산후 재취업을 통해 사회적 재진출을 의도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육아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어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부녀자 공제의 적용대상 여성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부녀자 공제의 금액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게 차등화한다면 이들의 출산후 사회적 재진출을 촉진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긴급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에도 더욱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7)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조세 지원

헌법재판소는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제도가 모성보호 및 근로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당초의 취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녀양육의 지원을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 및 직장가정의 양립, 출산장려와 아동복지 제고, 남성의 가족책임 분담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가족내 양성 평등의 달성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권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육아휴직을 통해 보장하는 양육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적 성질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가 출산후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적 재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동(同)제도의 실효적인 시행을 위한 세법상의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에서 여성 근로자 본인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수당으로 규정한 것은 약간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재취업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좀 더 확실한 조세지원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여성 근로자들의 육아에 유리한 근무시간 및 형태 등의 채택과 관련한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육아의 공동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남성 배우자들이 육아책임을 분담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세법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산부인과 현장에서 첫 아기를 낳은 엄마를 대상으로 아기를 더 낳기를 권유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남편이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아 아기를 더 낳을 수 없다”는 대답이 반을 넘는데⁷⁵⁾ 이러한 사정은 출산 이후의 재취업에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기를 자신의 몸을 통하여 낳는 여성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낳는 아이에 대한 평생 양육비용, 교육비용 같은 거창한 이유보다는 가정 내에서의 육아부담을 더 무겁게 느끼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세법상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육아휴직에 관한 근거법률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성 배우자의 근무경력도 유지하면서 여성 근로자가 전적으로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무경력을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적 재진출을 위해서는 여성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무경력 중단 대신 육아를 위한 희생을 남성 배우자와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육아기간에도 여성 근로자의 근무경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경력관리나 장기적인 성취를 위해서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두 번째, 여성가족부가 일과 생활이 조화되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퍼플 잡, Purple Job)는 위와 같이 육아를 위한 희생을 부부간에 분담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근로자가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근무제도인 유연근무제도는 단시간 근로,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요일제 근무 등의 유연한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각자의 근무형태를 적절하게 조화시킴으로써 육아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여성 근로자가 매주 월·화요일에 근무하고 남성 배우자가 매주 수·목·금요일에 근무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면 여성 근로자가 별도의 육아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육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직장 내에서의 경력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유연근무제도는 아직 도입단계로 일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⁷⁶⁾ 동 제도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

75) 2010.8.18.자 조선일보 기사([기고] ‘남편 육아 휴직’ 반드시 출산을 늘린다)에서 인용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이다.)

76) 2010.6.1.자 여성부 보도자료(유연근무 시범운영 공공기관 정책간담회 개최)에 의하면 동 제도를 적용하는 근로자는 3,001명에 그치고 있다.

제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전체 직원 중에서 유연근무제도를 일정 비율 이상 시행하는 회사에 대해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이미 중소기업인 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기만 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동 제도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의 유연근무제도 선택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가고용하는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지원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과 유사하게 동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해당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도 역시 동 제도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8) 육아기간 동안의 시간제 근무 보장 및 조세지원

시간제 근로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산하고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의 지급을 고려하는 방안(현대경제연구원, 2010) 역시 개선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중 앞에서 제시한 유연근무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육아기간 동안에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네덜란드의 “1.5 생계모델”을 유사하게 도입하면서 이를 실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세지원 방안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⁷⁷⁾

구체적으로는 육아기간 동안의 시간제 근무 보장을 위한 세제상 지원이 될 것이다.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간제 근무 보장의 강제적 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제 지원을 통해 채택을 유도할 수 있는데, 채택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례 적용이나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증가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금계상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동 제도를 시행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을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보고 공익적 목적의 사회적 기업과 유사하게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⁷⁸⁾

77) 우리나라는 최대 1년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동 제도에서는 출산 전과 비교할 때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고 여성 근로자의 직장 복귀 등과 관련한 불안요소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반해 네덜란드의 “1.5 생계모델”에서는 맞벌이 가구에서 1인(대개 남성 배우자)가 주 40시간의 전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1인(대개 여성 근로자)는 주 30시간의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OECD 국가들의 육아정책 개관, 2008).

“1.5 생계모델”은 네덜란드에서 보수적인 남성부양 중심의 생계모델을 반영하면서 노동인력의 부족과 높은 보육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사회적인 일자리 나누기 효과와 함께 가정 내에서 남성은 전일제 중심의 “일”에 집중하고 여성은 시간제로 “일”과 “가족 돌봄”의 역할을 병행하는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네덜란드의 “1.5 생계모델”이 원활하게 시행되는 것은 출산휴가 및 시간제 육아휴가시에 평균 이상의 (115%)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자녀양육을 위한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도 있지만 남성 중심의 생계모형을 적절하게 제도에 반영한 점도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남성 중심의 생계모형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보편적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1.5 생계모형”을 우리나라에서 유사하게 도입할 경우에는 앞선 절에서 제시한 유연근무제도와 비슷하게 육아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여성 근로자가 근무경력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9) 맞벌이 부부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출산후 재취업 여성들의 경우에는 긴급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육아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자격에서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소득 요건(여성 근로자와 남성 배우자의 연간 종합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일 것)과 함께 무주택 요건(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할 것)이나 재산가액 요건(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을 완화시켜서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는 대다수의 여성근로자가 이를 적용받아서 연간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어 이들에 대한 간접적인 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근로장려세제의 당초 취지가 차상위계층을 노동시장에 유입시킴으로써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계층이나 이와 가까운 사회계층의 가정에서 빈곤 상태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육아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없이 먼저 “일을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대상과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일을 하는” 형편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육아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보다 정밀하게 설계할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의 마지막 요건인 부양자녀 요건에서 현재와 같이 부양자녀의 연령이 18세 미만일 것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들을 다시 육아기간(예컨대 6세 이하)과 비육아기간(예컨대 7세 이상 및 18세 이하)로 구분한 후 부양자녀가 육아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증가시키되 수급자는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육아 목적에 사용하게 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78) 사회적 기업의 경우 인증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완석, 『소득세법론』, 광교이텍스, 2009.
- _____,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 김완석 · 이전오, “여성의 결혼 · 이혼 · 상속과 세제”, 세무학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05.3.
- 김현숙, “기혼여성과 소득세 :최적조세이론 관점”, 재정포럼 제12권 제7호, 한국조세연구원, 2007.7.
- 서희열 · 정덕주, “여성의 사회활동 극대화를 위한 조세 지원 방안”, 세무학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05.6.
- 오정진 · 문미경,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본 조세제도의 분석과 평가 :소득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2003.
- 이상신, “출산장려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09.9.
- 이상신 · 박훈,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일관된 과세방식 도입방안”, 조세법연구 XII-2, 한국세법학회, 2006.
- 이욱한,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 평등권-양성평등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6권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5.
- 정규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방안”, 세무학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07.3.
- 최 광, “세법과 성평등”, 한국여성학 Vol.6, 한국여성학회, 1990.
- 홍기용 · 이기화, “여성의 자녀양육과 복지에 관한 세제개편방안”, 세무학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05.3.

2. 외국문헌

- 森信茂樹, “小子化問題と税制を考える”, 『季刊 社會保障研究』43-3号, 2007.
- 水野忠恒, 『租税法』(第2版), 有斐閣, 2005.

- Blau, D.M. and A. P. Hagy, "The demand for quality in child ca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106 Issue 1, 1998.2.
- Chevalier, A. and T.K. Viitanen, "The causality between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availability of childcare",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9 Issue 14, 2002.11.
- Gelbach, J.B, "Public schooling for young children and maternal labor suppl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2 Issue 1, 2002.3.
- Jaumotte, Florence,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 Past Trends and Main Determinants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376*, 2003.

3. 기타자료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내일신문 홈페이지(<http://www.naeil.com>)
- 미국국세청 홈페이지(<http://www.irs.gov>)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http://www.kicce.re.kr>)
- 일본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a.go.jp>)
- 조세일보 홈페이지(<http://www.joseilbo.com>)
-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http://www.hankyung.com>)
-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hri.co.kr>)
- <http://www.oecd.org/dataoecd/7/33/35304751.pdf>
- http://www.irs.gov/publications/p501/ar02.html#en_US_publink100041810
- http://www.irs.gov/publications/p502/ar02.html#en_US_publink100014757
- http://www.irs.gov/publications/p503/ar02.html#en_US_publink1000121278
- <http://www.irs.gov/publications/p596/ar01.html#d0e23>
- <http://www.irs.gov/publications/p970/ch02.html#d0e1509>
- <http://www.irs.gov/publications/p970/ch04.html#d0e4964>
- <http://www.irs.gov/publications/p970/ch07.html#d0e7909>
- http://www.irs.gov/publications/p972/ar02.html#en_US_publink100012080

토론

오 준 석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I.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출산 후 재취업까지의 양육비 지원 세제를 검토함으로써 여성 경제활동의 지원 및 권리신장 차원의 세제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있다.

본 연구는 “출산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을 사적권리의 영역에서 “사회권적 권리”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데에서 일차적인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먼저 현행세제를 정리하여 자녀양육비 지원이나 자영업자의 불평 등 문제 등을 쟁점으로 찾아낸 다음, 바람직한 세제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신선했다고 할 수 있다.

II.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및 질의

1. 자녀 양육비관련 공제

〈논문내용〉

우리나라는 자녀양육비 관련 공제가 모두 소득공제로 규정되어, 세액공제로 규정된 미국에 비해 훨씬 적다.교육비에 있어서도 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 또는 학원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그 성격이 탁아비용이므로, 홀벌이부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현행대로 두고 맞벌이 부부와 독신세대주에 한하여 일반적인 교육비 공제와 분리하여 돌봄비용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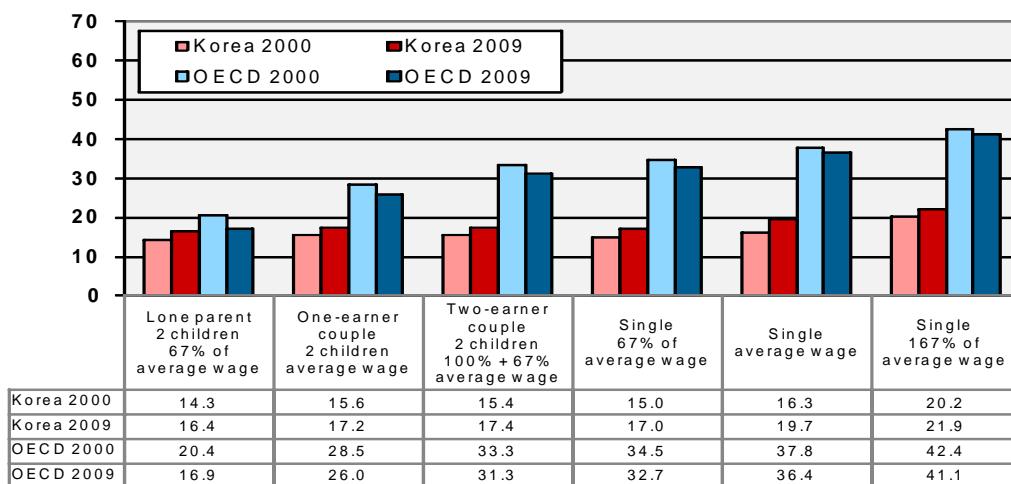
▶ 아동부양으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

(단위: %)

	소득세부담 (소득세/총급여)		b / a (%)
	독신 (a)	4인가구 (b)	
미 국	15.7	-2.9	-18.5
독 일	21.1	1.7	8.1
프랑스	15.6	8.1	51.9
일 본	7.3	3.9	53.4
한 국	3.4	1.9	55.9
캐나다	16.8	12.6	75.0
영 국	17.6	15.8	89.8
OECD평균	15.7	10.3	65.6

* 자료원 : OECD Taxing Wages, 2006

하지만,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급여를 받는 독신근로자와 자녀 2인을 부양하는 4인 가구 근로자의 총급여대비 소득세 부담이 독신근로자는 3.4%인 반면 4인가구 근로자는 1.9%로 외국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OECD 자료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를 통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충분히 경감하였기 때문에, 총 급여 중 과세소득 비중이 높아 세액공제를 통한 자녀부양가구의 세부담 경감 필요성이 많은 외국과는 정책적 상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연구자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사회인프라 구축을 통한 개선

영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입학 전 2년간 모든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아학교에서 1주일 15시간씩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자녀양육비 지원과 같은 개별적인 보조금성격의 부담

경감방안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가 양육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킴으로서 무상교육·보육사업 등을 촉진시키는 것이 정책유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해 연구자들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3. 산전후 휴가실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논문내용〉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세액공제는 여성의 취업촉진을 돕고, 산전후휴가를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세액공제율은 정부와 기업이 관련비용을 반씩 부담하는 50% 정도가 어떨까 생각한다.

현재는 정부가 기업에 따라 1인당 월 135만원까지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도록 돼있어 기업들이 여성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관련비용을 반씩 부담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세제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업체에 대한 교육과 사회권적 개념으로서의 자녀양육권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연구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4.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조세지원

〈논문내용〉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는 3%, 또는 7%가 인정되는 다른 투자의 세액공제에 비하여 투자유인이 적다는 측면에서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를 통한 여성의 근로참여 증가를 위해 위와 같은 조세 지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출산 및 육아 기간에 있는 여성근로자의 수가 매우 작은 영세기업의 경우 사업장 근처의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기업이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지역별 Hub의 구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II. 결론

자녀양육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사회가 제도를 통해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본 연구는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제정책의 혜택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좀더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사회안정망으로서 다음세대에 대한 양육인프라를 구축하여 공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병행된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출산 이후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 시켜 줄 수 있는 양육비(교육비) 지원, 다자녀 추가 공제, 보육시설 확충 및 조세 지원 등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출산을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토 론

이 은 미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